KREI

E 2026-07 | 2026. 10.

농촌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고도화 연구

성주인 · 김수린 · 권인혜 · 정도채 · 김광선 · 심재헌 · 정민주 · 민경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E 2026-07 | 2026. 10. |

농촌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고도화 연구

성주인 · 김수린 · 권인혜 · 정도채 · 김광선 · 심재헌 · 정민주 · 민경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성주인 | 선임연구위원 | 연구 총괄
김수린 | 연구위원 | 제1~6장 집필
권인혜 | 부연구위원 | 제5~6장 집필
정도채 | 연구위원 | 제5장 집필
김광선 | 연구위원 | 제5장 집필
심재헌 | 연구위원 | 제5장 집필
정민주 | 정책전문연구원 | 자료수집, 제2, 5, 6장 집필
민경찬 | 연구원 | 자료수집, 제2, 5, 6장 집필

정책연구보고 E2026-07

농촌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고도화 연구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6. 10.
발 행 인 | 한두봉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주)프리비
I S B N | 979-11-6149-860-7 95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요 약

연구 목적

○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현 정부 국정기조와 변화된 농어촌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의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관련 인식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주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와 전략체계 및 주요 추진 과제를 재구성함.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환류체계 개선, 지역사회 참여 기반 강화, 현장 수요 반영 및 AI·데이터 활용 등 삶의 질 정책 추진 기반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연구 방법

○ 농어촌을 둘러싼 인구·사회·경제·공간적 여건 변화와 제1차부터 제5차까지의 삶의 질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의 변천 과정을 검토함. 또한 기본사회, 5극3특 기반 지역균형발전, AI 전환, 주민 참여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현 정부 국정과제를 분석하고 제5차 기본계획과의 연계성과 보완 필요성을 논의함.

○ 농어촌 주민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삶의 질 영역과 주요 문제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2026년 5월 4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조사와 방문 조사를 병행하여 총 1,520명의 유효표본을 확보하고, 필수 공공·민간서비스, 소득·일자리 및 지역 활력, 주거·생활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를 분석함.

○ 국내외 관련 정책과 사업 사례를 검토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고도화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함.

연구 결과

○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필수 생활서비스 기능 약화 및 지역경제 침체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함. 한편 생활인구와 외국인 주민의 증가,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로컬 창업기업의 성장, 디지털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은 농어촌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는 변화로 확인됨.

○ 제1차부터 제4차까지의 삶의 질 기본계획은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과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제5차 기본계획도 기존 정책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기본사회, 5극3특 기반 지역균형발전, AI 전환, 주민 참여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정책 방향의 반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농어촌 주민 설문조사 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영역은 필수 공공·민간서비스 이용 여건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일자리 및 지역 활력에 대한 평가는 가장 낮았음. 주요 정책 수요로는 생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성 개선, 안정적인 소득과 지역 일자리 확보, 노후주택·빈집 정비 및 재난·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확인됨. 특히 면부 주민과 청년층이 지역의 삶의 질 여건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5차 기본계획 고도화의 정책 목표를 '농어촌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자립적 성장 기반 구축'으로 재정립함. 정책 대상은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을 중심으로 생활인구·관계인구까지 포괄하고, 이들을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 주체로 설정함.

○ 제5차 기본계획 고도화의 비전으로 '기본이 보장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농어촌'을 제시함. 추진 전략은 ① 농어촌 어디에서나 기본서비스 보장, ② 소득 기반 강화와 지역 활력 제고, ③ 쾌적하고 조화로운 정주 환경 조성으로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추진 기반으로 ① 삶의 질 정책 평가·환류체계 개선, ② 지역사회 기반 정책 추진 강화, ③ 현장 수요 기반 제도 운영, ④ AI·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을 제시함.

정책 제언

○ 첫째, 보건·복지, 교육·문화·여가, 교통·금융·디지털 및 일상생활서비스의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역의사와 일차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의료·돌봄서비스, 농어촌형 교육·돌봄 체계, 수요응답형 교통, 이동형 금융서비스 및 생활서비스 공급을 확대함.

○ 둘째,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내 경제활동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공익직불제와 농어업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계층별 일자리 확대 및 지역 기반 신산업·로컬비즈니스 활성화를 추진함.

○ 셋째, 생활인구·관계인구의 방문과 체류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고 귀농어·귀촌인과 이주민의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농촌관광, 워케이션 및 농어촌 살아보기 등 체류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지역상권과 로컬 창업에 연계하는 한편 이주자의 주거·일자리·생활 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함.

○ 넷째, 주거와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어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재생·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빈집과 노후주택 정비, 맞춤형 주거 확충, 생활권 단위 공간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난·재해 예방, 생태환경 보전 및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을 추진함.

○ 다섯째, 삶의 질 정책의 점검 결과가 관계부처의 사업 개선과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평가·환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 영향평가와 사전협의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수준과 변화 추세를 함께 점검하는 한편 평가 과정에 어촌의 공간적·생활권적 특성을 반영함.

○ 여섯째, 취약지역 컨설팅과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에 기반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주민공동체·사회연대경제 조직·기업 등의 지역문제 해결 참여를 지원하고, 분과위원회 라운드테이블과 '(가칭)농어촌 삶의 질 현장리포터'를 통해 현장의 정책 수요를 상시적으로 파악·반영함.

○ 일곱째, AI·데이터를 활용하여 삶의 질 정책의 과학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체감형 서비스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 삶의 질 현황 파악을 지원할 지도서비스를 구축하고, 삶의 질 관련 공간·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서비스 취약지역과 정책 수요를 분석함. 아울러 장보기·건강관리·교통 등 생활 밀착형 AI 서비스를 실증하는 한편 범부처 AI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함.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5
3. 연구 내용 및 방법 ····· 6

제2장 농어촌 삶의 질 여건과 정책환경의 변화

1. 농어촌 삶의 질 여건 변화 ····· 9
2. 농어촌 삶의 질 정책의 주요 변천 ····· 28
3. 기본사회 기조와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 38
4. 소결: 제5차 기본계획 고도화의 필요성 ····· 49

제3장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인식 및 정책 수요

1. 조사 개요 ····· 51
2. 분석 결과 ····· 53
3. 소결: 제5차 기본계획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 ····· 98

제4장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고도화 방향 및 전략체계

1. 제5차 기본계획 고도화 방향 ····· 105
2. 비전 및 전략체계 ····· 108

제5장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

1. 농어촌 어디에서나 기본서비스 보장 ····· 114
2. 소득 기반 강화와 지역 활력 제고 ····· 165
3. 쾌적하고 조화로운 정주 환경 조성 ····· 205

제6장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기반 고도화

1. 삶의 질 정책 평가·환류 체계 개선 ····· 238
2. 지역사회 기반 정책 추진 강화 ····· 247
3. 현장 수요 기반 제도 운영 ····· 252
4. AI·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 ····· 255

부록: 설문지 ····· 259

참고문헌 ····· 275

표 차례

제2장

〈표 2-1〉 국내 총생산(GDP) 및 농림어업분야 총생산 ····· 17
〈표 2-2〉 군 지역 외국인 근로자 수 추이 ····· 21
〈표 2-3〉 농어촌 지역 사회연대경제 조직 설립 개소 수(누적) ····· 22
〈표 2-4〉 산부인과 수 변화 ····· 24
〈표 2-5〉 도시와 농촌의 초등학교 폐교 발생 현황 ····· 25
〈표 2-6〉 역대 기본계획(1~4차) 개요 ····· 33
〈표 2-7〉 현 정부 국정과제와 기존 5차 기본계획 간 정합성 분석 결과 요약 · 48

제3장

〈표 3-1〉 응답자 일반 특성 ····· 54
〈표 3-2〉 필수 공공·민간서비스 이용 여건에 대한 인식 ····· 56
〈표 3-3〉 소득·일자리 여건 및 지역 활력에 대한 인식 ····· 57
〈표 3-4〉 집·생활환경 등 정주 여건에 대한 인식 ····· 58
〈표 3-5〉 “필수 공공·민간서비스 이용 여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1+2순위) ····· 63
〈표 3-6〉 “소득·일자리 여건 및 지역 활력”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1+2순위) ····· 64
〈표 3-7〉 “집·생활환경 등 정주 여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1+2순위) ·· 65
〈표 3-8〉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 이용 관련 주요 어려움(1+2순위) ····· 67
〈표 3-9〉 교육·문화·여가 서비스 이용 관련 주요 어려움(1+2순위) ····· 69
〈표 3-10〉 교통서비스 이용 관련 주요 어려움(1+2순위) ····· 71
〈표 3-11〉 금융·인터넷·통신(전화) 관련 주요 어려움(1+2순위) ····· 74
〈표 3-12〉 일상 서비스 이용 관련 주요 어려움(1+2순위) ····· 77

〈표 3-13〉 소득 관련 주요 어려움(1+2순위) ····· 79
〈표 3-14〉 일자리 관련 주요 어려움(1+2순위) ····· 81
〈표 3-15〉 방문·체류와 지역 활력 관련 주요 어려움(1+2순위) ····· 84
〈표 3-16〉 타 지역 주민의 이주와 정착 관련 주요 어려움(1+2순위) ····· 86
〈표 3-17〉 주거환경 관련 주요 어려움(1+2순위) ····· 89
〈표 3-18〉 마을 환경 관련 주요 어려움(1+2순위) ····· 91
〈표 3-19〉 자연환경·재해 및 생활안전 관련 주요 어려움(1+2순위) ····· 93
〈표 3-20〉 기후변화 및 대응 관련 주요 어려움(1+2순위) ····· 95

제6장

〈표 6-1〉「농어업인삶의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256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기본사회로의 재편을 위한 4개 기둥 ····· 3

제2장

〈그림 2-1〉 농어촌 인구 변화(1980~2024년) ····· 10
〈그림 2-2〉 농어촌 인구구조 변화(2000~2024년) ····· 11
〈그림 2-3〉 농어촌 고령화율 및 청년인구 비율 추이(2000~2024년) ····· 12
〈그림 2-4〉 농어촌 청년인구 추이(2000~2024년) ····· 13
〈그림 2-5〉 도시-농어촌 인구이동 변화 ····· 14
〈그림 2-6〉 전국 외국인 인구 및 비중 추이 ····· 15
〈그림 2-7〉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수 추이 ····· 16
〈그림 2-8〉 농가소득 및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 추이 ····· 18
〈그림 2-9〉 농가소득 구조 변화 추이 ····· 19
〈그림 2-10〉 총사업체 수 변화 추이 ····· 20
〈그림 2-11〉 도시·농촌 경제활동 변화 비교(2010~2024년) ····· 20
〈그림 2-12〉 상하수도 보급률 변화 ····· 23
〈그림 2-13〉 읍·면별 기초생활 서비스 시설의 임계인구 ····· 26
〈그림 2-14〉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농촌 모습 ····· 27
〈그림 2-15〉 제5차 기본계획 개요 ····· 35
〈그림 2-16〉 삶의 질 주요 영역별 만족도 추이(2019년~2025년) ····· 37
〈그림 2-17〉 새 정부의 5극3특 도시권 및 권역 공간구조 개념도 ····· 39
〈그림 2-18〉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안 ····· 42
〈그림 2-19〉 기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수정계획의 비교 ····· 44

제3장

〈그림 3-1〉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중요한 정책 영역(전체) ····· 59
〈그림 3-2〉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중요한 정책 영역(읍·면) ····· 60
〈그림 3-3〉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중요한 정책 영역(연령별) ····· 61
〈그림 3-4〉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 이용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의 가장 큰 원인 ····· 67
〈그림 3-5〉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 이용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를 위한 필요 지원 ····· 68
〈그림 3-6〉 교육·문화·여가 서비스 이용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의 가장 큰 원인 ····· 70
〈그림 3-7〉 교육·문화·여가 서비스 이용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70
〈그림 3-8〉 교통서비스 이용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의 가장 큰 원인 ····· 72
〈그림 3-9〉 교통서비스 이용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73
〈그림 3-10〉 금융·인터넷·통신(전화)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의 가장 큰 원인 ··· 75
〈그림 3-11〉 금융·인터넷·통신(전화)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76
〈그림 3-12〉 일상 서비스 이용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의 가장 큰 원인 ····· 77
〈그림 3-13〉 일상 서비스 이용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78
〈그림 3-14〉 소득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의 가장 큰 원인 ····· 80
〈그림 3-15〉 소득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80
〈그림 3-16〉 일자리·창업 등 지역경제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의 가장 큰 원인 ··· 82

〈그림 3-17〉 일자리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83
〈그림 3-18〉 방문·체류와 지역 활력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의 가장 큰 원인 ··· 85
〈그림 3-19〉 방문·체류와 지역 활력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85
〈그림 3-20〉 타 지역 주민의 이주와 정착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의 가장 큰 원인 ····· 87
〈그림 3-21〉 타 지역 주민의 이주와 정착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88
〈그림 3-22〉 주거환경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의 가장 큰 원인 ····· 90
〈그림 3-23〉 주거환경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90
〈그림 3-24〉 마을 환경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의 가장 큰 원인 ····· 92
〈그림 3-25〉 마을 환경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92
〈그림 3-26〉 자연환경·재해 및 생활안전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의 가장 큰 원인 ····· 94
〈그림 3-27〉 자연환경·재해 및 생활안전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94
〈그림 3-28〉 기후변화 대응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의 가장 큰 원인 ····· 96
〈그림 3-29〉 기후변화 대응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97

제4장

〈그림 4-1〉 제5차 기본계획의 고도화 방향 ····· 107
〈그림 4-2〉 제5차 기본계획 고도화를 위한 비전과 과제 ····· 112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025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 정부는 2004년 FTA 등 시장개방 대응 및 농어촌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동법 제5조에 근거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기본계획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복지 증진, 교육·문화 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종합계획임. 5년마다 수립되며, 매년 부처별 시행계획을 통해 이행되고 있음.

* 국무조정실(총괄) 농림축산식품부(간사),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21개 부처·청을 포함함.

□ 한편, 2025년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주요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국민의 기본적 생활 조건 보장을 정책 설계의 핵심 방향으로 강조함.

○ 기본사회는 우리 사회가 겪어온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를 극복하고, 「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지향으로 제시되고 있음.

○ 이는 기존 복지국가를 적극적이고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필요와 욕구에 기반하던 복지를 권리에 기반해 제공하고, 개인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임(이한주 외, 2025: 4-5). 즉, 기본사회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이 아닌 공존동생(共存同生)을 시대적 가치로 추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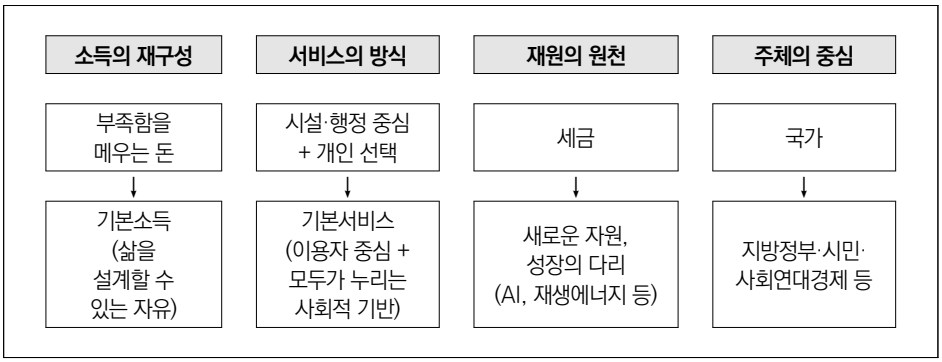
○ 이를 위해 기본사회는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핵심축으로 주요 삶의 영역에서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보장하고, 국민 누구나 안정적이고 존중받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함〈그림 1-1〉.

- 기본소득이 국가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삶의 기반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성격을 갖는다면, 기본서비스는 의료·돌봄·교육·문화·교통·주거·에너지·통신 등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안정성과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기본사회는 기존의 조세 기반 재원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AI와 재생에너지 등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기술과 자원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을 지향함. 즉, 기술과 자원을 소수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 아울러 기본사회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넘어, 지방정부가

정책 실험과 혁신의 주체로 기능하고, 시민·주민공동체·사회연대경제·민간이 정책의 제안·설계·감시·실행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분권적·협력적 정책 체계를 지향함.

- 요컨대 기본사회는 우리 사회를 '삶을 공유하는 터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향함. 이는 국가 재정과 제도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위로부터의 접근'과, 시민사회·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병행하여 구현될 수 있음.

〈그림 1-1〉 기본사회로의 재편을 위한 4개 기둥



자료: 정균승(2025: 114)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이러한 기본사회는 개인 간 격차뿐 아니라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완화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내포함.[1)]

○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거주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생활여건 측면에서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는 농어촌 지역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함.

1)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3특 중심의 국토 발전 전략은 초광역 거점을 중심으로 한 성장 체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 지역은 배후 생활권이자 정주 기반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특히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지역 활력 회복, 주민 참여 기반 지역 운영체계 강화 등을 통해 농어촌을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생활공간으로 전환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음.

❍ 이는 기본사회의 구현을 위해 농어촌 삶의 질 정책 전반을 기본적 생활조건 보장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활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관련 정책의 구조와 추진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기본사회의 농어촌 구현 방향은 국정과제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음.

❍ 국정과제 70은 주거·일자리·생활서비스·기본소득을 통한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와 함께, 농어촌 에너지 자립, 햇빛소득마을 도입 등 농어촌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농촌 주민의 기본적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의 새로운 소득 기반과 활력을 창출하여 농촌을 지속 가능한 생활공간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앞서 제시한 기본사회의 정책 방향과 밀접하게 연계됨.

□ 삶의 질 기본계획은 소득, 공공·생활서비스, 정주 환경, 지역경제 등 주민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국정과제 70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임.

❍ 이에 기존 제5차 기본계획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점검하고, 국정과제 70의 주요 내용이 관련 정책과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범위와 추진 방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현 정부 국정기조와 농어촌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농어촌 삶의 질 정책의 범위와 추진 방향을 재구성·보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기본사회 구현을 비롯한 AI 전환, 지역균형발전, 주민 참여 확대 등 새로운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농어촌 삶의 질 정책의 전략체계와 추진 기반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 이를 위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제5차 기본계획의 추진 배경, 전략체계 및 주요 내용과 농어촌 삶의 질 여건 및 정책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 정부 국정과제 및 관련 정책과의 정합성 분석을 통해 기존 기본계획의 정책적 한계와 전략체계 보완 필요성을 도출함.

○ 농어촌 주민 인식조사를 통해 삶의 질 관련 주요 정책 방향과 전략 과제에 대한 현장 수요와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전략체계 및 정책과제 보완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체계 재편 방향과 정책과제 구성 방안을 검토함.

○ 아울러 정책 성과관리 및 환류 강화를 위한 기존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지역사회 주도의 정책 추진 강화, AI·데이터 활용 확대 등 추진 기반 고도화 방향을 제시함.

3. 연구 내용 및 방법

□ 농어촌 삶의 질 여건과 정책환경의 변화 검토 및 제5차 기본계획 보완 필요성을 논의함.

○ (농어촌 삶의 질 여건 및 정책환경 변화)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지속 등 농어촌의 인구·경제·공공·생활서비스·공간 구조 변화를 개괄하고, 삶의 질 주요 영역에서 도시와의 격차 및 구조적 한계를 검토함. 또한 삶의 질 정책의 확대와 변화, 기본사회 논의의 등장 등 정책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 (제5차 기본계획의 구조와 주요 내용) 제5차 기본계획의 추진 배경과 기본방향, 전략체계 및 주요 정책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추진 기반과 제도적 여건을 검토함.

○ (기본계획의 한계 진단 및 보완 필요성 검토) 현 정부 국정과제와의 정합성 분석을 통해 제5차 기본계획의 정책 반영 수준과 범위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한 영역과 정책 방향을 검토함.

○ (연구 방법) 관련 정책 자료 및 문헌 검토

□ 농어촌 기본사회 관련 정책 수요 및 주요 쟁점을 분석함.

○ (농어촌 주민 인식조사)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 관련 주요 정책 방향과 생활영역별 정책 수요 및 우선순위를 조사하고, 기본서비스, 소득 및 경제활력, 정주·생활기반 등 주요 영역별 체감 수준과 정책 필요도를 분석함. 아울러 과제별 제약 요인을 검토하여 정책과제 보완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연구 방법) 농어촌 주민을 대상 설문조사

□ 제5차 기본계획 고도화 방향 및 전략체계를 재구성함.

○ (기본사회 관점에서의 기본계획 보완 방향 검토) 기본사회 관점을 농어촌 정책 맥락에 적용하여 기본서비스 보장, 지역 경제 및 활력 회복,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 조성 등 기본계획 보완 방향을 검토함.

○ (전략체계 재구성) 정책환경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정책과 사업을 재분류·재배치하고 전략체계를 재구성함.

○ (전략별 주요 정책과제 제안) 재구성된 전략체계를 기반으로 부문별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과제별 추진 방향을 제시함.

- 정책과제는 기존 기본계획 및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재구성·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일부 신규 과제를 제안함.
- 각 과제는 배경, 정책 방향과 내용 및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정리함.

○ (연구 방법) 관련 정책 및 사례 검토, 전문가 자문

□ 기본계획 추진 기반 고도화 방향을 제시함.

○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개선) 사전협의제도, 농어촌 영향평가, 농어촌서비스 기준, 삶의 질 위원회 등 기존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논의함.

○ (지역사회 주도 정책 추진 방안 검토) 서비스 취약지역 컨설팅을 비롯해, 삶의 질정책 추진의 주요 주체로서 주민, 사회연대경제, 기업 등 다양한 지역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함.

❍ (AI·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 방안 검토) 사회 전반의 AI 전환에 대응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생활서비스 분야의 AI 활용 가능성을 검토함.

❍ (연구 방법) 전문가 자문

2 농어촌 삶의 질 여건과 정책환경의 변화

1. 농어촌 삶의 질 여건 변화

1.1. 농어촌 인구 규모 및 구조 변화

□ 농어촌 인구는 2010년 이후 소폭 증가하다가 2017년 이후 970만 명대로 회복·유지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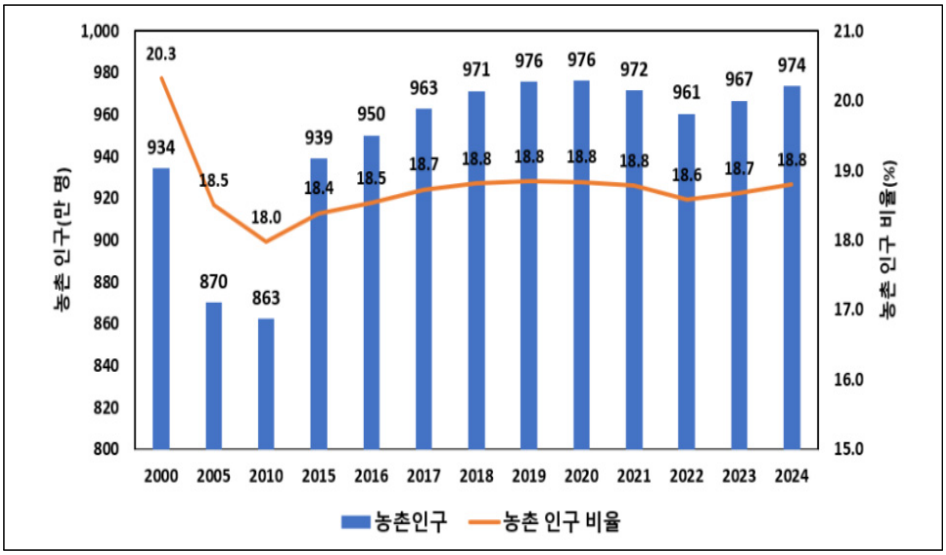
○ 농어촌 인구는 1980년 1,600만 명(42.7%)에서 2010년 863만 명(18.0%)까지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귀농어·귀촌인 유입 등에 따라 2024년 974만 명(18.8%) 수준으로 증가함.

○ 비수도권 면 지역은 인구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며, 특히 비수도권 원격 농어촌에 속한 면 지역 인구는 2000년 대비 24.6% 감소함.

* 2000~2022년 수도권 면 지역 인구 23.3% 증가, 비수도권 면 지역 14.5% 감소

* 수도권 원격 농어촌 면 지역 인구 9.7% 증가, 비수도권 원격 면 지역 인구 24.6% 감소

〈그림 2-1〉 농어촌 인구 변화(1980~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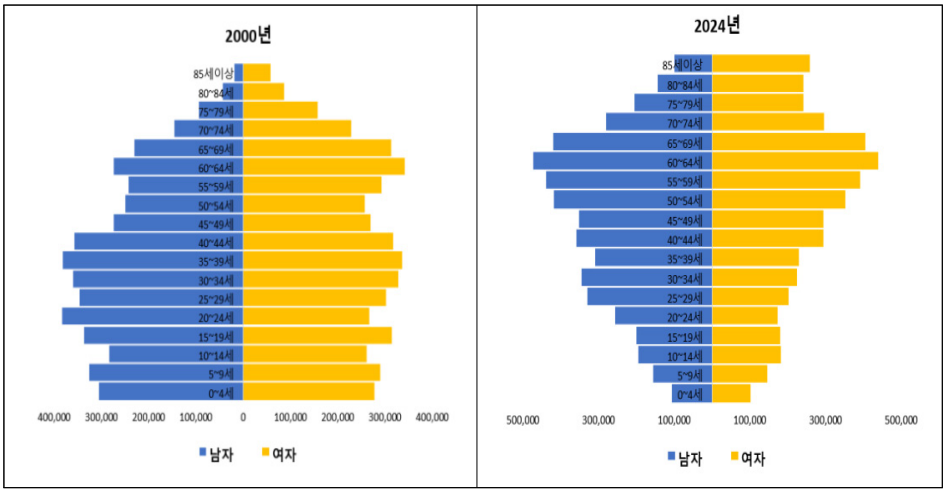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인구총조사.

□ 2000년대 이후 생산연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청년층 비중이 감소하고 고령층 비중이 급증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남.

❍ 2000년에는 30~50대 중장년층이 두터운 항아리형 인구구조로 비교적 균형 잡힌 형태였으나, 2010년 이후 20~40대 청장년층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함.

❍ 2020년에는 50~70대가 가장 넓은 폭을 차지하는 방추형 구조로 변화하였으며, 2024년에는 6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하는 역삼각형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음.

〈그림 2-2〉 농어촌 인구구조 변화(2000~2024년)



주: 내국인 인구로 집계함.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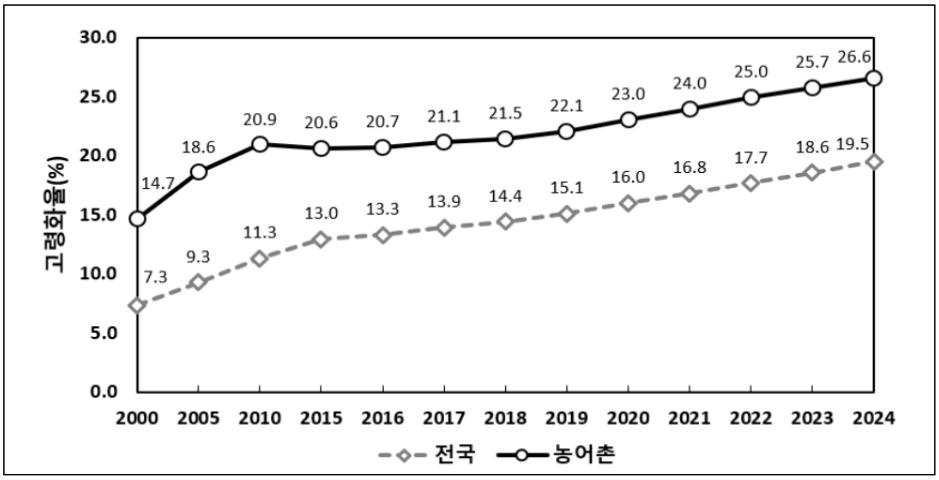
□ 농어촌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 평균보다 약 10년 앞서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 초과)에 도달함.

○ 농어촌 고령화율은 2000년 14.7%에서 2024년 26.6%로 약 12%p 상승하였으며, 2010년 고령화율이 20.9%에 도달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특히 면부의 65세 이상 인구 수가 크게 증가하여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됨.

* 농어촌 고령인구 추이: ('00) 137만 명(고령화율 14.7%) → ('24) 259만 명(26.6%)

* 면부 고령인구 추이: ('00) 101만 명(18.1%) → ('24) 155만 명(34.1%)

〈그림 2-3〉 농어촌 고령화율 및 청년인구 비율 추이(2000~2024년)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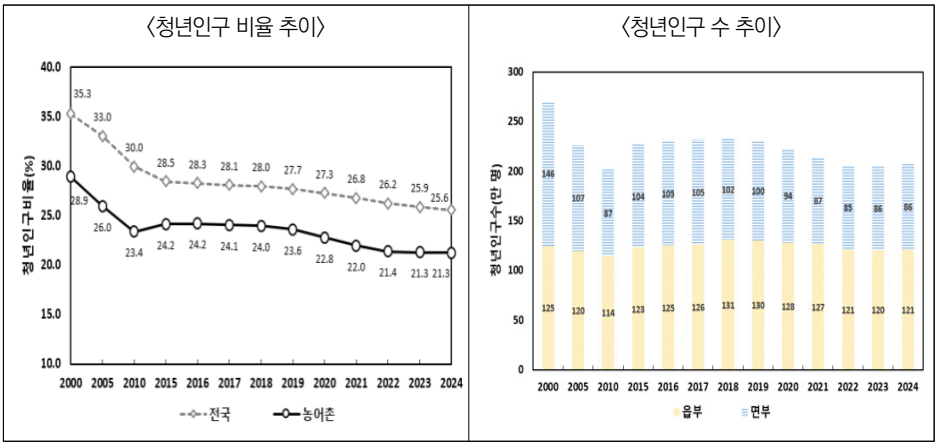
□ 농어촌 청년인구(20~39세) 비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음.

❍ 농어촌 청년인구 비율은 2000년 28.9%에서 2024년 21.3%로 약 7.6%p 감소하였음.

❍ 청년인구 수를 읍·면별로 살펴보면, 면부의 청년인구 수는 2000년 약 146만 명에서 2024년 약 86만 명으로 감소폭이 뚜렷하게 나타나 면부의 생산연령 인구 기반이 크게 약화됨.

* 농어촌 청년인구 추이: ('00) 270만 명(28.9%) → ('24) 207만 명(21.3%)

〈그림 2-4〉 농어촌 청년인구 추이(2000~2024년)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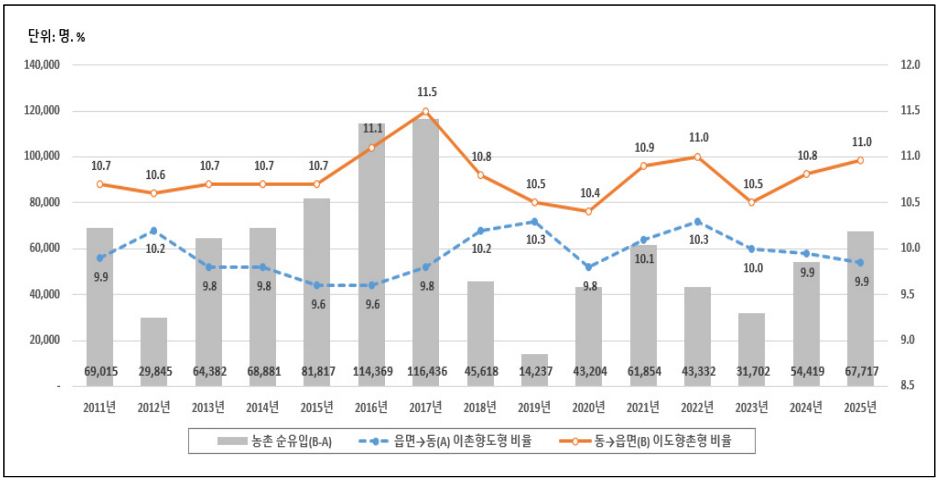
□ 농어촌으로의 인구 유입은 귀농어·귀촌인 및 생활인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있으며, 농촌으로의 인구 순유입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116,436명으로 정점에 달했음. 코로나19 직후 크게 감소하였으나 인구 순유입 추세는 유지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약 15만 명에 해당하는 농촌으로의 인구 순유입이 나타났으며, 인구 유입 증가세가 커지고 있음.

❍ 지난 15년간 이촌향도형 이동보다 이도향촌형 비율이 높게 나타나 도시에서 농어촌으로의 인구이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농어촌 인구 수 회복·유지에 기여함.

〈그림 2-5〉 도시-농어촌 인구이동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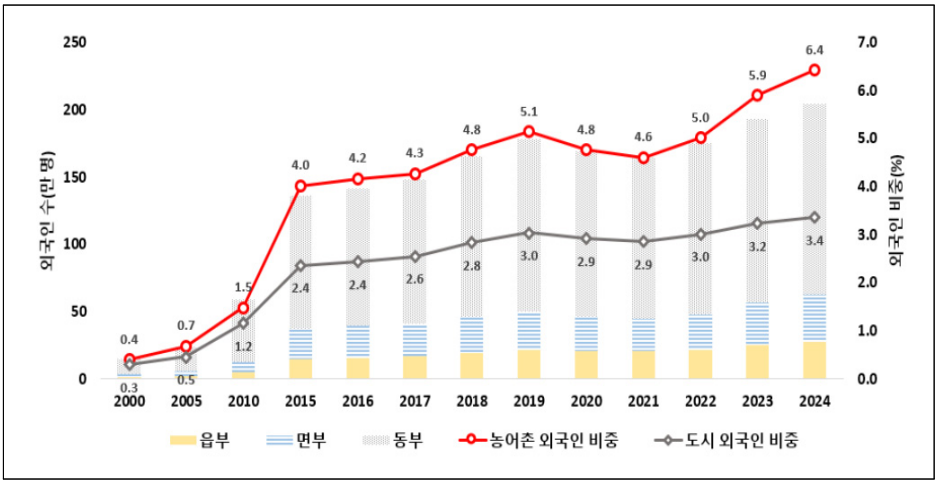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국내인구이동통계.

□ 농어촌 외국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농어촌 전체 인구 수의 6.4%에 달함.

○ 농어촌 외국인 비중은 2000년 0.4%에서 2024년 6.4%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도시 외국인 비중의 약 2배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함.

○ 면부의 외국인 인구가 읍부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 이후 면부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2-6〉 전국 외국인 인구 및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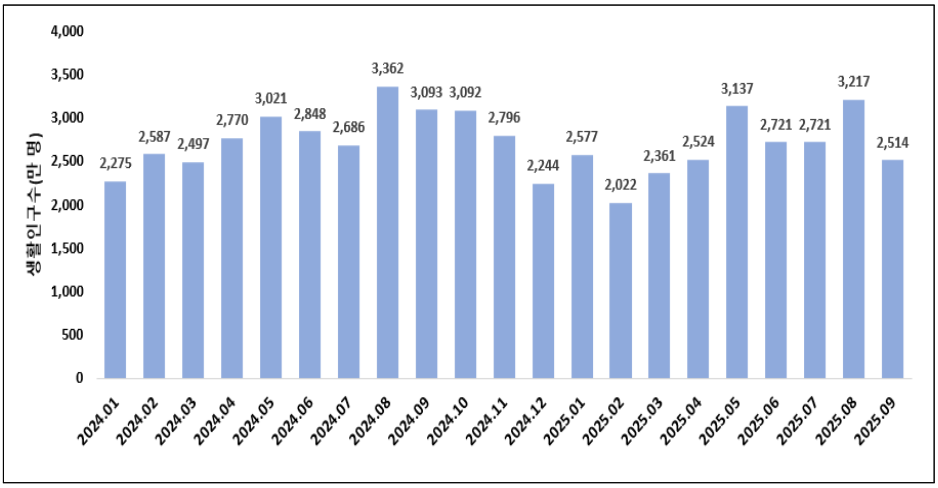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인구총조사.

□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월별 변동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2,000~3,000만 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어촌 정주인구 외 생활인구가 상당 규모 존재함.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24년 1월 2,275만 명에서 동년 8월 3,362만 명으로 최고치를 달성하였으며,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월별 추이를 보면 여름철생활인구가 증가하고, 겨울철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관광·여가 목적에 따라 생활인구가 큰 폭으로 변동하는 계절성이 나타남.

〈그림 2-7〉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수 추이



주: 생활인구통계는 실험적 통계 2024-002호로서 승인통계가 아니며, 공표 시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월), 생활인구통계.

1.2. 농어촌 경제 및 산업 구조 변화

□ 국내 총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농림어업의 경제적 위상이 약화됨.

○ 농림어업 분야의 총생산액(명목)은 1970년 7,410억 원에서 2025년 38조 9,999억 원으로 절대적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음.

○ 농림어업 총생산의 GDP 대비 비중은 1970년 26.3%에서 2000년 3.7%로 감소했으며, 2020년 이후에는 1%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음.

〈표 2-1〉 국내 총생산(GDP) 및 농림어업분야 총생산

연도	국내 총생산(십억 원)	농림어업 총생산(십억 원)	농림어업 비중(%)
1970	2,821	741	26.3
1980	40,423	5,665	14.0
1990	206,713	15,235	7.4
2000	675,733	25,045	3.7
2010	1,379,460	28,202	2.0
2020	2,058,467	32,482	1.6
2025	2,663,343	38,999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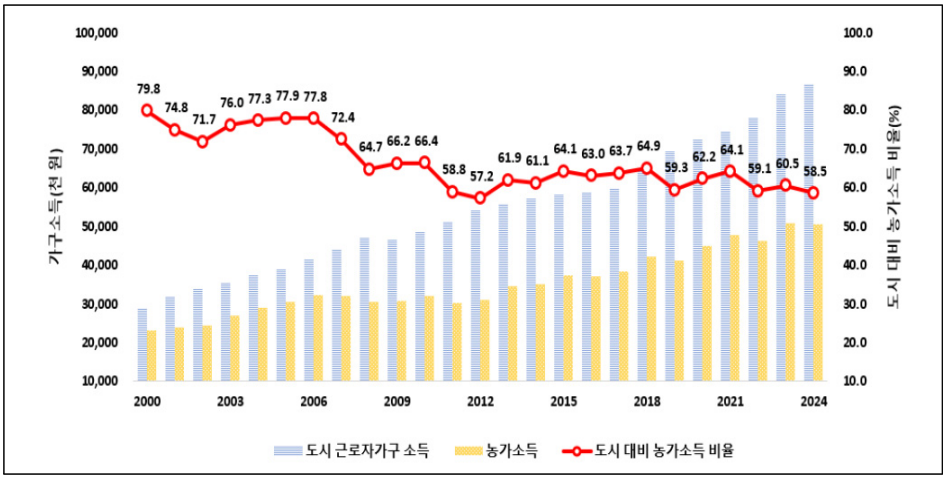
주: 2025년 수치는 한국은행 잠정치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국민계정.

□ 농가소득의 절대적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음.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과 이전소득 비중이 증가하면서 소득구조의 질적 변화가 나타남.

○ 농가소득은 등락을 반복하며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5,000만 원 수준에 도달하였음.

- 특히 도시 대비 농가소득의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2012년 도시가구 소득의 57.2%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10년 이상의 도·농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그림 2-8〉 농가소득 및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 추이



주: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 기준이며, 분기별 소득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연소득으로 추정함.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 농가소득 구성을 살펴보면 농업소득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농외소득 비중은 증가하여 농가의 소득원이 다변화하고 있음. 특히 이전소득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농가의 정부 이전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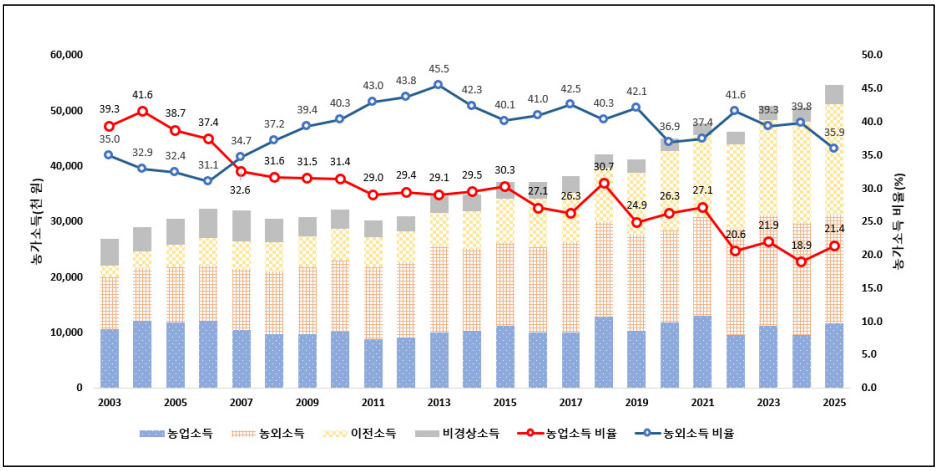
- 특히 농가소득 중 공적이전소득(농업보조금, 연금 등 기타공적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게 증가함.

  * 농업소득 비중: ('03) 10,572천 원(39.3%) → ('25) 11,707천 원(21.4%)

  * 농외소득 비중: ('03) 9,397천 원(35.0%) → ('25) 19,639천 원(35.9%)

  * 이전소득 중 공적이전소득 비중 : ('03) 1,394천 원(5.2%) → ('25) 19,049천 원(34.8%)

〈그림 2-9〉 농가소득 구조 변화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농어촌 내 사업체 수와 창업기업이 증가하는 등 경제 다각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농어업 분야의 생산인력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 일반시는 군 지역에 비해 사업체와 근로자 수 모두 약 5배 이상 많지만 지난 15년간 증가율은 비슷함.

* 지자체당 사업체 수(개소): 군 ('10) 3,793 → ('24) 7,725(103.7% 증가),
일반시 ('10) 19,509 → ('24) 40,515(107.7% 증가)

* 지자체당 근로자 수(명): 군 ('10) 13,580 → ('24) 22,962(69.1% 증가),
일반시 ('10) 87,082 → ('24) 144,084(65.5% 증가)

○ 농촌지역(읍·면)의 인구 천 명당 사업체 수와 근로자 수가 도시지역(동)보다 많았으며, 창업기업 수 또한 2020년 이후 농촌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 총사업체 수(개소): 농어촌 ('10) 623,894 → ('24) 1,440,741(131% 증가),
도시 ('10) 2,731,110 → ('24) 4,922,521(80% 증가),
농어촌 비율 ('10) 18.6% → 22.6%(4%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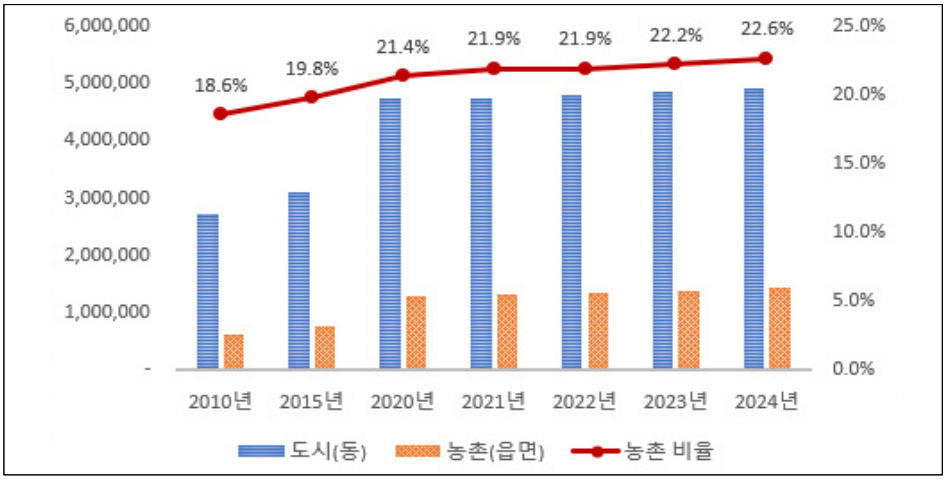
* 인구 천 명당 사업체 수(개소): 농어촌 ('10) 71 → ('24) 148(107% 증가),
도시 ('10) 69 → ('24) 117(71% 증가)

* 인구 천 명당 근로자 수(명): 농어촌 ('10) 350 → ('24) 501(43% 증가),
도시 ('10) 345 → ('24) 443(28% 증가)

* 인구 천 명당 창업기업 수(개소): 농어촌 ('10) 8 → ('24) 17(116% 증가),
도시 ('10) 10 → ('24)16(54% 증가)

〈그림 2-10〉 총사업체 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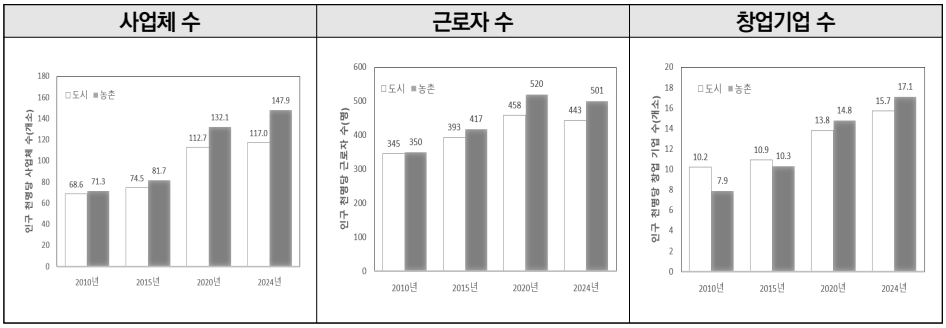
단위: 개소, %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2-11〉 도시·농촌 경제활동 변화 비교(2010~2024년)

단위: 인구 1천 명당 개소, 명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 군 지역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4년 45,814명에서 2025년 75,474명으로 약 64.7% 증가하였으며, 이 중 농업(E9-3) 및 어업(E9-4) 종사자 합계는 같은 기간 동안 2.7배 가량 증가하였음.

- 특히 2021년 계절근로(E8) 비자 도입 이후 단기 농어업 인력의 외국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표 2-2〉 군 지역 외국인 근로자 수 추이

단위: 명

연도	비전문취업(E9) 근로자 전체	농업(E9-3)	어업(E9-4)	계절근로(E8)	농어업종사자 합계 (E9-3, E9-4, E8)
2014	45,814	7,372	3,216	-	10,588
2015	48,311	8,164	3,938	-	12,102
2016	50,653	9,407	4,773	-	14,180
2017	50,916	10,563	5,313	-	15,876
2018	52,463	11,067	6,055	-	17,122
2019	53,136	11,133	6,729	-	17,862
2020	46,576	10,344	6,451	-	16,795
2021	46,048	9,848	6,089	290	16,227
2022	53,505	12,092	8,063	2,148	22,303
2023	65,006	14,245	10,072	7,348	31,665
2024	72,040	14,694	11,811	11,376	37,881
2025	75,474	15,308	12,960	18,790	47,058

주 1)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 중 체류자격(비자)에 따른 분류를 바탕으로 군 지역 외국인 근로자 수를 추정.
2) '농어업종사자 합계'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 중 농업과 어업으로 분류된 외국인 및 계절근로(E8) 체류 외국인 수의 합계.
3) 계절근로는 농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 2021년부터 집계 시작.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각 연도),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 농어촌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2011년 대비 약 54배 증가하였으며,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남.

❍ 유형별로 살펴보면 협동조합이 2012년 10개소에서 2024년 8,233개소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79.4%를 차지하며,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이 각각 10%가량을 차지함.

○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3년에 가장 높았으며, 이후 점차 둔화되며 신규 조직 설립의 성장세가 완만해짐.

〈표 2-3〉 농어촌 지역 사회연대경제 조직 설립 개소 수(누적)

단위: 개소,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사회적 기업	116	204	321	382	425	464	519	563	599	649	742	908	1,038	1,095
마을 기업	77	104	153	217	268	318	376	449	527	637	759	877	982	1,042
협동 조합	-	10	612	1,183	1,731	2,292	2,808	3,394	4,116	4,993	5,906	6,666	7,451	8,233
합계	193	318	1,086	1,782	2,424	3,074	3,703	4,406	5,242	6,279	7,407	8,451	9,471	10,370
전년 대비 증가	-	64.8	241.5	64.1	36.0	26.8	20.5	19.0	19.0	19.8	18.0	14.1	12.1	9.5

자료: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운영현황(https://www.mois.go.kr/frt/sub/a06/b06/village/screen.do), 2024년 12월 기준, 검색일: 2026. 7. 21.; 사회적기업 포털(https://www.seis.or.kr), 검색일: 2026. 7. 21.; Coop 협동조합(https://www.coop.go.kr), 검색일: 2026. 7. 21.

1.3. 농어촌 공공·생활서비스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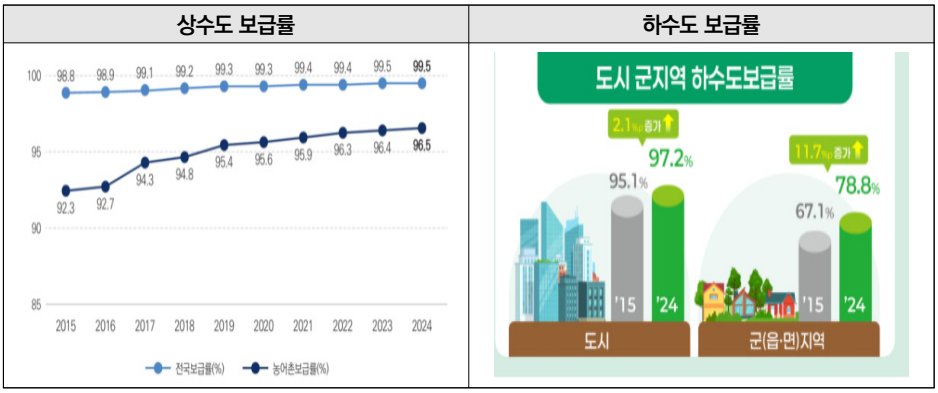
□ 농어촌 지역에서 상·하수도 보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전국 보급률과 농어촌 지역 보급률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함.

○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2015년 92.3%에서 2024년 96.5%로 4.2%p, 하수도 보급률은 2015년 67.1%에서 2024년 78.8%로 11.7%p 각각 증가함.

* 상수도 보급률: 전국 ('15) 98.8% → ('24) 99.5%, 농어촌 지역 ('15) 92.3% → ('24) 96.5%

* 하수도 보급률: 전국 ('15) 92.9% → ('24) 95.6%, 농어촌 지역 ('15) 67.1% → ('24) 78.8%

〈그림 2-12〉 상하수도 보급률 변화



자료: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각 연도),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정보시스템(각 연도), 하수도 보급률.

□ 농어촌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지난 10여 년간 농어촌의 도로포장률이 크게 개선되었음.

○ 2024년 전국 도로포장률은 2013년 대비 4.6%p 증가한 95.7%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군 지역의 도로 포장률은 같은 기간 7.4%p 증가함.

* 도로포장률: 전국 ('13) 91.1% → ('24) 95.7%, 군 지역 ('13) 84.1% → ('24) 91.5%

□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여건 개선 노력에도 도시 대비 농어촌의 대중교통 서비스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임.

○ 1일 3회 이상 버스 이용이 가능한 법정리 비율은 과거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접근 용이성 등을 종합한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부족 지역[2]'의 도농 간 격차는 지속됨.

* 1일 3회 이상 버스 이용 가능 법정리 비율: ('20) 87.1% → ('25) 91.3%

*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부족 지역: 법정동('20) 14.2% → ('24) 18.7%, 법정리('20) 26.8% → ('24) 30.8%

2) 한국교통안전공단(각 연도), 대중교통현황조사.

□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지방 인구의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가속화되었으며, 이는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여건에 영향을 미침.

○ 일부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 저출산의 영향으로 필수 의료시설(산부인과 등) 및 민간 병·의원 부재 등 취약성이 나타남.

* 군 지역 중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비율: ('06) 57.0% → ('25) 70.7%

〈표 2-4〉 산부인과 수 변화

단위: 개소(%)

구분		2006년	2025년
전국		1,818 (100.0)	1,330(100.0)
	도시	1,329 (73.1)	937(70.5)
	도농복합시	429 (23.6)	361(27.1)
	군	60 (3.3)	32(2.4)
산부인과 없는 군 (전체 군 대비 비율)		49 (57.0)	58(70.7)

주: '도시' 지역은 군 지역 및 도농복합시에 해당하지 않는 특광역시 및 일반시 지역을 포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각 연도), 건강보험통계.

□ 농어촌 지역의 학교 및 학급 수 감소로 인해 공교육 여건이 악화됨.

○ 도시지역의 경우 행정구역 면적당 학교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 농어촌 지역은 과소 학교 및 폐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24년 기준 행정구역 면적 1㎢당 초·중·고 수(성주인 외, 2025b): 도시 0.53개소, 농촌 0.07개소

* 전국 농촌 읍·면(1,404개) 중에 초등학교(분교 포함)가 없는 지역 11곳

* 학년당 20명 학급 운영이 가능한 학교 비중: (도시) 92.8%, (농촌) 27.4% 특히, 면 지역의 경우 학년당 10명 미만인 과소학교가 71.1%

〈표 2-5〉 도시와 농촌의 초등학교 폐교 발생 현황

지역	기간			합계	비율
	2010~2014	2015~2019	2020~2025		
동 지역	17	25	23	65	13.5%
읍 지역	34	25	21	80	16.6%
면 지역	148	91	98	337	69.9%
전체	199	141	142	482	100.0%

자료: 교육부(각 연도). 지방교육재정알리미.

□ 농어촌 지역 내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이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체험 및 참여 기회는 제한적임.

○ 농어촌 지역 내 관련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됨.

* 생활문화센터: ('21) 147개소 → ('25) 224개소
* 농어촌 체육시설 도달 소요 시간: ('20) 18.8분 → ('25) 8.7분

○ 대부분 문화·여가 기반시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체험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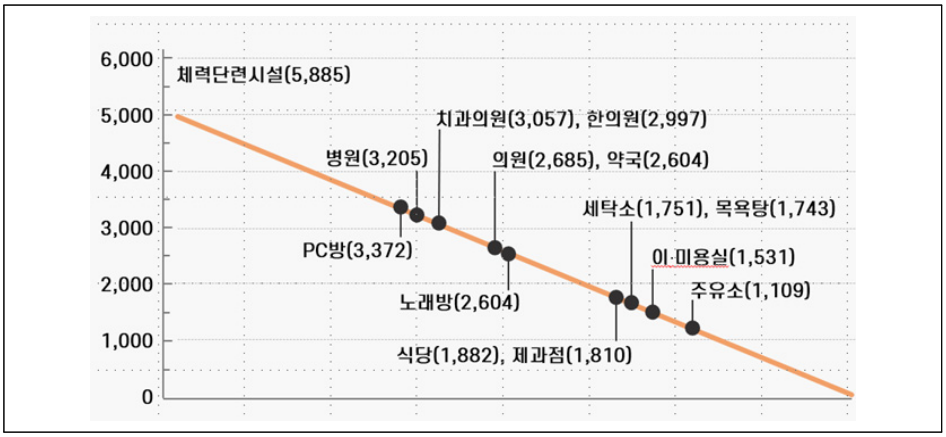
* 2025년 수도권 3개 시도에 전체 문화시설의 36.9%가 분포(문화체육관광부, 2025)
* 2024년 기준 행정구역 면적 100㎢당 문화 기반시설 수(성주인 외, 2025b): 도시 11.8개소, 농촌 1.8개소

□ 향후 인구 2천 명 미만의 인구과소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 감소로 인해 필수 생활서비스 기능이 사라지는 읍·면이 전국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인구 2천 명 미만 읍·면이 증가하면서 상점, 약국, 의원, 미용실 등 농촌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들이 폐업되는 경향 발생

* 인구 2천 명 미만 읍·면: ('20) 354개(25%) → ('30) 382개(27%) → ('40) 427개(30%) → ('50) 470개(34%)
* 마을(법정리) 내에서 식료품 판매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 ('25) 47.7%
* 읍·면 내에서 생활서비스(위생, 세탁, 약국, 주유)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비율: ('25) 41.5%

〈그림 2-13〉 읍·면별 기초생활 서비스 시설의 임계인구



주: 임계인구는 612개 인구감소 면 지역에서 2010~2020년간 폐업한 기초생활시설들을 추출하고, 각 시설별로 폐업 시점 인구들의 중윗값으로 산출함.
자료: 한이철 외(2022) 재인용.

1.4. 농어촌 공간 및 생활환경 변화

□ 주택 노후화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주거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사용 등에 취약한 주거 환경을 보임.

○ 농어촌 지역 내 노후·불량 주택 및 빈집이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농어촌 지역 빈집 수: ('15) 49천 동 → ('20) 56천 동 → ('24) 78천 동(전국 빈집의 58.3% 해당) (관계부처합동, 2025)

*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철거 수(누적): ('19) 147천 호 → ('25) 312천 호(농림축산식품부, 2026)

○ 특히 도시가스 보급이 제한적인 면 지역 농어촌 주택의 난방비 부담이 높은 상황이며 단열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주거의 질이 더욱 열악함.

* 도시가스 보급률('24): 전국 85.6%, 농어촌 50.5% (읍부 75.3%, 면부 26.3%)(농림축산식품부, 2026)

* 월평균 난방비: 농어촌 14.8만 원, 도시 12.9만 원(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24)

□ 쾌적하고 깨끗한 농어촌 공간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게 나타나나 농어촌 지역의 경관과 환경을 해치는 다양한 위협 요인이 존재함.

○ 농어촌다움을 저해하는 환경위해시설이 농어촌 지역에 다수 분포하며, 주로 주거지 인근에 입지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저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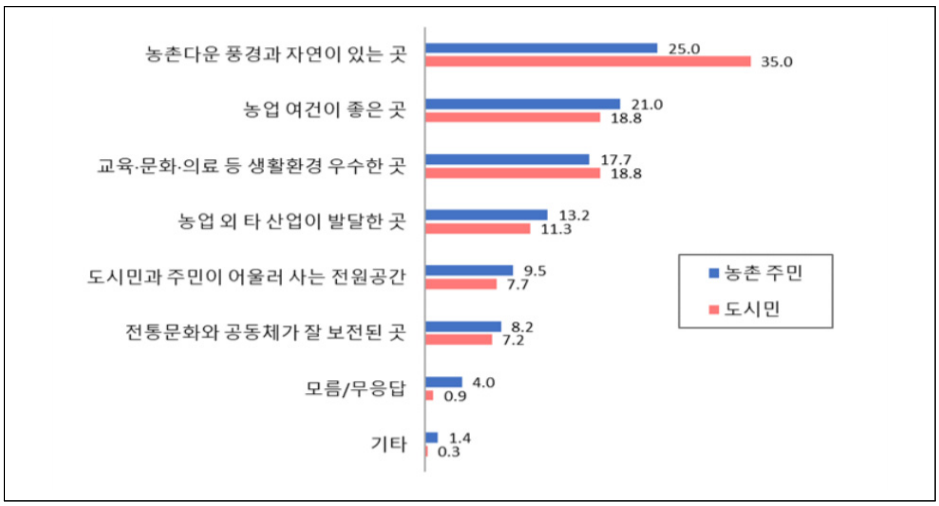
* 농어촌 지역 환경위해시설 중 주거지 300m 이내에 전체 공장의 약 58%, 축사의 약 48%, 태양광발전 용량 기준 약 38% 시설이 입지

○ 깨끗한 농어촌 경관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지만 생활쓰레기, 빈집 등이 방치되면서 경관 훼손이 지속되고 있음.

* 국민들은 '농촌다운 풍경과 자연이 있는 곳'을 가장 바람직한 농촌으로 인식(송미령 외, 2020)

* 농어촌 경관 저해요인(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25): 빈집·빈터(30.3%), 버려진 생활쓰레기(28.8%), 영농폐기물(7.9%), 불법 현수막(7.7%), 공장·공단(5.6%), 축사(5.5%), 송전탑 등(5.0%)

〈그림 2-14〉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농촌 모습



주: 2020년 도시민, 농촌 주민 3,323명 설문조사 결과.
자료: 송미령 외(2020).

2. 농어촌 삶의 질 정책의 주요 변천

2.1. 삶의 질 정책 추진 배경

□ 우리나라 농정에 농어촌 삶의 질 관련 정책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면서부터임.

○ 정부는 WTO 체제의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94년 초 대통령 직속 농어촌발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동 위원회의 3개 소위원회 중 하나로 농어민후생복지소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전담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관련 정책들이 체계화되는 계기를 맞이함.

○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은 2004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확대와 세계무역기구 농산물협상의 진전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도농 간 소득 및 생활 수준의 격차 심화가 우려되었기 때문임.

□ 이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졌고,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특별법」)과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하, 「농어촌복지법」)이 제정됨.

* 농어촌: ① 읍·면 지역 ② 동 지역 중 주·상·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어업인삶의질특별법」은 농어촌 지역에서 시행되는 보건, 복지, 환경, 문화, 교육, 지역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농어촌복지법」은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보완적 법적 근거로 제정됨. 두 법률 중에서도 「농어업인삶의질특별법」은 삶의 질 전반을 포괄하는 상위 정책체계의 근간으로 기능함.

□ 「농어업인삶의질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는 5년 단위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통해 농촌복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년간의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입각해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당해 기간에 일부만 시행되는 사업도 기본계획 대상에 포함함.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2.2. 역대 삶의 질 기본계획 주요 추진 경과

□ 기본계획은 초기에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점차 보건·복지·교육·문화·환경 등 삶의 질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협력체계가 강화되면서 정책의 실행 기반도 점차 구체화되었음.

❍ 이러한 통합적 정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기까지는, 농촌의 경제·사회적 여건 악화와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누적되어 온 배경이 있었음.

- 「농어업인삶의질특별법」 제정 당시 농업 부문의 기반 정비는 일정 부분 진전되어 있었으나 영농 규모화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생산성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가의 실질소득은 정체되고 부채는 증가하였음. 그 결과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1992년 89.1%에서 2003년 76.1%로 하락함.

- 농어촌의 정주 여건이 열악한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음. 2003년 기준 농어촌의 상수도 보급률은 52.9%로, 도시(98.0%)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도로 포장률 역시 농어촌 51.5%, 도시 89.5%로 큰 격차를 보였음.
- 의료자원의 지역 불균형도 두드러져, 종합병원의 93.6%. 병상 수의 89.5%, 의료 인력의 88%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음. 교육 부문에서도 2004년 전체 학교 5,149개 중 47%에 해당하는 2,420개가 소규모 학교로서 폐교 위기에 처해 있었음.
- 또한 전국 인구에서 농어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6.7%에서 2004년 7.5%로 감소하였으며, 농어촌 인구 비율 역시 같은 기간 25.6%에서 20.0%로 줄어들었음. 이러한 인구감소는 생활 여건 악화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하였음.

❍ 이처럼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기반이 취약해지는 상황에서도 보건·복지·교육·지역개발 등 관련 정책은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었고, 개별 정책은 농어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범정부 차원의 통합 조정 기능도 부재하였음.

❍ 이에 정부는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교육·정주 여건 개선, 지역개발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004년 「농어업인삶의질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함.

- 기본계획은 농어촌 삶의 질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전략을 마련함.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 의료, 문화, 교육, 정주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을 포괄하며, 단일 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수립하는 범부처 계획의 성격을 지님.

- 또한, 기본계획은 데이터 기반 계획으로서 농어촌 여건 변화, 정주만족도 등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기초한 서비스 이용 취약지역 분석, 삶의 질 여건 변화 분석을 토대로 삶의 질 관리 및 전략을 마련

〈참고〉 삶의 질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
3. 농어촌의 교육·문화예술 여건 개선
4.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
5.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6. 농어촌산업 육성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
8.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9.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
10. 농어촌서비스기준
11. 그 밖에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이렇게 수립된 기본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위원장: 국무총리) '삶의 질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됨. 이후 위원회가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함.

□ 2005년에 제1차 기본계획이 시행된 이래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었고, 2026년 현재 5차 기본계획이 시행 중임. 차수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표 2-6〉.

❍ (제1차 기본계획)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 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을 비전으로, 14개 부처가 참여함. 4대 부문(① 농어촌 복지여건 개선, ② 교육기반 확충, ③ 지역개발 촉진, ④ 복합산업 활성화), 133개 과제가 추진되었음. 투융자 액수는 22.8조 원으로, 당초 계획한 투융자 규모(20.3조 원) 대비 112%의 투융자 실적을 기록함.

❍ (제2차 기본계획)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7대 부문(① 보건·복지, ② 교육, ③ 기초인프라, ④ 경제활동, ⑤ 문화·여가, ⑥ 환경·경관, ⑦ 지역 역량) 133개 과제로 확대되었음. 14개 부처가 참여하였으며, 투융자 규모는 34.5조 원이었음.

❍ (제3차 기본계획)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2014년에 수립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음. 7대 부문(① 보건·복지, ② 교육, ③ 정주 생활기반, ④ 경제활동·일자리, ⑤ 문화·여가, ⑥ 환경·경관, ⑦ 안전) 184개 과제가 추진되었는데, 15개 부처가 참여함. 투융자 규모는 46조 5천억 원 수준이었음.

❍ (제4차 기본계획)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비전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었음. 4대 전략(①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②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 기반 구축, ④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175개 과제로 구성되었음. 역대 가장 많은 21개 부처가 참여하였으며, 투융자 규모는 51조 1천억 원에 달함.

□ 한편, 역대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관계부처 간 협력·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다양하게 시도되었음.

❍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최소 수준 이상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도시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농어촌서비스 기준 항목에 체감형 목표치(접근성)를 추가하고,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 및 사전협의제도 도입(2022년)을 통해 정책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시도함.

〈표 2-6〉 역대 기본계획(1~4차) 개요

구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기간	2005~2009	2010~2014	2015~2019	2020~2024
추진 배경	한칠레 FTA 체결 농업·농촌 종합대책	포괄보조금 도입, 기초생활권 정책 재편 등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도입	지방분권 확대
주요 내용	농촌의 각종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등 (4대 부문 133개 과제)	기초생활인프라 및 복지 기반, 경제활동 다각화 등 (7대 부문 133개 과제)	맞춤형 복지확충,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 (7대 부문 185개 과제)	지역·대상별 수요 맞춤형 대응,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서비스 공급망 확충 등 (4대 전략 178개 과제)
투융자 규모	(계획) 20.3조 원	(계획) 34.5조 원	(계획) 46.5조 원	(계획) 51.1조 원
참여 부처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등 14개 부처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등 14개 부처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등 15개 부처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등 21개 부처·청
특징	H/W 중심의 중앙정부, 공급자 관점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 영향평가 등 선진제도 신규 도입	부처들 관심 부족으로 정책 조성 성과 미흡	영향평가 내실화 및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통한 정책협력·조정제도 강화

자료: 김용렬 외(2024: 9).

□ 2025년 수립·시행된 제5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 공간'으로, 과거와 달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전략으로 제시하였음〈그림 2-15〉.

○ 제5차 기본계획은 농어촌을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장으로 재정의하고, 세 가지 추진전략으로 ① 농어업·농어촌 자원 활용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②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③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 12개 주요 과제와 180개 세부과제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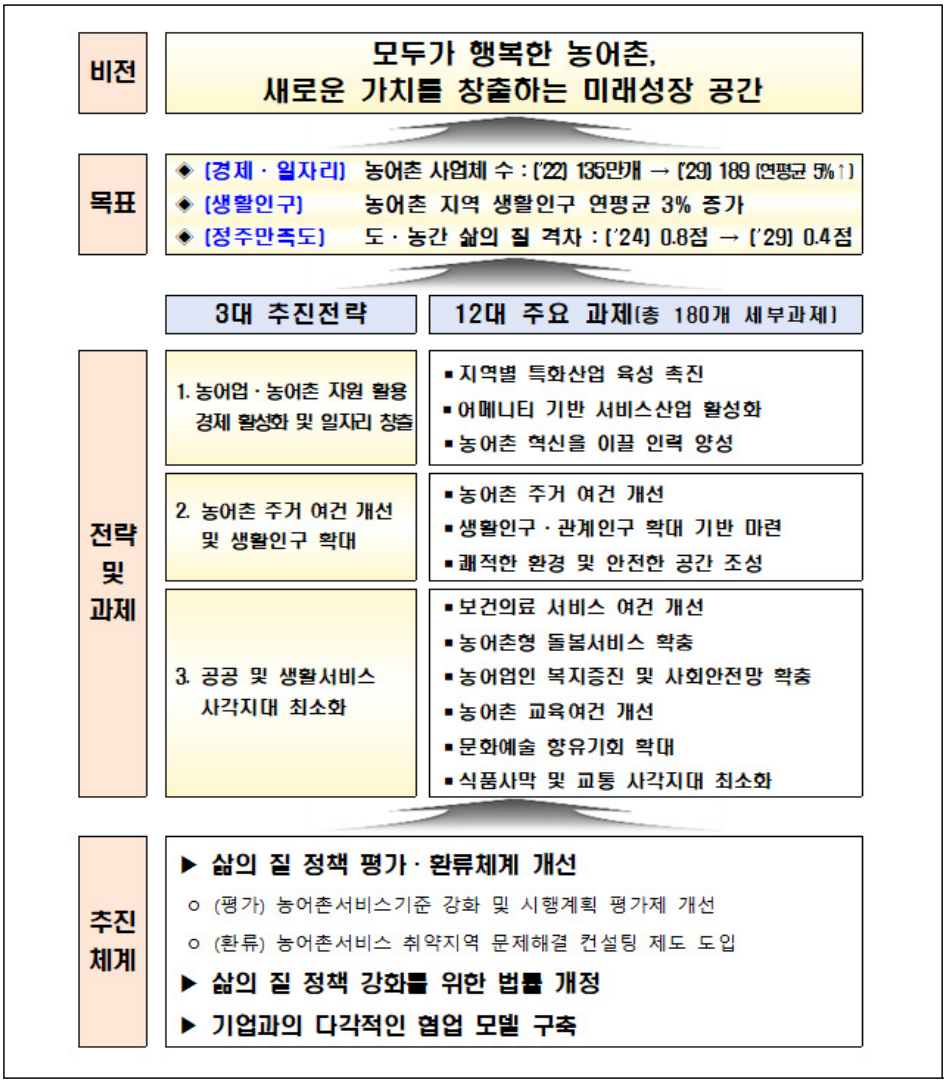
- '농어업·농어촌 자원 활용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의 주요 과제로는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촉진, 어메니티 기반 서비스산업 활성화, 농어촌 혁신을 이끌 인력 양성이 제시됨.

-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전략의 주요 과제에는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 생활인구 관계인구 확대 기반 마련,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공간 조성이 포함됨.
-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전략의 주요 과제는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 농어촌형 돌봄서비스 확충, 농어업인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식품사막 및 교통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함.

❍ 특히, 그동안 삶의 질 정책 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 중 하나로 여겨진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 촉진과 주거 여건을 개선을 도모하고,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완화함으로써 도농 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자 하였음.

❍ 아울러 삶의 질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시행계획 평가체계 개편과 농어촌 서비스기준 목표 상향 및 일부 항목 분석 단위 세분화(시·군 → 읍·면), 생활서비스(세탁소, 이·미용실, 목욕탕, 약국 등)와 같은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등 내실화하였음. 또한, 서비스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컨설팅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어촌 지자체의 공공·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노력을 촉진하고자 하였음.

〈그림 2-15〉 제5차 기본계획 개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5. 3. 27.).

□ 이처럼 삶의 질 기본계획은 참여부처·정책을 지속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함에 따라 범부처 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왔음. 그 결과 농어촌 지역의 기초인프라가 보완되고,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음(김용렬 외, 2024: 51-55).

❍ (보건·복지)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기관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인프라가 확대되었고,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 지원 확대,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23. 8.)하는 등 주민 주도 사회복지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었음.

❍ (교육·문화)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버스 이용 시간이 감소하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등 교육 서비스 여건이 개선되었으며,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었음.

❍ (정주·생활기반) 주택·에너지·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는 물론, 농어촌 교통모델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23. 3.)으로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사회·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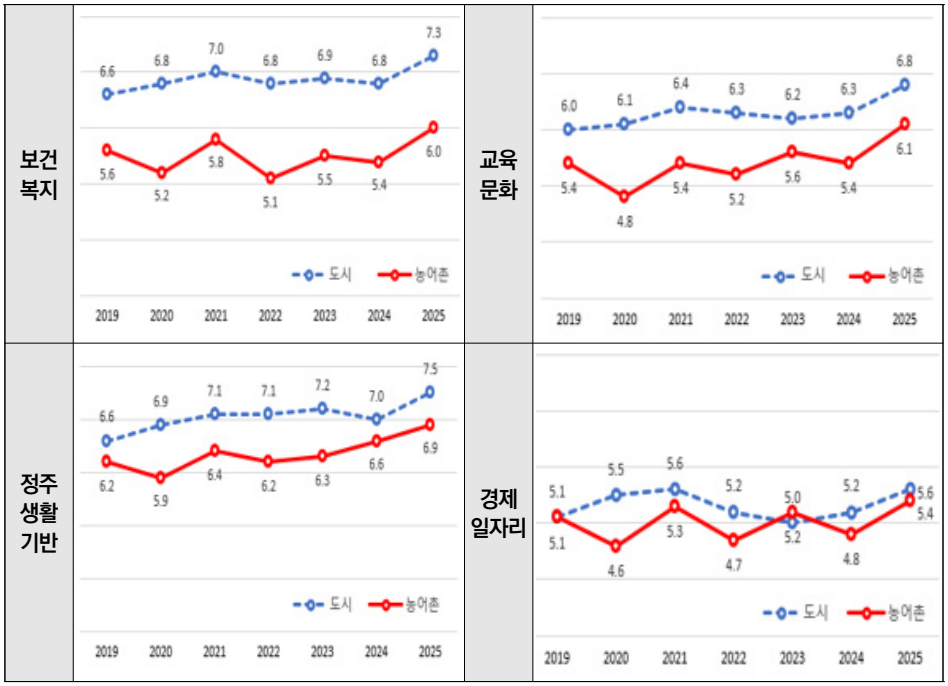
❍ (경제·일자리) 농촌 융복합 사업 및 관광의 활성화, 취·창업 지원 확대 등으로 농촌 소재 농식품 창업 증가율이 전국을 상회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속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확인되었음.

□ 이에 주민이 체감하는 정주만족도 역시 대체로 상승하였으나, 도농 간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그림 2-16〉. 이는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정책의 가시적 성과는 아직까지 제한적임을 시사함.

❍ 특히,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인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도시와의 간극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활동·일자리 영역에 대한 만족 수준은 타 영역 대비 가장 저조함.

〈그림 2-16〉 삶의 질 주요 영역별 만족도 추이(2019년~2025년)

단위: 점(0~10)



자료: 최현우 외(2025: 22).

3. 기본사회 기조와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3.1. 기본사회와 농어촌 삶의 질 정책

□ 이 같은 상황에서 2025년 6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주요 국정기조로 제시된 기본사회는 농어촌 삶의 질 정책의 방향 재설정을 요구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으로 볼 수 있음.

□ 기본사회에 대한 강조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위기 속에 대두됨.

❍ 저성장, 양극화, 고용불안정 심화 등 기존 성장·분배 체계의 한계 속에 개인 간 소득·자산 격차뿐 아니라 지역 간 삶의 질 격차가 확대되었음. 기후위기와 AI 혁명을 맞아 식량안보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졌고, 일자리의 불확실성이 심화하였음.

❍ 동시에, 선별적 복지 및 사후적 지원 중심 정책을 벗어나 기본적 삶의 조건 보장 요구가 증대되었음. 이에 따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기 시작함.

□ 기본사회는 단순히 복지정책이나 소득분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교통 등 인간다운 기본적 삶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는 정책 방향이자 설계의 기준으로 작용함(이한주 외, 2025: 5).

❍ 기본사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모든 권리,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이 충족되는 삶이 실현되는 사회로 이해할 수 있음. 이는 필요·욕구 기반 복지에서 권리 기반 보장체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함.

□ 기본사회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다음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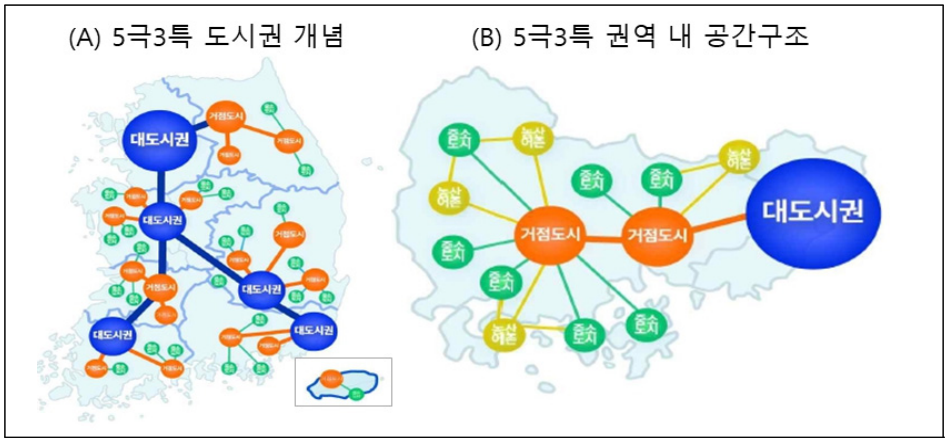
○ 첫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보장함. 둘째, 기본적 생활 조건을 정책적 선택이 아닌 권리로 규정함. 셋째, 사후 보완이 아닌 사전적·구조적 보장을 지향함. 넷째, 소득, 서비스, 환경 등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함.

□ 이러한 기본사회의 관점은 개인 간 격차 완화뿐만 아니라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완화를 필연적으로 내포함. 기본적 삶의 조건이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기본사회 실현이 제한되기 때문임.

○ 특히 현 정부는 5극3특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광역권 중심의 산업·경제 거점 육성과 지역 간 기능 분담을 통해 국가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그림 2-17〉.

○ 이러한 정책 방향은 농어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환경으로 작용함. 따라서 이러한 기조하에 농어촌 공간의 위상과 역할 등을 정립하는 작업도 중요하게 요구됨.

〈그림 2-17〉 새 정부의 5극3특 도시권 및 권역 공간구조 개념도


(A) 5극3특 도시권 개념
(B) 5극3특 권역 내 공간구조
대도시권
거점도시
거점도시
대도시권
대도시권
대도시권
대도시권
혼쇠
혼쇠
혼쇠

□ 이는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 격차의 해소, 정주 환경 및 생활기반의 공간적 형평성 확보 등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을 증대시킴. 특히 농어촌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범부처 종합계획인 삶의 질 기본계획은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하여 보완·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 기본사회는 그동안 삶의 질 정책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포괄적인 정책 목표, 정책 간 연계 부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의 미흡 등을 보완한 정책 재구성의 기준이자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다만 기본사회가 의미하는 기본적인 삶의 구체적인 내용과 국가가 보장해야 할 수준에 대해서는 사회적·정책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섬.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사회의 개념과 보장 수준을 새롭게 정의하기보다, 기본사회라는 국정기조가 농어촌 삶의 질 정책에 갖는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고도화 방향을 검토함.

□ 이러한 관점에서 삶의 질 정책에 기본사회 기조를 반영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전환이 고려될 수 있음.

❍ 첫째, 삶의 질 향상이라는 포괄적 목표를 유지하되,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삶의 질 정책의 우선순위를 변화된 정책 환경과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를 중심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분야와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과제 중심으로 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정책 추진방식을 주민의 일상과 지역 여건을 더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방정부, 주민,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삶의 질 정책 영역 전반에 AI와 같은 첨단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의 거리와 인력 제약 등을 보완하고, 정책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변화는 기본적인 삶의 내용과 보장 수준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기본사회 관점에서 농어촌 삶의 질 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 및 추진방식을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변화된 국정기조와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제5차 기본계획의 전략체계와 정책 구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2.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 사례와 시사점[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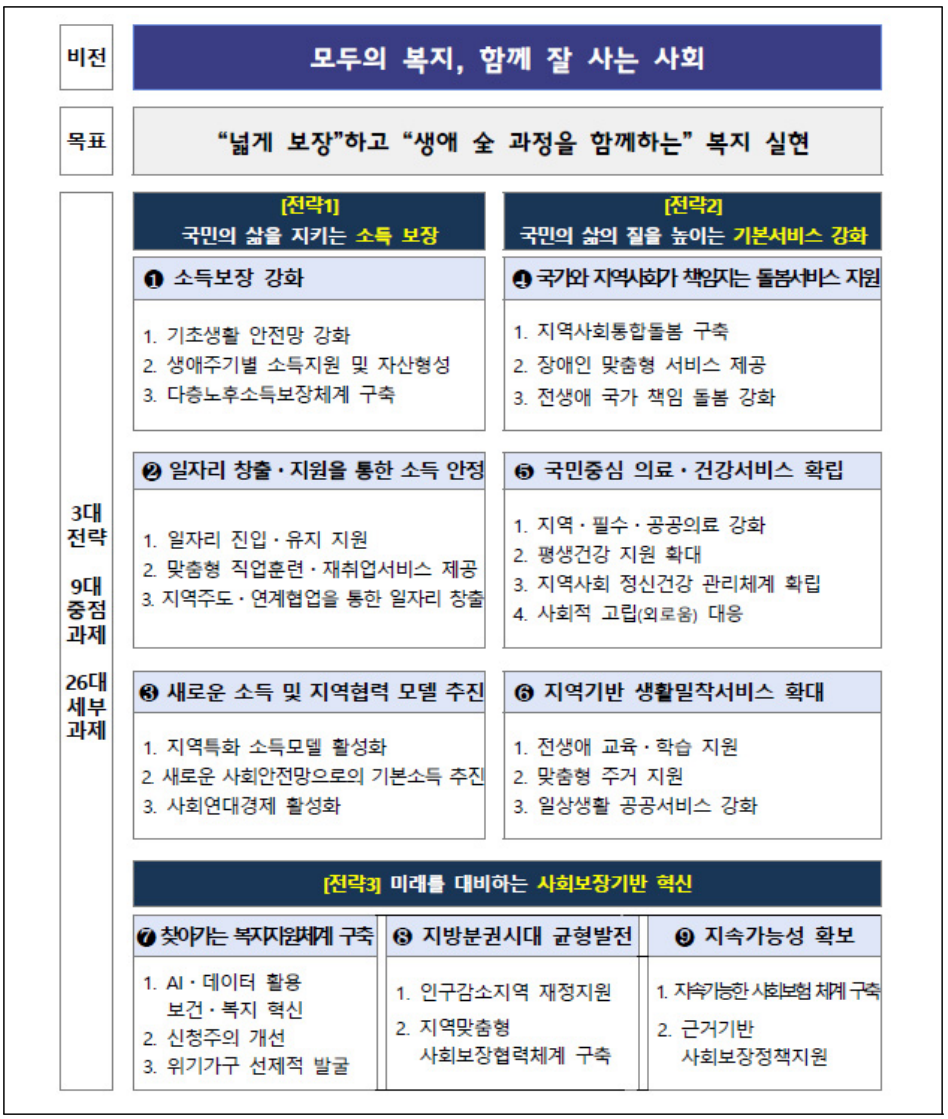
□ 상기한 바와 같이 기본사회는 하나의 정책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정 전반의 운영 원리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법정 기본계획에도 기본사회 기조를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 중임.

❍ 여기에서는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기본사회 기조가 기존 기본계획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고도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5. 26.)를 주로 참고함.

□ 2026년 5월 보건복지부는 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새 정부 국정 방향을 반영해 사회보장 정책 전반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정계획을 마련하였음.

〈그림 2-18〉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안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5. 26.).

□ ‘모두의 복지’를 복지 철학으로, 누구나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보편적 권리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회,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기본서비스의 질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사회,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 지역과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연대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복지의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를 지향함.

❍ 이에 따라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비전으로, ‘넓게 보장하고 생애 전 과정을 함께하는 복지 실현’을 목표로 제시함.

□ 수정계획의 3대 전략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으로 구성됨.

❍ ‘전략1.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은 ① 소득 불안정 확대 및 고용 형태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생활 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 다층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한 소득보장 강화, ② 노동시장 구조 변화 및 고용 불안정에 대응해 일자리 진입·유지와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지원을 통한 소득안정, ③ 지역 소멸 및 소득양극화에 대응해 지역특화 소득모델 발굴,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의 기본소득 추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득기반 체계 다양화를 중점과제로 제안함.

❍ ‘전략2.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는 ①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임신·출산부터 전 생애 돌봄 강화, ② 지역 간 의료 격차와 건강위험 증가에 대응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기능 강화, 평생 건강 지원 확대, 정신건강·사회적 고립 대응 강화, ③ 생활환경 변화와 복지 수요 다양화에 대응한 교육, 주거, 공공서비스 확대 및 기본사회를 위한 생활밀착 서비스 기반 구축을 중점과제로 제시함.

○ ‘전략3.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기반 혁신’은 ① AI·디지털 전환과 복지 접근성 한계에 대응해 AI·데이터 기반 서비스 연계 및 신청주의 개선, 위기가구 발굴·지원 고도화 등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 구축, ② 인구감소 및 지역 격차 확대에 대응한 인구 감소지역 재정지원과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협력체계 구축, ③ 복지 수요 증가와 재정 부담 확대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 체계 구축과 근거 기반 사회보장 정책 지향을 중점과제로 포함함.

〈그림 2-19〉 기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수정계획의 비교

구분	제3차 기본계획 (2024~2028)	제3차 수정계획 (2026~2030)
비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모두가 누리는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
목표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증진	**넓게 보장하고** **생애 전 과정을 함께 하는** **모두의 복지 실현**
과제 구성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 27대 세부과제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 **26대 세부과제**
정책 과제	**[1] 약자부터 촘촘한 복지** **취약계층 ·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별적 정책**	**[1]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성 강화,** 기존제도와 차별된 **대안적 대책**
	① 위기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 보호 ② 새로운 취약계층 복지수요 발굴·지원 ③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강화	① 소득보장 강화 ② 일자리창출·지원을 통한 소득 안정 ③ 새로운 소득 및 지역협력 모델 추진
	[2] 사회서비스 고도화 **민간 주도·시장 중심** 서비스 강화	**[2]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국가 주도 지역기반 보편적 서비스** 확대
	④ 수요맞춤형 사회서비스 실현 ⑤ 공급기반 혁신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⑥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④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돌봄서비스 지원 ⑤ 국민 중심 의료 · 건강서비스 확립 ⑥ 지역기반 생활밀착서비스 확대
	[3] 사회보장체계 혁신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중앙 중심 관리체계 확대**	**[3] 사회보장기반 혁신** **AI · 디지털 기술 활용, 중앙-지방 협력 강조**
	⑦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개혁 ⑧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⑨ 기술기반 서비스 행정체계 도입	⑦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 구축 ⑧ 지방분권시대 균형 발전 ⑨ 지속가능성 확보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5. 26.).

□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 사례는 기존 법정 기본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비전, 목표 및 전략체계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기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수정계획의 가장 큰 차이는 취약계층 보호 중심에서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전환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국정 방향과 맥을 같이함.

- 구체적으로, 수정계획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별적 정책에서 나아가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성 강화와 기존 제도와 차별화된 대안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으며, 민간·주도시장 중심의 서비스에서 국가 주도의 지역 기반 보편적 서비스로의 확대를 도모함. 또한,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와 중앙 중심의 관리체계 확대가 아닌, AI·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중앙-지방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이는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역시 기존 계획을 전면 개편하기보다 변화된 국정 기조가 기존 전략체계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를 우선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3.3. 국정과제와 제5차 기본계획 간 정합성 검토

□ 이에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제5차 기본계획 간의 정합성을 점검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정책 반영 수준과 정책 구성의 한계를 살펴보았음.

○ 기본사회를 비롯한 국정기조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정 시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고, 전략체계 재구성 및 정책과제 도출에 활용함.

❍ 국정과제 중 농어업인 및 농어촌 삶의 질과 관련된 과제를 선별하고,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제5차 기본계획의 3대 전략과 12개 주요과제, 정책군 및 세부과제(180개)와 매핑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함.

- 핵심 판단 기준은 '해당 과제가 농어촌 주민의 생활·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 여부임. 예컨대, 서비스(의료, 복지, 교육, 문화, 교통 등 개인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 소득·경제(일자리, 소득보전, 지역경제 등 개인 또는 지역의 경제 기반), 정주 환경(주거, 생활 인프라 등 생활 여건 변화), 지역 소멸 대응 등을 포함함.*

  * 거시경제·산업(수출, 제조업, 산업 경쟁력 등 국가·산업 단위 정책), 국가 운영(정부조직, 행정체계, 재정구조 등 제도·운영 중심), 노동제도 일반(근로시간, 노사관계, 노동법 등 전 국민 대상), 외교·안보(국방, 외교 정책 등 국가 차원 정책)는 무관으로 판단함. 다만, 전국 단위의 제도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농어촌 지역의 취약성, 접근성 격차, 생활여건 등을 고려할 때 농어촌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관 과제로 포함함.

- 각 국정과제는 3~5개의 꼭지(주요 내용)로 구성됨. 이 가운데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서비스·소득·생활여건 변화로 이어지는 내용 또는 농어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선별하여 매핑 대상으로 설정함.

❍ 정합성 분석은 국정과제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반영된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 '정합'은 기본계획에 해당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이 반영된 경우에 해당함.
- '부분 정합'은 기본계획에 해당 국정과제 주요 내용이 일부는 반영되었으나 일부는 반영되지 않은 경우임. 예컨대, 기존 사업은 있으나 정책 대상이나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 또는 정책 방향은 있으나 추진 수단이 미흡한 경우 등을 포함함.
- '미반영'은 기본계획에 해당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 현 정부 국정과제와 제5차 기본계획 간 정합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2-7〉.

○ 기존 기본계획은 대체로 보건·의료, 돌봄, 교육, 문화, 교통 등 주요 생활서비스 확충과 접근성 제고, 정주 환경 개선 등 전통적인 삶의 질 정책 영역에서 비교적 높은 정합성을 보였음.

○ 반면, 현 정부가 기본사회를 표방하며 강조하는 AI 전환 및 활용 확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주민자치 등 주민 참여형 정책체계 강화, 사회연대경제 육성, 안전한 일터와 생활환경 조성, 5극3특과 연계한 균형성장, 농어촌 기본소득 논의 등은 일부만 반영되었거나 미반영된 영역이 다수 확인되었음.

- 예를 들어 기존 기본계획에도 비대면 진료, 디지털 교육, 스마트빌리지 등 일부 디지털 기반 정책은 포함되어 있으나, 현 정부가 강조하는 'AI 기본사회'와 같이 AI를 사회 전반의 서비스 전달체계와 정책 운영 전반에 활용하는 수준의 정책 전환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 기존 기본계획은 농촌공간계획과 생활 SOC 확충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 정부의 5극3특 전략에서 강조하는 광역권-농어촌 연계 발전, 지역 간 기능 분담, 성장거점 육성 등과의 연계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 재생에너지 정책 역시 일부 에너지 인프라 개선 및 재생에너지 활용 수준의 논의는 포함되어 있으나, 현 정부 국정과제는 햇빛소득마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에너지 자립 및 이익공유 등 지역 주체의 참여와 경제 기반 확충, 지속 가능한 환경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표 2-7〉 현 정부 국정과제와 기존 5차 기본계획 간 정합성 분석 결과 요약

구분	주요 특징	주요 과제
정합	기존 삶의 질 정책과의 높은 연속성	▪ 보건·의료, 돌봄, 교육, 교통, 문화 등 필수 서비스 확충 ▪ 농촌재생 등 정주 환경 개선 ▪ 관광·지역특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 농업 육성 및 경영 안정 지원 ▪ 생활안전·재난대응 강화
부분 정합	기존 정책과 연계되나 정책 범위 확대 필요	▪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 생활인구 기반 지역 활력 정책 ▪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 ▪ 생태환경 보호 ▪ 청년·여성·이주민 등을 포용하는 노동·생활 정책 등
미반영	새로운 정책 기조 및 추진체계 중심	▪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농어촌 소득 안정 ▪ 금융·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사회연대경제 육성 ▪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한 주민자치권 확대 ▪ 지방재정 확충 및 지원 강화 ▪ AI 기반 사회 전환 ▪ 5극3특 정책과 연계한 균형성장

주: 총 53개 유관 과제 가운데, '정합' 25개, '부분 정합' 17개, '미반영' 11개.
자료: 연구진 작성.

4. 소결: 제5차 기본계획 고도화의 필요성

□ 오늘날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필수 생활서비스 기능 약화, 지역경제 침체, 공간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삶의 질 정책 역시 단순 서비스 공급 확대를 넘어 지역 활력 회복과 지속 가능한 지역 전환을 함께 요구받고 있음.

□ 제1~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정주 여건 개선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와 국정기조를 고려할 때, 제5차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와 전략체계, 정책과제의 보완이 요구됨.

○ 현 정부의 기본사회는 개별 정책이나 사업이라기보다 국정운영의 정책기조로서, 법정 기본계획에서는 비전과 목표, 전략체계에 반영되고 세부 정책과제를 통해 구체화됨.

○ 이에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의 경우, 기존 법정 기본계획의 틀 하에 변화된 국정 기조를 반영해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정책과제를 조정·보완하였음.

- 이는 기존 계획의 정책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국정기조와 정책환경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사례로, 제5차 기본계획의 고도화 방향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제5차 기본계획과 국정과제 간 정합성을 검토한 결과, 기존 삶의 질 정책과의 연속성은 유지되고 있으나, 5극3특 기반 지역균형발전, AI 전환, 주민참여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새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은 반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제5차 기본계획은 기존 삶의 질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정합성 분석에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정책 방향을 전략체계와 정책과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인식 및 정책 수요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변화된 정책 환경과 농어촌 여건을 반영하여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전략체계를 재구성·고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농어촌 주민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삶의 질 분야와 핵심과제, 주요 문제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기본계획의 정책 우선순위와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음.

○ (조사 대상) 전국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함.

○ (조사 기간) 2026년 5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진행됨.

○ (조사 방법) 연령대별 디지털 역량 차이를 고려하여 온라인 조사와 방문 조사(고령층 중심)를 병행함.

❍ (표본 설계) 읍·면 지역, 광역시·도, 연령대를 기준으로 인구 비례 배분하여 표본을 설계하였음. 단, 경기도의 경우 인구 규모에 따른 표본 과다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150부(목표 표본 1,500명의 10%)로 제한하였음.

- 유효 표본 수는 1,520명임. 실제 조사 결과 일부 지역 및 연령대에서 계획 표본과 응답 표본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분석 시에는 표본 설계 기준에 맞추어 가중치를 적용함.

❍ (조사 내용)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 영역의 우선순위, 정책 영역별 핵심과제의 우선순위, 핵심과제별 주요 문제와 원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및 개선방안, 추가 정책 수요 등을 조사함. 주요 조사 분야는 공공·생활서비스 여건, 소득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생활환경 등을 포함함.

❍ (분석 방법)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χ^2), 독립표본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음.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에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음. 모든 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분석 결과

2.1. 응답자 일반 특성

○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읍부(50.1%)와 면부(49.9%), 성별은 남성(49.6%)과 여성(50.4%)이 각각 유사한 비율로 분포하였음. 학력은 전문대 졸업 이상(38.0%)과 고등학교 졸업(37.0%)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응답자의 연령을 살펴본 결과, 70대 이상(24.3%)과 60대(22.5%)의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높았으며, 30대 이하(20.2%), 50대(19.0%), 40대(14.1%)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가운데 농림어축산업 종사자(44.2%)와 비농림어축산업 종사자(43.5%)가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으며, 주부/학생/무직/퇴직에 해당하는 비율은 12.2% 수준이었음. 한편, 귀농어·귀촌인은 전체 응답자의 15.0%로 나타남.
- 응답자의 가구 규모는 2인 가구가 44.2%로 가장 많았고, 3명(21.8%), 4명 이상(18.6%), 1명(15.4%)의 순이었음. 연간 가구 소득은 3천만 원대(18.6%)와 2천만 원대(17.9%)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1천만 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는 7.7%, 7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는 12.3%로 나타남.

〈표 3-1〉 응답자 일반 특성

구분		비율(%)
지역 구분	읍부	50.1
	면부	49.9
연령	30대 이하	20.2
	40대	14.1
	50대	19.0
	60대	22.5
	70대 이상	24.3
성별	남성	49.6
	여성	50.4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3
	중학교 졸업	13.7
	고등학교 졸업	37.0
	전문대 졸업 이상	38.0
직업	농림어축산업	44.2
	비농림어축산업	43.5
	주부/학생/무직/퇴직	12.2
귀농어·귀촌 여부	예	15.0
	아니오	85.0
가구 규모	1명	15.4
	2명	44.2
	3명	21.8
	4명 이상	18.6
가구 소득(연간)	1천만 원 미만	7.7
	1천만 원대	11.6
	2천만 원대	17.9
	3천만 원대	18.6
	4천만 원대	13.6
	5천만 원대	10.8
	6천만 원대	7.6
	7천만 원 이상	12.3

주: 가중치 적용 기준 N=1,500명.
자료: 연구진 작성.

2.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영역 우선순위

□ 여기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필수적인 공공·민간서비스 이용 여건, 소득·일자리 여건과 지역 활력, 집·생활환경 등 정주 여건 각각에 대한 인식과 삶의 질 측면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조사함.

□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소득·일자리 여건과 지역 활력을 가장 부정적으로, 집·생활환경 등 정주 여건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3개 영역 모두에서 30대 이하 청년층이 더 높은 연령층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p<.001$).

○ 공공·민간서비스 이용 여건의 경우 면부 거주가 읍부 거주자와 비교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p<.001$).

□ 한편,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1순위는 필수적인 공공·민간서비스 이용 여건이 꼽혔으며, 소득·일자리 여건과 지역 활력, 집·생활환경 등 정주 여건이 뒤를 이었음,

2.2.1. 삶의 질 관련 거주지역 여건에 대한 인식

□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공·민간서비스(의료, 돌봄, 교육, 교통 등)를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7%가 '(매우)그렇다'고 응답하였음. 전체 평균은 3.20점(5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였음.

○ 읍부 거주자가 '(매우)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8.0%(평균 3.31점)로 면부 거주자의 41.3%(평균 3.08점)에 비해 높게 나타나, 서비스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t=4.160$, $p<.001$).

❍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52.7%), 70대 이상(48.9%), 60대(47.0%), 40대(41.0%), 30대 이하(32.0%) 순으로 '(매우)그렇다' 비율이 높았음. 평균 점수는 50대(3.33점), 70대 이상(3.29점), 60대(3.28점), 40대(3.14점), 30대 이하(2.90점) 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F=8.504, p<.001), 사후검정 결과 30대 이하 청년층이 50대 이상 연령층과 비교해 지역 내 서비스 여건을 열악한 것으로 인식하였음.

〈표 3-2〉 필수 공공·민간서비스 이용 여건에 대한 인식

단위: %, 점(5점 리커트)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	보통	그런 편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6.1	21.9	27.4	35.6	9.1	3.20 (1.069)	-
지역 구분	읍부	4.7	17.7	29.6	37.8	10.2	3.31 (1.027)	4.160***
	면부	7.5	26.1	25.1	33.3	8.0	3.08 (1.099)	
연령	30대 이하(a)	12.6	22.2	33.2	26.2	5.8	2.90 (1.102)	8.504***
	40대(b)	6.7	20.2	32.1	35.1	5.9	3.14 (1.022)	
	50대(c)	5.0	19.3	23.1	42.8	9.9	3.33 (1.053)	
	60대(d)	3.1	22.4	27.5	37.0	10.0	3.28 (1.021)	
	70대 이상(e)	3.8	24.2	23.1	36.7	12.2	3.29 (1.081)	

주 1) *** p<.001, ** p<.01, * p<.05.
2) 사후검정 결과, 연령 집단(a<c, d, e)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p<.001).
자료: 연구진 작성.

□ 지역 내 생활에 필요한 소득 및 일자리 기회와 지역 활력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8.1%가 '(매우)그렇다'고 응답하여, 부정적인 응답 비율(34.9%)을 약간 상회하였음. 전체 평균은 3.08점(5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음.

❍ 읍부 거주자가 '(매우)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1.2%(평균 3.13점)로 면부 거주자의 34.9%(평균 3.02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읍·면 부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연령별로는 50대(42.9%), 60대(41.0%), 70대 이상(43.2%) 등 장노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매우)그렇다' 비율을 보인 반면, 40대는 36.7%, 30대 이하는 25.2% 수준에 그쳐,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 평균 점수 또한 50대(3.23점), 60대(3.21점), 70대 이상(3.16점), 40대(3.10점), 30대 이하(2.66점) 순으로 나타남. 사후검정 결과, 30대 이하 청년층의 평균 점수가 다른 모든 연령 집단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낮았음 ($F=12.431$, $p<.001$).

〈표 3-3〉 소득·일자리 여건 및 지역 활력에 대한 인식

단위: %, 점(5점 리커트)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	보통	그런 편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9.5	25.4	27.0	24.2	13.9	3.08 (1.194)	-
지역 구분	읍부	8.3	23.6	26.8	28.8	12.4	3.13 (1.157)	1.861
	면부	10.6	27.2	27.3	19.5	15.4	3.02 (1.229)	
연령	30대 이하(a)	17.6	28.9	28.2	20.6	4.6	2.66 (1.128)	12.431***
	40대(b)	8.7	22.4	32.3	23.1	13.6	3.10 (1.158)	
	50대(c)	6.5	23.9	26.7	26.0	16.9	3.23 (1.178)	
	60대(d)	8.0	21.2	29.9	23.5	17.5	3.21 (1.193)	
	70대 이상(e)	6.9	29.4	20.6	27.0	16.2	3.16 (1.209)	

주 1) *** $p<.001$, ** $p<.01$, * $p<.05$.
2) 사후검정 결과, 연령 집단(a < b, c, d, e)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p<.001$).
자료: 연구진 작성.

□ 전체 응답자의 64.1%는 집과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안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전체 평균은 3.73점(5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3.0점)을 상회하여, 응답자들이 체감하는 주거 및 정주 환경에 대한 평가는 다른 영역(서비스, 경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

〈표 3-4〉 집·생활환경 등 정주 여건에 대한 인식

단위: %, 점(5점 리커트)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	보통	그런 편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5	8.9	25.4	43.7	20.4	3.73 (0.937)	-
지역 구분	읍부	1.4	8.5	23.9	46.1	20.1	3.75 (0.919)	0.971
	면부	1.7	9.2	26.9	41.3	20.8	3.70 (0.955)	
연령	30대 이하(a)	5.1	11.0	33.3	37.7	12.9	3.42 (1.017)	10.371***
	40대(b)	1.9	8.5	28.4	42.5	18.7	3.68 (0.938)	
	50대(c)	0.9	7.5	25.6	44.5	21.6	3.78 (0.899)	
	60대(d)	0.3	8.0	21.2	46.8	23.7	3.86 (0.882)	
	70대 이상(e)	0.0	9.3	20.9	46.0	23.8	3.84 (0.893)	

주 1) *** p<.001, ** p<.01, * p<.05.
2) 사후검정 결과, '집과 생활환경 등이 쾌적하고 안전해서 살기 좋음' 항목에 대한 a < b (p<.05), 그리고 a < c, d, e (p<.001)의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자료: 연구진 작성.

○ 읍부 거주자 중 '(매우)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66.2%(평균 3.75점), 면부 거주자는 62.1%(평균 3.70점)로 나타나 읍부 거주자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그러나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연령 집단의 경우 연령이 더 높은 집단에서 긍정적 평가 비율이 높았음(40대 61.2%, 50대 66.1%, 60대 70.5%, 70대 이상 69.8%). 반면에 30대 이하 청년층의 긍정 응답 비율은 50.6%로 나타남. 연령 집단 간 평균 점수의 차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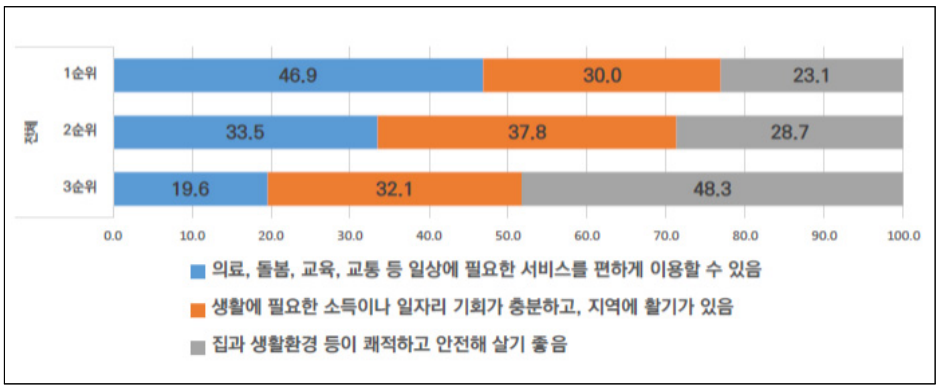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사후 검증 결과 30대 이하 청년층이 50대 이상 각 연령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F=10.371, p<.001).

2.2.2.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중요한 정책 영역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정책 영역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1순위 영역은 필수적인 공공·민간서비스 이용 여건으로 나타남(46.9%). 이어서 소득·일자리 여건과 지역 활력(30.0%), 집·생활환경 등 정주 여건(23.1%)의 순서로 나타났음.

〈그림 3-1〉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중요한 정책 영역(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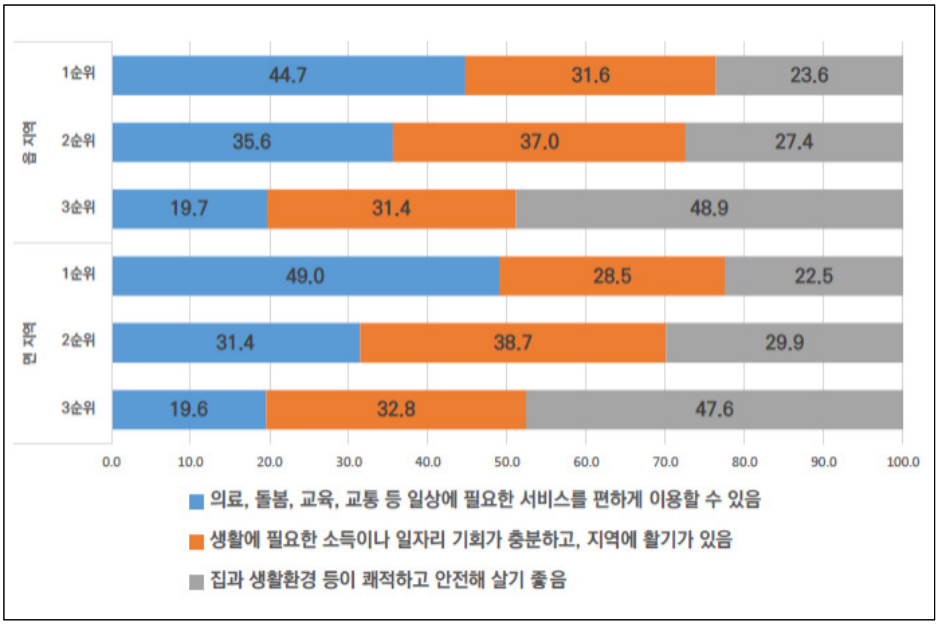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 읍부와 면부 역시 공통적으로 1순위는 필수적인 공공·민간서비스 이용 여건이었으며, 그 비율은 면부가 더 높았음(읍부 44.7%, 면부 49.0%). 2순위 또한 소득·일자리 여건과 지역 활력이었음(읍부 37.0%, 면부 38.7%).

〈그림 3-2〉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중요한 정책 영역(읍·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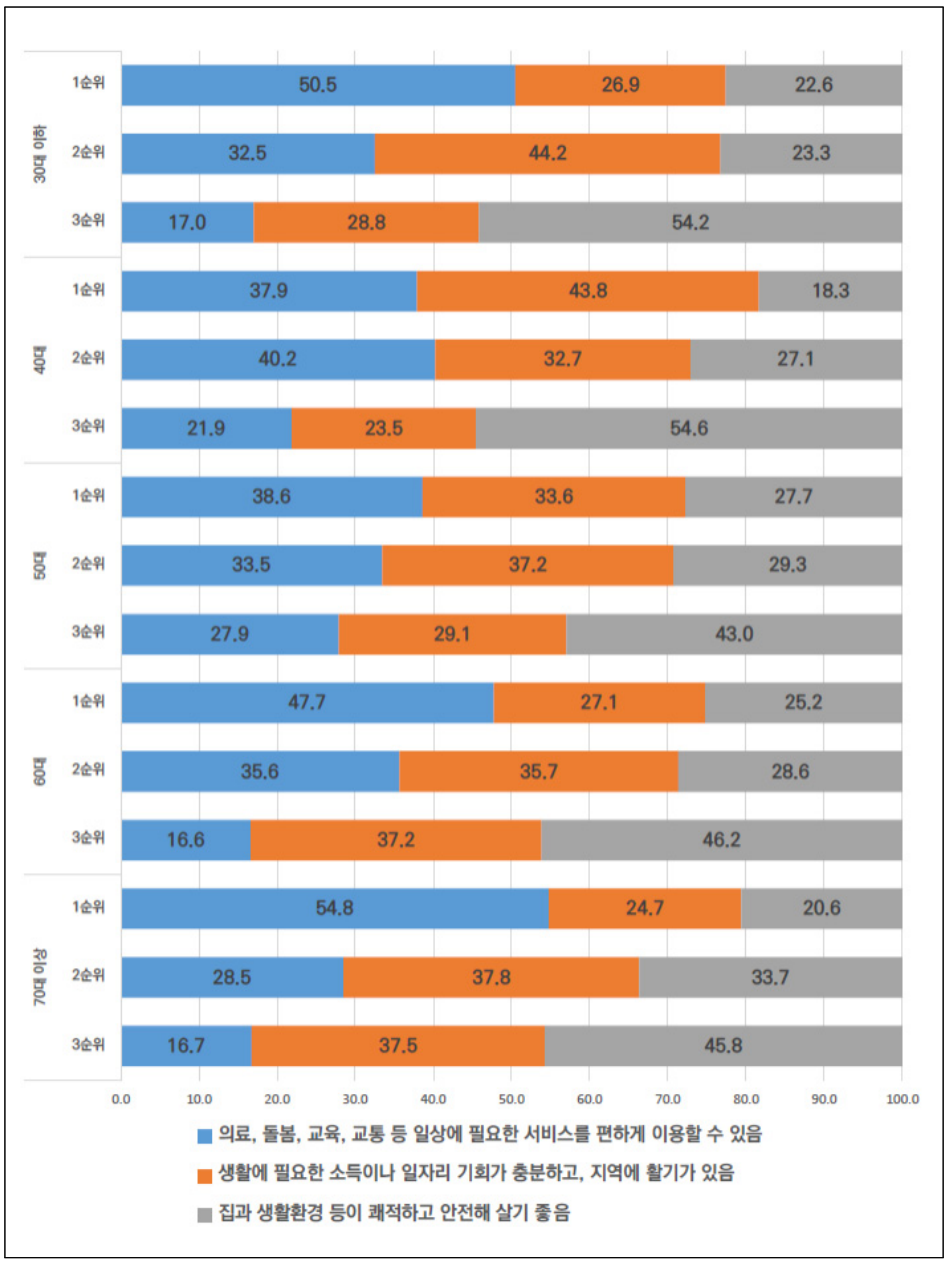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 집단의 1순위는 필수적인 민간·공공서비스 이용 여건이었음. 40대의 1순위는 소득·일자리 여건과 지역 활력이었으며(43.8%), 2순위가 필수적인 민간·공공서비스 이용 여건이었음.

〈그림 3-3〉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중요한 정책 영역(연령별)

단위: %



자료: 연구진 작성.

2.3. 정책 영역별 중요 과제

□ 상기 3개 영역별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할 때 삶의 질과 관련해 특히 중요한 항목을 순서대로 고르도록 하고, 각 항목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하였음.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고려할 때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필수 공공·민간서비스 이용 여건에서는 '병원·돌봄서비스 이용 편의성', 소득·일자리 여건 및 지역 활력과 관련해서는 '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안정적 확보', 집·생활환경 등 정주 여건에서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이 각각 꼽혔음.

❍ (필수 공공·민간서비스 이용 여건) 전체 응답자의 64.9%는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병원·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음. 이어 장보기, 세탁, 이미용, 목욕, 약 구입과 같은 '일상생활 서비스'(40.7%)를 응답하였으며. '버스 등 교통서비스'(40.3%), '교육문화·여가 활동'(30.2%), '금융·인터넷·통신 서비스'(23.9%)의 순으로 나타남.

- 읍부와 면부 거주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 역시 '병원·돌봄서비스'로 조사되었음(읍부 63.9%, 면부 65.9%). 읍부의 경우 '버스 등 교통서비스'(42.0%), '일상생활 서비스'(39.7%), '교육·문화·여가 활동'(29.9%), '금융·디지털·통신 서비스'(24.5%)의 순서로, 면부의 경우 '일상생활 서비스'(41.7%), '버스 등 교통서비스'(38.6%), '교육·문화·여가 활동'(30.6%), '금융·디지털·통신 서비스'(23.2%)의 순서로 뒤를 이었음.
- 연령대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에는 차이가 있었음. 40대 이상 연령 집단은 '병원·돌봄서비스'를 꼽은 반면(40대 55.3%, 50대 61.1%, 60대 74.7%, 70대 80.2%), 30대 이하 청년층은 '버스 등 교통서비스'(49.1%)를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

각하는 항목의 경우 40대 이상은 '일상생활 서비스'를(70대 이상은 '교통서비스'도 동일), 30대 이하 청년층은 '병원·돌봄서비스'를 꼽았음.

〈표 3-5〉 "필수 공공·민간서비스 이용 여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1+2순위)

단위: %, 점(5점 리커트)

구분		병원·돌봄서비스	교육·문화·여가 활동	버스 등 교통서비스	금융·인터넷·통신 서비스	일상생활 서비스
전체		64.9	30.2	40.3	23.9	40.7
지역 구분	읍부	63.9	29.9	42.0	24.5	39.7
	면부	65.9	30.6	38.6	23.2	41.7
연령	30대 이하	45.9	34.4	49.1	33.3	37.3
	40대	55.3	41.3	37.0	23.8	42.6
	50대	61.1	30.9	40.5	24.8	42.7
	60대	74.7	25.0	36.7	20.0	43.6
	70대 이상	80.2	24.7	38.1	18.9	38.1

주 1) 일상생활 서비스는 장보기, 세탁, 이미용, 목욕, 약 구입 등을 포함.
2) 1순위와 2순위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임.
자료: 연구진 작성.

○ (소득·일자리 여건 및 지역 활력) 응답자의 80.1%가 '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안정적 확보'가 거주하는 지역의 삶의 질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음. 이어 '다양하고 충분한 일자리'(58.7%), '방문·체류 기반 지역 활기'(36.8%), '이주자·이주민의 원활한 정착'(24.3%) 순서로 중요성을 인식하였음.

- 읍부와 면부 거주자 모두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안정적 확보'(읍부 80.8%, 면부 79.4%)를 우선적으로 꼽았고, '다양하고 충분한 일자리'(읍부 60.1%, 면부 57.4%), '방문·체류 기반 지역 활기'(읍부 35.8%, 면부 37.9%), '이주자·이주민의 원활한 정착'(읍부 23.4%, 면부 25.3%) 순으로 응답하였음.
- 모든 연령 집단도 동일한 응답 경향을 보였음. 가장 중요한 항목인 '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60대 84.3%, 50대 82.3%, 70대 이상 80.3%, 40대 81.2%, 30대 이하 72.6%의 순서로 나타났음.

〈표 3-6〉 "소득·일자리 여건 및 지역 활력"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1+2순위)

단위: %, 점(5점 리커트)

구분		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안정적 확보	다양하고 충분한 일자리	방문·체류 기반 지역 활기	이주자·이주민의 원활한 정착
전체		80.1	58.7	36.8	24.3
지역 구분	읍부	80.8	60.1	35.8	23.4
	면부	79.4	57.4	37.9	25.3
연령	30대 이하	72.6	66.5	40.3	20.6
	40대	81.2	56.4	35.2	27.1
	50대	82.3	63.1	32.4	22.3
	60대	84.3	55.7	36.5	23.5
	70대 이상	80.3	52.9	38.6	28.2

주: 1순위와 2순위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임.
자료: 연구진 작성.

○ (집·생활환경 등 정주 여건) 전체 응답자의 71.5%가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이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음. 이어서 '자연보전 및 재해·생활안전 대응'(52.7%), '주민 의견이 반영된 마을·주변 공간 활용'(41.2%), '기후변화 대응·친환경 농어업과 대체에너지 활용'(34.6%)의 순서로 응답하였음.

○ 읍부와 면부 거주자 역시 동일한 응답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구체적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읍부 70.7%, 면부 72.2%), '자연보전 및 재해·생활안전 대응'(읍부 55.7%, 면부 49.6%), '주민 의견이 반영된 마을·주변 공간 활용'(읍부 40.0%, 면부 42.4%), '기후변화 대응·친환경 농어업과 대체에너지 활용'(읍부 33.6%, 면부 35.7%)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역시 공통적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그 비율은 연령이 보다 높은 집단에서 더 컸음(30대 61.5%, 40대 70.8%, 50대 72.4%, 60대 74.4%, 70대 이상 76.6%). 30대 이하 청년층의 경우 '자연보전 및 재해·생활안전 대응'(61.1%)의 중요성도 유사한 수준으로 삶의 질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함.

〈표 3-7〉 "집·생활환경 등 정주 여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1+2순위)

단위: %, 점(5점 리커트)

구분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주민 의견이 반영된 마을·주변 공간 활용	자연보전 및 재해·생활안전 대응	기후변화 대응·친환경 농어업과 대체에너지 활용
전체		71.5	41.2	52.7	34.6
지역 구분	읍부	70.7	40.0	55.7	33.6
	면부	72.2	42.4	49.6	35.7
연령	30대 이하	61.5	49.2	61.1	28.2
	40대	70.8	42.8	53.8	32.5
	50대	72.4	40.0	50.8	36.8
	60대	74.4	33.0	51.5	41.2
	70대 이상	76.6	42.2	47.6	33.5

주 1) *** p<.001, ** p<.01, * p<.05.
2) 1순위와 2순위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임.
자료: 연구진 작성.

2.4. 중요 과제별 정책 수요

□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3개 영역별 세부 항목 중 거주지역의 삶의 질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요 어려움과 그 원인, 그리고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음.

□ 각 항목에 대한 분석은 앞서 해당 항목을 1순위 또는 2순위로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음. 이는 해당 항목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주민들의 문제의식과 정책 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임.

□ 주된 어려움은 응답자가 선택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하였고, 원인과 필요한 지원(정책 수요)은 응답자가 인식한 가장 큰 어려움(1순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관련 주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한편, 어려움이 발생하는 원인과 정책 수요 간의 연계성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하였음.

2.4.1. 필수 공공·생활서비스 이용 여건 영역에서의 정책 수요

□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 이용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응답자들이 경험하는 가장 주요한 어려움은 '이용할 수 있는 곳 부족'(59.3%)으로 나타남. 이어 '멀거나 이동 불편'(50.0%), '필요시 즉각 이용이 어려움'(21.6%)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읍·면부 및 모든 연령 집단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곳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음. 면부보다는 읍부 거주자(읍부 60.8%, 면부 57.8%), 연령 집단 중에서는 40대와 5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40대 64.5%, 50대 65.7%).

〈표 3-8〉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 이용 관련 주요 어려움(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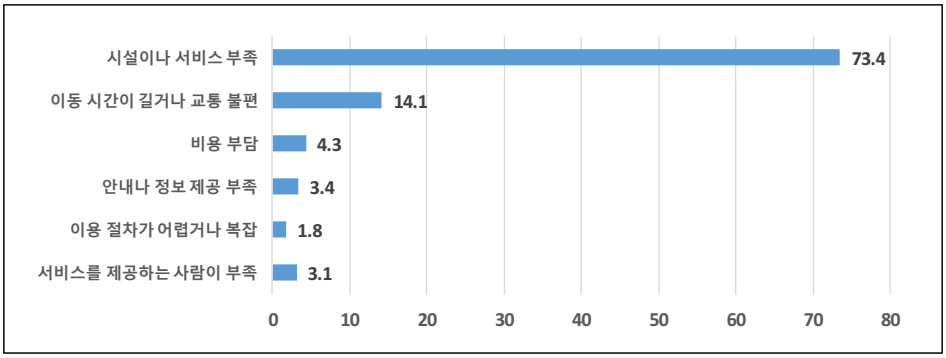
구분		이용할 수 있는 곳 부족	멀거나 이동 불편	비용 부담	이용 시간 맞추기 어려움	예약·대기 불편	필요시 즉각 이용 어려움	기타
전체		59.3	50.0	14.8	11.8	11.2	21.6	0.6
지역 구분	읍부	60.8	44.6	14.9	13.6	15.4	24.3	0.6
	면부	57.8	55.6	14.6	10.0	7.0	18.9	0.6
연령	30대 이하	53.1	52.2	19.6	26.3	17.4	27.9	0.0
	40대	64.5	45.3	18.1	10.8	19.1	25.6	2.2
	50대	65.7	37.7	9.8	12.4	11.8	21.3	0.8
	60대	56.8	51.6	10.6	8.5	9.7	23.4	0.6
	70대 이상	59.4	56.9	16.3	4.7	4.2	14.1	0.0

주 1) 응답자는 '필수 공공·민간서비스 이용 여건' 가운데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1순위 또는 2순위로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응답한 684명임.
2) 1순위와 2순위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로 합계는 100%를 초과함.
자료: 연구진 작성.

○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 이용 관련 가장 큰 어려움인 '이용할 수 있는 곳 부족'의 원인으로, 응답자들은 '시설이나 서비스 부족해서'(73.4%),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교통이 불편해서'(14.1%)를 주요하게 꼽았음.

〈그림 3-4〉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 이용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의 가장 큰 원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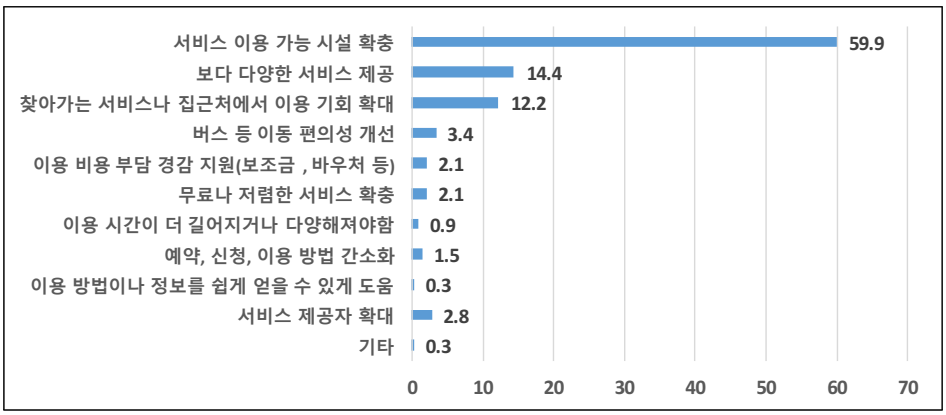


주 1) 최우선 문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곳 부족'을 선택한 응답자 32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자가 없어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더 많아져야 한다'(59.9%)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가 더 다양해져야 한다'(14.4%), '마을로 찾아오는 서비스나 집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12.2%) 등이 꼽혔음.

〈그림 3-5〉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 이용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를 위한 필요 지원

단위: %



주: 최우선 문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곳 부족'을 선택한 응답자 32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연구진 작성.

❍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 이용 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역에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주관식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지역 내 의료시설 확충, 교통편 확대, 방문·이동 서비스 확대와 같이 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졌음.

□ 교육·문화·여가 서비스 이용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교육·문화·여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 가장 주요한 문제는 '참여 프로그램·활동 부족'(52.1%)으로 나타남. 이어 '멀거나 이동이 불편'(40.6%), '참여 시간이나 일정을 맞추기 어려움'(31.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참여 프로그램·활동 부족’은 읍·면 거주자(읍부 50.6%, 면부 53.7%)와 각 연령 집단(30대 이하 41.1%, 40대 46.4%, 50대 55.4%, 60대 65.3%, 70대 이상 66.7%)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연령이 높을수록 해당 항목을 꼽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층과 40대 집단에서는 ‘멀거나 이동이 불편’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응답 비율도 유사한 수준으로 높았음(30대 이하 41.3%, 40대 44.0%).

〈표 3-9〉 교육·문화·여가 서비스 이용 관련 주요 어려움(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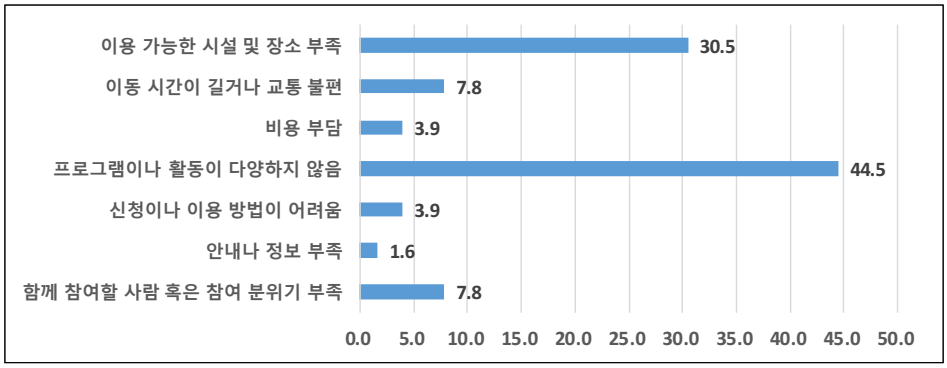
구분		참여 프로그램·활동 부족	멀거나 이동 불편	비용 부담	참여 시간 맞추기 어려움	신청·예약 불편	원하는 프로그램 찾기 어려움
전체		52.1	40.6	13.6	31.2	14.5	26.3
지역 구분	읍부	50.6	39.1	14.3	32.5	18.8	27.7
	면부	53.7	42.3	12.8	29.7	9.4	24.7
연령	30대 이하	41.4	41.3	20.3	40.4	24.7	28.7
	40대	46.4	44.0	15.3	33.6	9.9	27.2
	50대	55.4	39.9	6.2	20.7	14.4	31.8
	60대	65.3	35.3	5.7	25.8	6.3	23.9
	70대 이상	66.7	40.5	14.3	26.2	7.1	14.3

주 1) 응답자는 ‘필수 공공·민간서비스 이용 여건’ 가운데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1순위 또는 2순위로 ‘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응답한 318명임.
2) 1순위와 2순위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로 합계는 100%를 초과함.
3)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이 없어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교육·문화·여가 서비스 이용 관련 가장 큰 어려움인 ‘참여 프로그램·활동 부족’의 원인으로, 응답자들은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다양하지 않음’(44.5%)을 가장 많이 꼽았음. 그다음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 및 장소 부족’(30.5%), ‘이동 시간이 길거나 교통이 불편’·‘함께 참여할 사람 혹은 참여 분위기 부족’(7.8%)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음.

〈그림 3-6〉 교육·문화·여가 서비스 이용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의 가장 큰 원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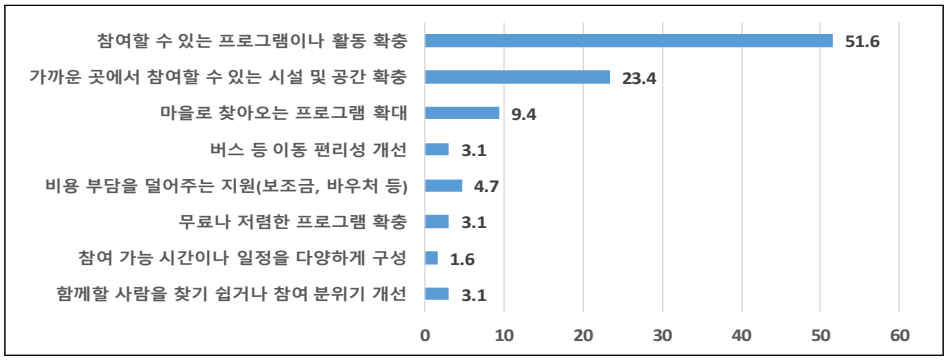


주 1) 최우선 문제로 '참여 프로그램·활동 부족'을 선택한 응답자 12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자가 없어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더 많아져야 한다'(51.6%)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가까운 곳에서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더 많아져야 한다'(23.4%), '마을로 찾아오는 프로그램 확대'(9.4%) 등이 뒤를 이었음.

〈그림 3-7〉 교육·문화·여가 서비스 이용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주 1) 최우선 문제로 '참여 프로그램·활동 부족'을 선택한 응답자 12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응답 항목 중 '신청이나 이용 방법 간소화' 및 '기타'는 응답자가 없어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주관식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다양화, 주거지 근거리 내 시설 확충 및 교통편 확충, 운영시간 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주요하게 확인되었음. 특히 읍부 주민은 직장인들을 고려한 운영시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면부 주민은 프로그램 다양화, 교통편 확충 및 시설 확충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 버스 등 교통서비스 이용

❍ 응답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교통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주요한 문제로 '희망 시간대 교통편 부족'(64.0%)을 꼽았음. 이어 '교통수단 부족'(52.4%)과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림'(24.8%) 등을 응답하였음.

- 읍·면 지역과 모든 연령대에서 '희망 시간대 교통편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읍부 65.3%, 면부 62.6%; 30대 이하 66.0%, 40대 67.7%, 50대 62.9%, 60대 64.2%, 70대 59.0%). 다만 70대 이상 연령 집단의 경우, '교통수단이 부족'을 꼽은 비율도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음(56.8%).

〈표 3-10〉 교통서비스 이용 관련 주요 어려움(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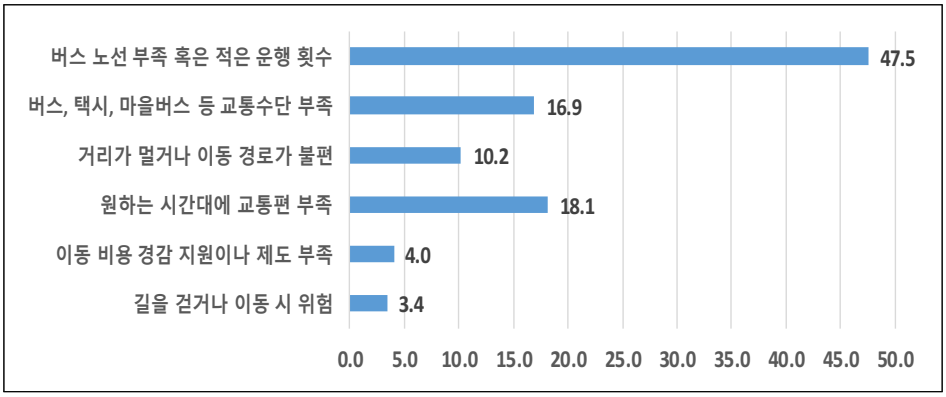
구분		교통수단 부족	희망 시간대 교통편 부족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림	비용 부담	이동 시 안전 위험
전체		52.4	64.0	24.8	18.9	15.7
지역 구분	읍부	46.7	65.3	27.6	19.1	20.6
	면부	58.9	62.6	21.6	18.6	10.3
연령	30대 이하	51.1	66.0	41.4	26.9	13.2
	40대	58.1	67.7	21.4	23.5	23.4
	50대	44.5	62.9	20.2	18.3	25.0
	60대	53.3	64.2	17.2	13.2	8.8
	70대 이상	56.8	59.0	10.2	8.0	12.5

주 1) 응답자는 '필수 공공·민간서비스 이용 여건' 가운데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1순위 또는 2순위로 '교통서비스'를 응답한 445명임.
2) 1순위와 2순위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로 합계는 100%를 초과함.
3)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이 없어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교통서비스 관련 가장 큰 어려움인 '희망 시간대 교통편 부족'의 원인으로, 응답자들은 '버스 노선 부족 혹은 적은 운행 횟수'(47.5%), '원하는 시간대에 교통편 부족'(18.1%), '버스, 택시, 마을버스 등 교통수단 부족'(16.9%) 등을 꼽았음.

〈그림 3-8〉 교통서비스 이용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의 가장 큰 원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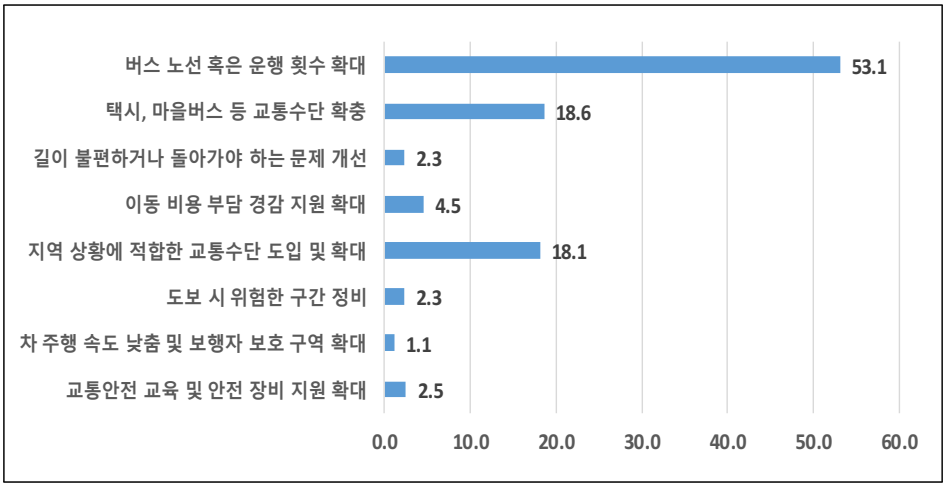


주 1) 최우선 문제로 '희망 시간대 교통편 부족'을 선택한 응답자 17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자가 없어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버스 노선 혹은 운행 횟수 확대'(53.1%)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택시, 마을버스 등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확충'(18.6%), 농촌형 수요응답형 버스나 택시와 같은 '지역 상황에 적합한 교통수단 도입 및 확대'(18.1%) 등이 뒤를 이었음.

〈그림 3-9〉 교통서비스 이용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주 1) 최우선 문제로 '희망 시간대 교통편 부족'을 선택한 응답자 17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자가 없어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교통서비스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역에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서술형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읍부와 면부 거주 응답자 모두 교통편 확충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음. 이어 운행 횟수 확대 및 배차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금융·인터넷·통신(전화) 서비스 이용

❍ 금융·인터넷·통신 서비스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은행 이용 및 인터넷·전화 사용 관련 서비스 이용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임. 응답자들은 금융업무와 관련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였으며, 인터넷이나 통신(전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응답은 더 적게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은행, 현금인출기 등 '금융업무 관련 시설·기기 부족'(48.5%)을 가장 주요하였으며,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없거나 접근이 불편한 '낮은 접근성'(48.4%)도 유사한 수준으로 많이 응답하였음.

- 읍부에서는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낮은 접근성'(50.8%)이, 면부에서는 관련 '시설·기기의 부족'(52.7%)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음.
-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에서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낮은 접근성'(53.3%)이, 그 외 연령대에서는 관련 '시설·기기 부족'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

〈표 3-11〉 금융·인터넷·통신(전화) 관련 주요 어려움(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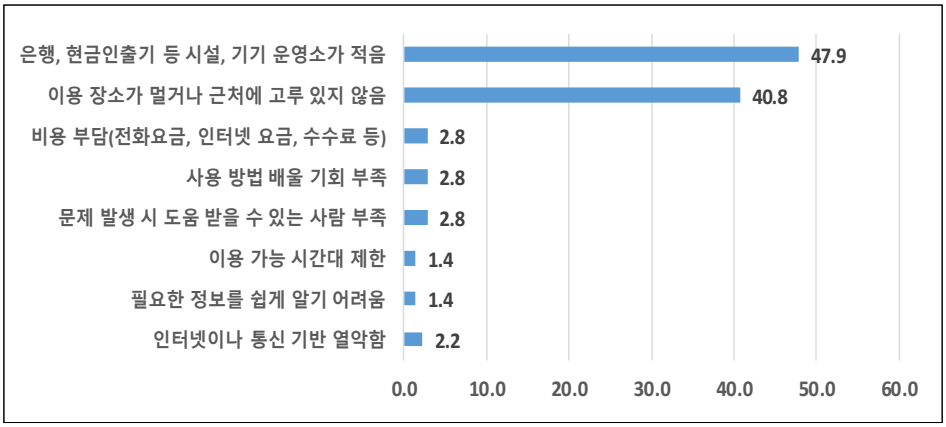
구분		금융 업무 시설·기기 부족	근거리 이용 어려움 및 접근불편	요금, 수수료 등 비용 부담	이용 방법이 어려움	문제 발생 시 도움받기 어려움	이용 시간대 제한	필요한 정보 찾기 어려움	인터넷·통신 사용환경 열악
전체		48.5	48.4	18.6	11.1	17.9	12.7	9.6	8.1
지역 구분	읍부	45.1	50.8	19.5	10.4	20.9	14.9	10.1	7.8
	면부	52.7	45.3	17.5	12.1	14.1	9.8	9.0	8.5
연령	30대 이하	46.0	53.3	22.4	11.9	16.4	14.7	12.5	10.9
	40대	53.3	51.0	22.2	6.8	19.6	10.2	3.4	10.0
	50대	54.5	50.9	13.0	0.0	24.7	16.1	5.5	2.9
	60대	48.2	45.0	12.0	16.4	16.5	4.2	11.2	4.2
	70대 이상	41.7	29.2	16.7	25.0	12.5	12.5	12.5	8.3

주 1) 응답자는 '필수 공공·민간서비스 이용 여건' 가운데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금융·인터넷·통신(전화)'을 1순위 또는 2순위로 응답한 190명임.
2) 1순위와 2순위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임.
3)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이 없어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금융·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 관련 가장 큰 어려움인 '금융 업무 시설·기기 부족'의 주된 원인으로는 '은행, 현금인출기 등 시설·기기를 운영하는 곳이 적음'(47.9%), '이용 장소가 멀거나 근처에 고루 있지 않음'(40.8%)이 지적되었음.

〈그림 3-10〉 금융·인터넷·통신(전화)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의 가장 큰 원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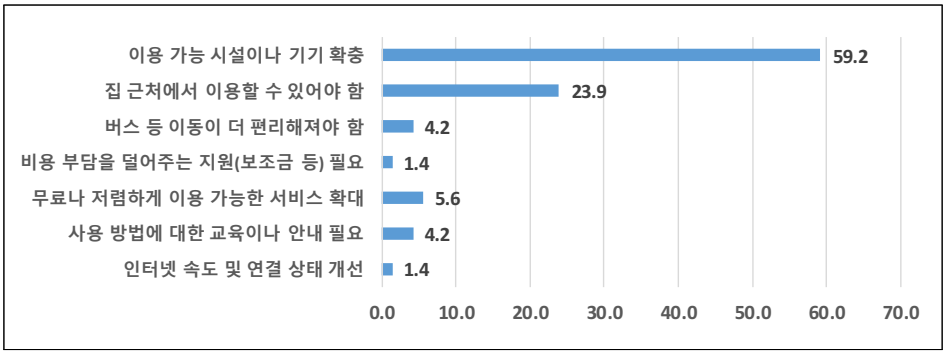
주 1) 최우선 문제로 '금융 업무 시설·기기 부족'을 선택한 응답자 7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이 없어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으로는 '이용 가능 시설이나 기기 확충'(59.2%),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함'(23.9%) 등이 주요하게 언급되었음.

❍ 금융·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역에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 지 주관식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읍·면부 거주자 모두 ATM기, 현금인출기 등의 금융시설 확충, 시설 접근성 및 이동 편의성 개선, 이용 수수료 등 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그림 3-11〉 금융·인터넷·통신(전화)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주 1) 최우선 문제로 '금융 업무 시설·기기 부족'을 선택한 응답자 7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응답 항목 중 '문제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함', '이용 시간 확대 및 다양한 시간 대 확보', '이용 방법 및 정보에 대한 안내 필요' 및 '기타'는 응답자가 없어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음.
자료: 연구진 작성.

□ 일상 서비스 이용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장보기, 세탁, 목욕, 이·미용, 약 구입 등 일상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응답자들이 경험하는 주요한 어려움은 '거리가 멀거나 이동이 불편'(49.8%)하다는 점이 꼽혔음. 이어 '이용할 수 있는 곳 부족'(49.5%), '한 곳에서 여러 서비스 이용이 어려움'(25.4%)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 읍부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곳 부족'(46.8%)이, 면부에서는 '거리가 멀거나 이동이 불편'(55.7%)하다는 점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음.

-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층과 60대 및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멀거나 이동 불편'을, 40·50대는 '이용할 수 있는 곳 부족'을 주요하게 응답하였음.

〈표 3-12〉 일상 서비스 이용 관련 주요 어려움(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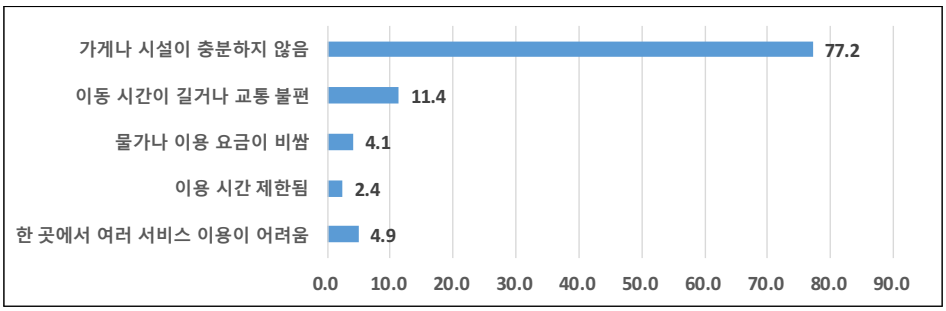
구분		이용할 수 있는 곳 부족	멀거나 이동이 불편	비용 부담	이용 시간 맞추기 어려움	대기 시간 오래 걸림	이용 방법 찾기 어려움	한 곳에서 서비스 이용 어려움
전체		49.5	49.8	16.4	10.6	12.5	5.2	25.4
지역 구분	읍부	46.8	43.7	21.9	14.7	13.5	5.4	27.9
	면부	52.1	55.7	11.1	6.7	11.6	5.0	23.0
연령	30대 이하	41.4	49.0	26.6	18.8	17.2	9.2	19.4
	40대	57.7	38.3	13.9	13.0	11.0	8.3	33.3
	50대	58.5	42.0	14.1	9.5	12.5	2.8	27.5
	60대	52.7	57.3	10.8	9.0	11.2	5.0	22.9
	70대 이상	42.1	59.1	13.2	1.3	9.2	0.0	27.6

주 1) 응답자는 '필수 공공·민간서비스 이용 여건' 가운데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1순위 또는 2순위로 '일상 서비스'를 응답한 374명임.
2) 1순위와 2순위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임.
3)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자가 없어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일상 서비스 관련 가장 큰 어려움인 '멀거나 이동이 불편'의 주된 원인으로, 응답자들은 이용할 수 있는 '가게나 시설이 충분하지 않음'(77.2%), '이동 시간이 길거나 교통이 불편'(11.4%), '한 곳에서 여러 서비스 같이 이용하기가 어려움'(4.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3-12〉 일상 서비스 이용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의 가장 큰 원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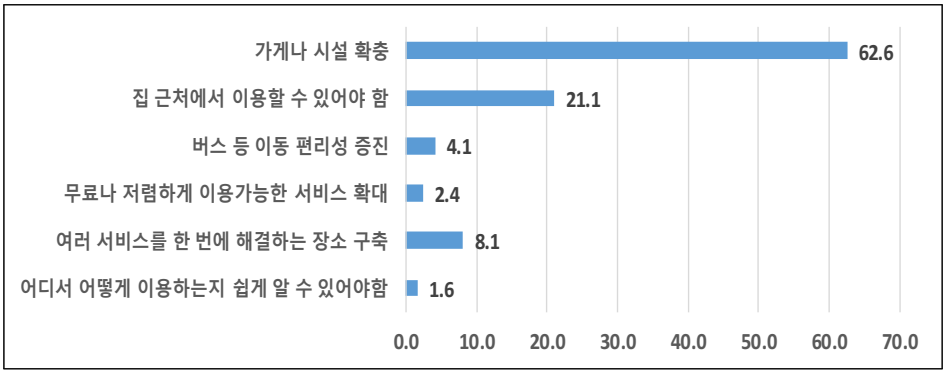


주 1) 최우선 문제로 '멀거나 이동이 불편'을 선택한 응답자 12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응답 항목 중 '운영 인력 부족 혹은 잦은 교체, 필요한 정보를 알기 어려움' 및 '기타'는 응답자가 없어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가게나 시설 확충'(62.6%)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함'(21.1%),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하는 장소 구축'(8.1%)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그림 3-13〉 일상 서비스 이용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주 1) 최우선 문제로 '멀거나 이동 불편'을 선택한 응답자 12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응답 항목의'이용 비용 부담 경감 지원' 및 '기타'는 응답자가 없어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일상 서비스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역에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주관식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읍·면부 응답자 모두 생활편의시설 확충, 대중교통 콜버스 등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통한 교통 이동 서비스 확대,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하기 등의 요구가 주요하였음.

2.4.2. 소득·일자리 여건 및 지역 활력 영역에서의 정책 수요

□ 소득

○ 응답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소득 관련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활에 필요한 소득 부족'(80.8%)을 꼽았으며, 이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음'(69.7%)을 지적하였음. 이 같은 경향은 읍·면부 거주자와 각 연령 집단에서도 동일하였음.

〈표 3-13〉 소득 관련 주요 어려움(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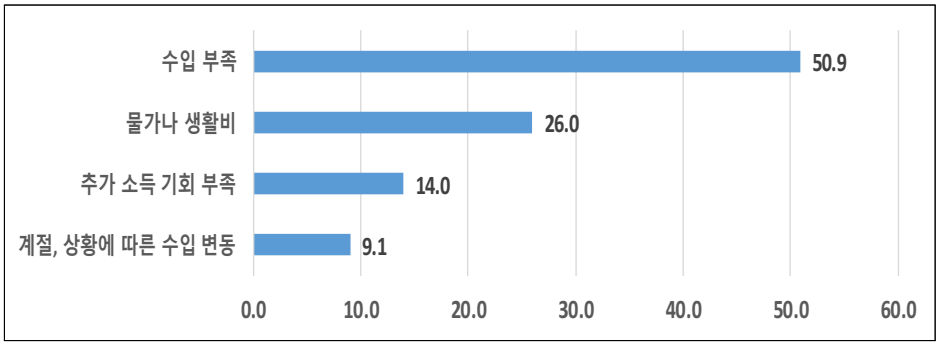
구분		생활에 필요한 소득 부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음
전체		80.8	69.7
지역 구분	읍부	85.5	70.6
	면부	75.5	68.8
연령	30대 이하	91.3	79.8
	40대	86.4	71.1
	50대	77.1	75.4
	60대	70.8	69.0
	70대 이상	77.8	51.6

주 1) 응답자는 '소득·일자리 여건 및 지역 활력' 관련하여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1순위 또는 2순위로 '소득'을 응답한 645명임.
2) 1순위와 2순위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로 합계는 100%를 초과함.
3)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이 없어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생활에 필요한 소득 부족'의 주된 원인으로, 응답자들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부족해서'(50.9%), '물가나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26.0%), '추가 소득 기회가 부족해서'(14.0%) 등의 순서로 많이 답하였음.

〈그림 3-14〉 소득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의 가장 큰 원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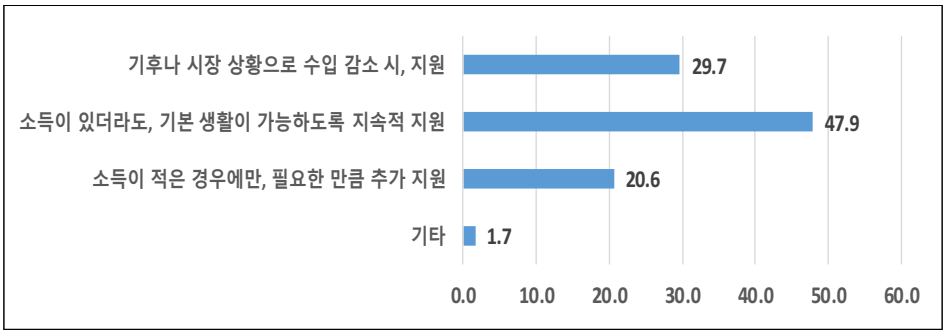


주 1) 최우선 문제로 '생활에 필요한 소득 부족'을 선택한 응답자 4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이 없어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소득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47.9%)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기후나 시장 상황으로 수입이 줄어들 때 보충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29.7%), '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필요한 만큼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20.6%)가 뒤를 이었음.

〈그림 3-15〉 소득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주: 최우선 문제로 '생활에 필요한 소득 부족'을 선택한 응답자 4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연구진 작성.

❍ 소득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역에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주관식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바우처 등을 통한 생활비 물가 부담 완화, 교통비·생활비 등의 경제적 지원, 기본소득 등에 대한 요구가 주요하게 언급되었음. 읍·면부 거주자 모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면부 거주자의 경우 농어업인 소득 안정에 대한 요구도 나타났음.

□ 일자리

❍ 응답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일자리와 관련해 체감하는 주요 문제로 '지역 내 일자리·창업 기회 부족'(72.0%)을 꼽았음. 이어 '원하는 조건(임금·근무시간 등)의 일자리 부족'(43.1%), '경험이나 능력을 살릴 일자리 기회를 찾기 어려움'(23.9%)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이 같은 경향은 읍·면부 거주자와 각 연령 집단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음.

〈표 3-14〉 일자리 관련 주요 어려움(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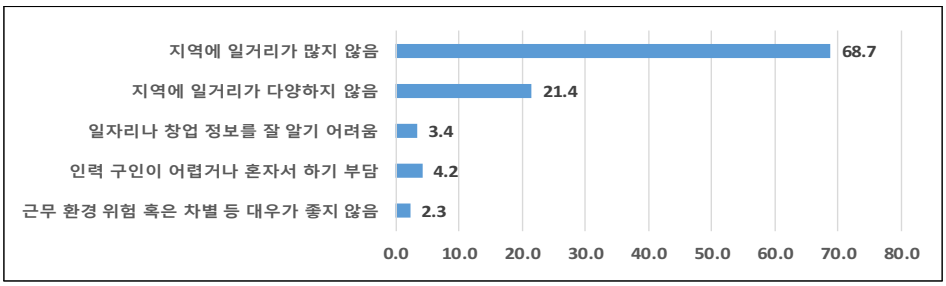
구분		일자리·창업 기회 부족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 부족	경험이나 능력 활용 기회 찾기 어려움	정보를 얻기 어려움	열악한 근무 환경이나 여건
전체		72.0	43.1	23.9	14.2	10.7
지역 구분	읍부	68.8	44.1	24.2	15.6	12.3
	면부	75.9	41.9	23.5	12.5	8.8
연령	30대 이하	63.8	51.8	34.5	15.1	19.5
	40대	65.1	53.3	25.4	19.7	14.4
	50대	70.7	48.2	26.5	9.7	8.9
	60대	81.7	28.1	16.1	16.0	0.9
	70대 이상	83.5	29.7	8.8	11.0	5.5

주 1) 응답자는 '소득·일자리 여건 및 지역 활력' 관련하여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1순위 또는 2순위로 '일자리'를 1순위 또는 2순위로 응답한 581명임.
2) 1순위와 2순위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로 합계는 100%를 초과함.
3)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이 없어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가장 큰 어려움인 ‘일자리·창업 기회 부족’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응답자들은 ‘지역에 할 수 있는 일거리가 많지 않음’(68.7%), ‘지역에 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음’(21.4%) 등을 꼽았음.

〈그림 3-16〉 일자리·창업 등 지역경제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의 가장 큰 원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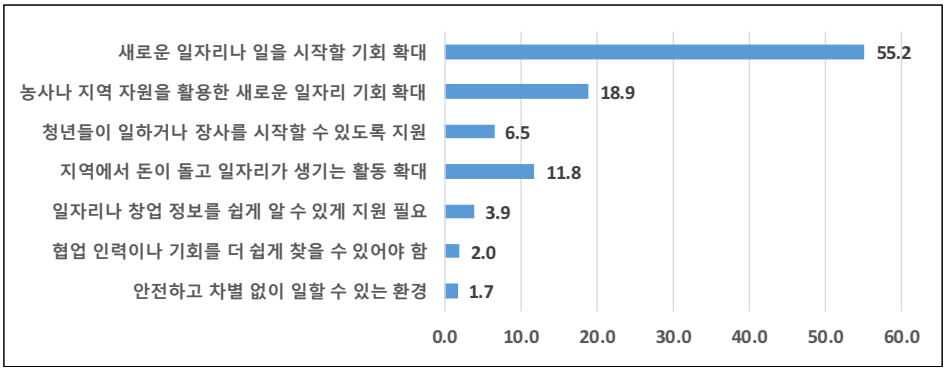


주 1) 최우선 문제로 ‘일자리·창업 기회 부족’을 선택한 응답자 35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자가 없어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나 일을 시작할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55.2%)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또한 로컬푸드, ‘농사나 지역에서 나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18.9%), 지역장터 등과 같이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일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늘어나야 한다’(11.8%) 등의 요구가 주요하였음.

〈그림 3-17〉 일자리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주 1) 최우선 문제로 '일자리·창업 기회 부족'을 선택한 응답자 35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자가 없어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일자리와 관련해 지역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주관식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대한 요구 외에도 청년·노인 등 대상자 맞춤 일자리 지원, 지역 내 대기업 유치 등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었음. 읍·면부 응답자 모두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두드러졌음.

□ 타 지역 사람들의 방문·체류와 지역 활력

❍ 응답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타 지역 사람들의 방문·체류와 지역 활력과 관련해 인식하는 주요한 어려움으로 '타 지역 주민 방문이 적음'(67.6%)이었음. 이어 '찾아와도 오래 머무르지 않고 금방 떠남'(57.3%), '지역에 사람이 모이거나 활기가 느껴지지 않음'(45.4%) 등을 꼽았음.

- 읍·면부 응답자 역시 '타 지역 주민 방문이 적음'을 주요 어려움으로 인식하였음. 반면 연령의 경우, 연령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났음. 40대와 60대 이상 집단은 '타 지역 주민 방문이 적음'을, 30대 이하 청년층과 50대의 경우 '찾아와도 오래 머무르지 않고 금방 떠남'을 주요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꼽

았음. 다만 50대 집단의 경우 타 지역 주민 방문이 적음에 대한 응답 비율도 유사한 수준으로 높았음.

〈표 3-15〉 방문·체류와 지역 활력 관련 주요 어려움(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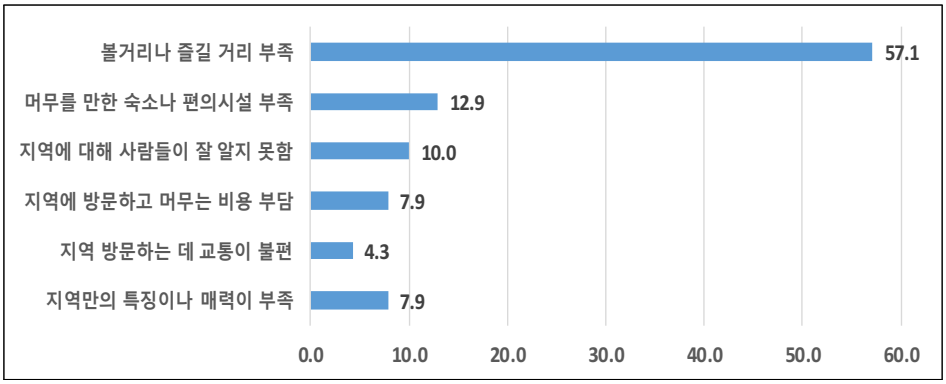
구분		타 지역 주민 방문이 적음	오래 머무르지 않고 금방 떠남	사람이 모이거나 활기가 느껴지지 않음
전체		67.6	57.3	45.4
지역 구분	읍부	67.8	61.7	44.5
	면부	67.5	53.0	46.2
연령	30대 이하	67.8	74.2	48.0
	40대	72.8	52.4	50.5
	50대	58.5	59.0	53.5
	60대	65.7	46.1	36.5
	70대 이상	71.9	40.4	36.8

주 1) 응답자는 '소득·일자리 여건 및 지역 활력' 관련하여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1순위 또는 2순위로 '타 지역 사람 방문·체류 등 지역 활기'를 1순위 또는 2순위로 응답한 312명임.
2) 1순위와 2순위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로 합계는 100%를 초과함.
3)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자가 없어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가장 큰 어려움인 '타 지역 주민 방문이 적음'의 주된 원인으로, 응답자들은 '지역을 찾은 사람들의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부족'(57.1%), '머무를 만한 숙소나 편의시설이 부족'(12.9%), '지역에 대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함'(10.0%) 등을 지적하였음.

〈그림 3-18〉 방문·체류와 지역 활력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의 가장 큰 원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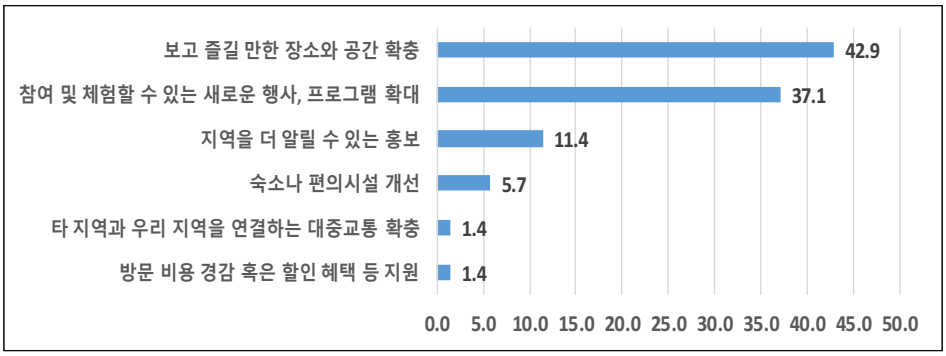


주 1) 최우선 문제로 '타 지역 주민 방문이 적음'을 선택한 응답자 14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자가 없어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보고 즐길 만한 장소와 공간 확충'(42.9%)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참여 및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행사, 프로그램 확대'(37.1%), '지역을 더 알릴 수 있는 홍보'(11.4%)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음.

〈그림 3-19〉 방문·체류와 지역 활력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주 1) 최우선 문제로 '타 지역 주민 방문이 적음'을 선택한 응답자 14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자가 없어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타 지역 사람들의 방문·체류 및 지역 활력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주관식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관광·문화·체험 콘텐츠 확충,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 홍보 마케팅 강화에 대한 요구가 주요하였음. 읍·면부 응답자 모두 관광·문화·체험 콘텐츠 확충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음.

□ 타 지역 사람들의 이주와 정착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응답자들이 타 지역 사람들의 이주·정착과 관련해 경험하는 가장 주요한 어려움은 '이주해 오는 타 지역 주민이 적음'(69.0%)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과 지역 주민이 어울리기 어려움'(45.8%), '이주해 온 사람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음'(43.2%) 등의 순서로 많이 응답하였음.

- 상기 경향은 읍·면부 응답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음. 반면, 연령 집단의 경우 30대 이하 청년층은 다른 연령 집단과 달리 '이주해 온 사람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음'(65.9%)을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이주 주민과 지역 주민 간 어울림이 어려움'을 유사한 수준으로 많이 응답하였음(65.0%).

〈표 3-16〉 타 지역 주민의 이주와 정착 관련 주요 어려움(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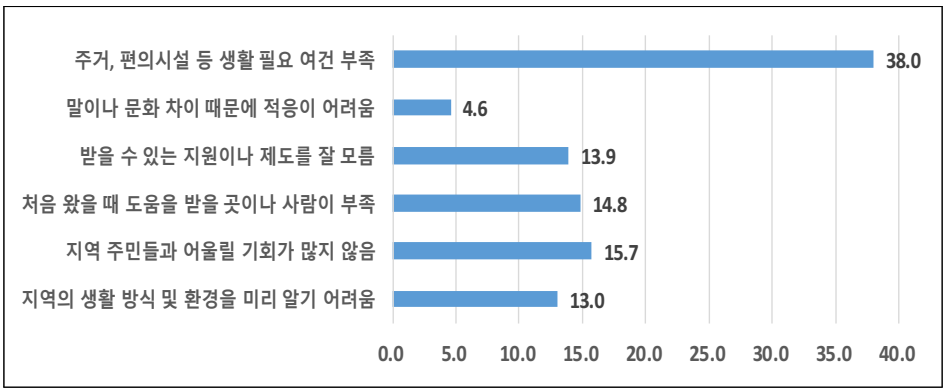
구분		이주해 오는 타 지역 주민이 적음	이주 주민과 지역 주민 간 어울림이 어려움	이주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겪음
전체		69.0	45.8	43.2
지역 구분	읍부	65.2	54.6	49.4
	면부	72.6	37.5	37.3
연령	30대 이하	60.5	65.0	65.9
	40대	66.2	49.8	58.5
	50대	78.8	53.8	14.6
	60대	73.7	26.3	23.6
	70대 이상	70.6	33.3	39.2

주 1) 응답자는 '소득·일자리 여건 및 지역 활력' 관련하여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1순위 또는 2순위로 '이주자 정착'을 1순위 또는 2순위로 응답한 186명임.
2) 1순위와 2순위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로 합계는 100%를 초과함.
3)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자가 없어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이주해 오는 타 지역 주민이 적음’의 주된 원인으로, 응답자들은 ‘주거, 편의시설 등 생활 필요 여건 부족’(38.0%), ‘지역 주민과 어울릴 기회가 많지 않음’(15.7%), ‘처음 왔을 때 도움받을 곳이나 사람이 부족(14.8%)’ 등을 꼽았음.

〈그림 3-20〉 타 지역 주민의 이주와 정착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의 가장 큰 원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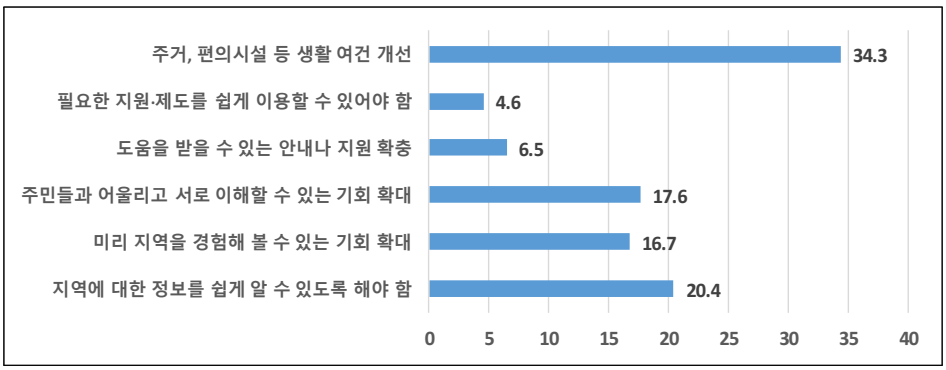


주 1) 최우선 문제로 ‘이주해 오는 타 지역 주민이 적음’을 선택한 응답자 108명을 분석함.
2)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자가 없어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응답자들은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주거, 편의시설 등 생활 여건 개선’(34.3%), ‘지역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20.4%), ‘주민들과 어울리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확대’(17.6%) 등을 꼽았음.

〈그림 3-21〉 타 지역 주민의 이주와 정착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주 1) 최우선 문제로 '이주해 오는 타 지역 주민이 적음'을 선택한 응답자 108명을 분석함.
2)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자가 없어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타 지역 주민의 이주·정착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역에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주관식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생활여건 편의시설(마트, 병원, 교육시설 등) 개선, 주민 화합 및 소통(만남의 장, 친목의 자리 마련 등), 이주민 정착 지원 혜택 확대에 대한 요구가 주요하였음. 특히 읍부 응답자는 주민 화합·소통에 대한 요구가, 면부 응답자는 생활여건 및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졌음.

2.4.3. 집·생활환경 등 정주 여건 영역에서의 정책 수요

□ 주거환경

○ 응답자들이 꼽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 관련 가장 큰 어려움은 '주택 단열 미흡'(43.1%)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주택 노후화·관리 미흡으로 인한 불편'(38.6%), '난방·연료 이용 불편'(33.0%) 등의 순서로 많이 응답하였음.

- 상기 경향은 읍·면부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났음. 반면 연령 집단의 경우, 60대는 '노후화로 인한 불편'(48.1%)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아, '주택 단열

미흡’을 가장 많이 응답한 다른 연령 집단과 차이가 있었음. 다만, 60대에서도 ‘주택 단열 미흡’은 유사한 수준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음.

〈표 3-17〉 주거환경 관련 주요 어려움(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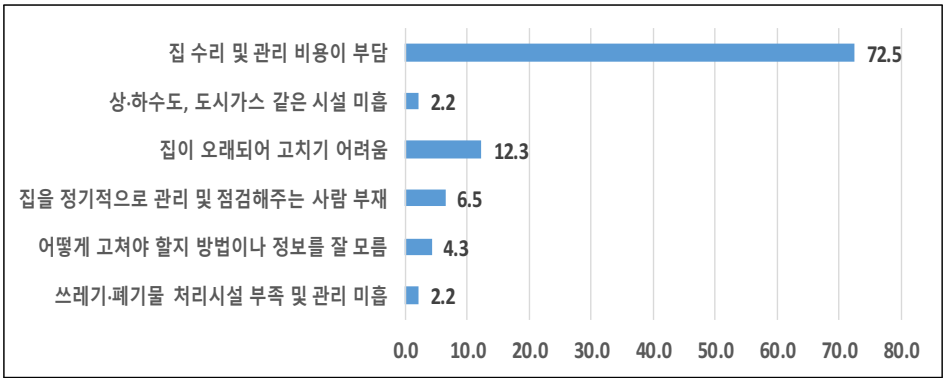
구분		주택 노후화·관리 미흡으로 인한 불편	주택 단열 미흡	급·배수 환경이 불편함	난방·연료 이용 불편	계단 등 집안에서 이동 불편	생활환경이 쾌적하지 않음	기타
전체		38.6	43.1	13.4	33.0	17.8	11.4	0.2
지역 구분	읍부	36.0	40.2	14.3	38.4	20.4	11.8	0.4
	면부	40.9	45.9	12.6	27.9	15.3	11.0	0.0
연령	30대 이하	34.1	43.5	24.7	35.9	22.6	19.4	0.9
	40대	34.6	35.3	15.7	49.4	18.3	13.0	0.0
	50대	34.2	39.9	13.9	29.8	19.4	16.3	0.0
	60대	48.1	46.1	10.2	25.7	14.4	6.0	0.0
	70대 이상	40.1	47.2	4.7	28.4	14.9	4.7	0.0

주 1) 응답자는 ‘집·생활환경 등 정주 환경’ 가운데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1순위 또는 2순위로 ‘주거환경’을 응답한 481명임.
2) 1순위와 2순위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로 합계는 100%를 초과함.
자료: 연구진 작성.

❍ ‘주택 단열 미흡’의 주된 원인으로는 ‘집수리 및 관리 비용 부담’(72.5%), ‘집이 오래되어 고치기 어려움’(12.3%), ‘집을 정기적으로 관리 및 점검해 주는 사람 부재(6.5%) 등의 순서로 많이 응답하였음.

〈그림 3-22〉 주거환경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의 가장 큰 원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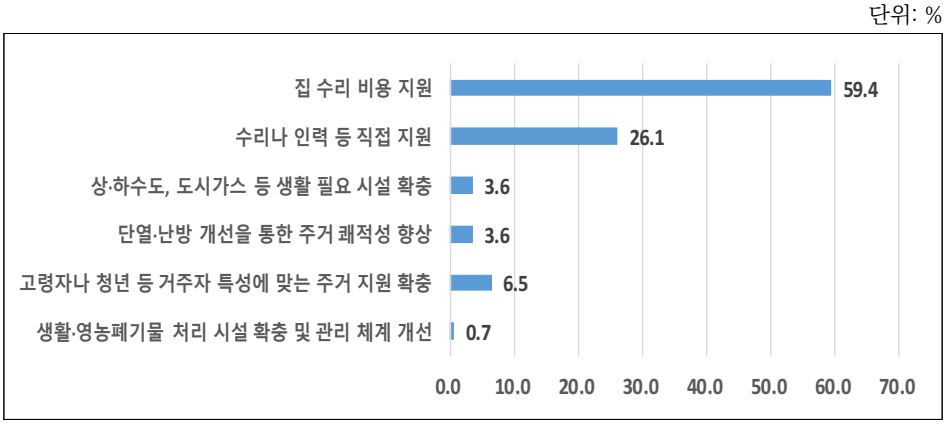


주 1) 최우선 문제로 '주택 단열 미흡'을 선택한 응답자 13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자가 없어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상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원으로는 '집수리 비용 지원'(59.4%)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수리나 인력 등 직접 지원'(26.1%), '고령자나 청년 등 거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 확충(6.5%) 등이 뒤를 이었음.

〈그림 3-23〉 주거환경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주 1) 최우선 문제로 '주택 단열 미흡'을 선택한 응답자 13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자가 없어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주거환경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역에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지를 주관식 문항으로 살펴본 결과, 주택 개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 난방 에너지 지원, 생활환경 정비에 대한 요구가 주요하게 나타났음. 읍부 응답자의 경우 난방 에너지 지원을, 면부 응답자의 경우 주택 개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졌음.

□ 마을 환경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마을 환경 관련 주요 어려움으로는 '집 근처에서 기본적인 생활(장 보기, 병원 가기 등)을 하기 불편함'(55.7%)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음. 다음으로 '빈집·방치 건물이 많아 마을 환경이 좋지 않음'(41.8%), '마을 현안 관련 주민 참여기회 부족'(34.0%)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 읍·면부 역시 동일한 경향을 보인 반면, 연령 집단의 경우 30대 이하 청년층은 '빈집·방치 건물이 많아 마을 환경이 좋지 않음'을 주요 문제로 꼽았음.

〈표 3-18〉 마을 환경 관련 주요 어려움(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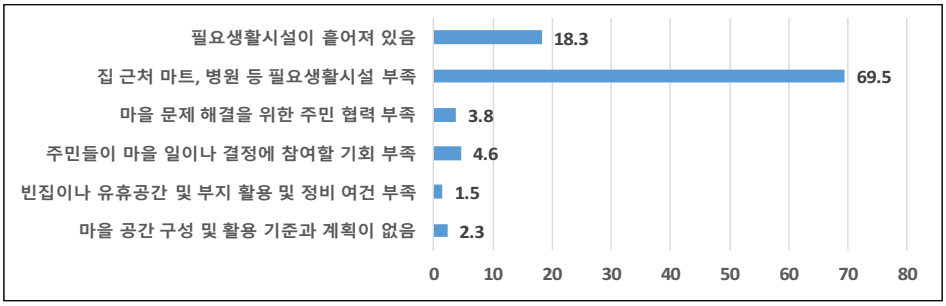
구분		주거지에 공장, 축사 등이 혼재	빈집·방치건물이 많아 마을 환경이 열악	마을 현안 관련 주민 참여기회 부족	집 근처에서 기본적인 생활이 불편함
전체		29.2	41.8	34.0	55.7
지역 구분	읍부	32.5	42.9	38.2	52.8
	면부	26.1	40.8	30.0	58.6
연령	30대 이하	35.1	55.3	46.9	45.6
	40대	35.1	39.9	43.8	46.0
	50대	27.0	28.9	23.9	67.7
	60대	11.0	38.3	23.4	70.4
	70대 이상	27.3	31.8	16.7	63.6

주 1) 응답자는 '집·생활환경 등 정주 환경' 가운데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의 1순위 또는 2순위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마을·주변 공간 활용'을 응답한 341명임.
2) 1순위와 2순위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고 합계는 100%를 초과함.
3)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자가 없어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가장 큰 어려움인 ‘집 근처에서 기본적인 생활이 불편함’의 주된 원인으로, 응답자들은 ‘집 근처에 마트, 병원 등 필요한 생활시설이 부족함’(69.5%), ‘필요한 생활시설이 흩어져 있음’(18.3%) 등을 답하였음.

〈그림 3-24〉 마을 환경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의 가장 큰 원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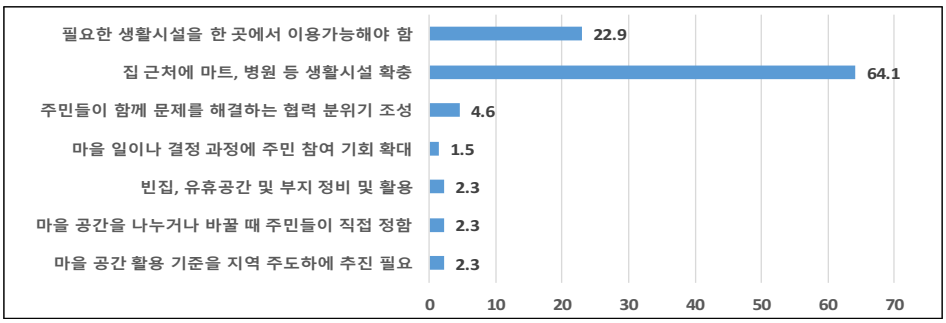


주 1) 최우선 문제로 ‘집 근처에서 기본생활이 불편함’을 선택한 응답자 131명을 분석함
2)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자가 없어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집 근처에 마트, 병원 등 생활시설 확충’(64.1%)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필요한 생활시설을 한 곳에서 이용가능해야 함’(22.9%)에 대한 요구도 나타났음.

〈그림 3-25〉 마을 환경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주 1) 최우선 문제로 ‘집 근처에서 기본생활이 불편함’을 선택한 응답자 131명을 분석함
2)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자가 없어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마을 환경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주관식 문항으로 질문한 결과, 읍·면부 거주자 모두 거주지 인근 생활인프라 확충 및 빈집 철거, 공장 이전 등 마을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 자연환경·재해 및 생활안전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재해 및 생활안전 관련 주요한 어려움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61.7%), '사고(낙상, 화재 등)에 대한 불안'(32.5%), '치안에 대한 불안'(32.1%) 등이 확인되었음.

- 읍·면부는 물론, 모든 연령 집단이 꼽은 가장 큰 어려움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였음.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항목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읍부 거주자 및 30대 이하 청년층과 70대 이상 고령층은 '치안에 대한 불안'을(단, 70대 이상 고령층은 '사고에 대한 불안'도 동일 수준), 면부 거주자와 40대는 '사고에 대한 불안'을, 50대와 60대는 '자연환경 보전 미흡'을 꼽았음.

〈표 3-19〉 자연환경·재해 및 생활안전 관련 주요 어려움(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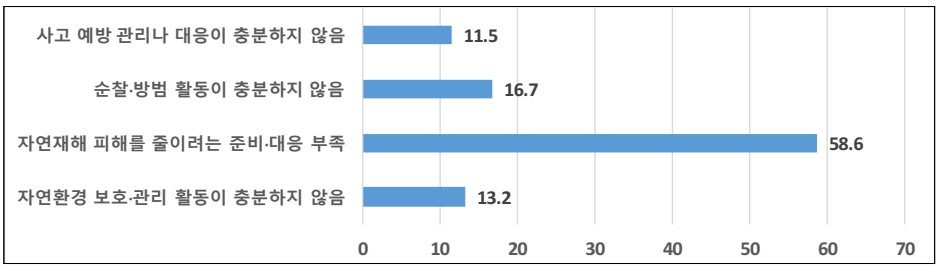
구분		자연환경 보전 미흡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	치안에 대한 불안	사고(낙상, 화재 등)에 대한 불안
전체		29.5	61.7	32.1	32.5
지역 구분	읍부	30.4	59.2	38.9	34.1
	면부	28.6	64.4	24.9	30.8
연령	30대 이하	29.1	62.8	42.0	33.8
	40대	24.0	69.1	36.9	39.7
	50대	40.5	58.2	24.0	37.0
	60대	30.3	56.7	20.9	21.0
	70대 이상	21.6	60.8	27.5	27.5

주 1) 응답자는 '집·생활환경 등 정주 환경' 가운데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의 1순위 또는 2순위로 '자연환경 보전 및 재난·사고 예방'을 응답한 337명임.
2) 1순위와 2순위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로 합계는 100%를 초과함.
3)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자가 없어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의 주된 원인으로는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려는 준비·대응 부족’(58.6%), ‘순찰·방범 활동이 충분하지 않음’(16.7%), ‘자연환경 보호·관리 활동이 충분하지 않음’(13.2%) 등이 꼽혔음.

〈그림 3-26〉 자연환경·재해 및 생활안전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의 가장 큰 원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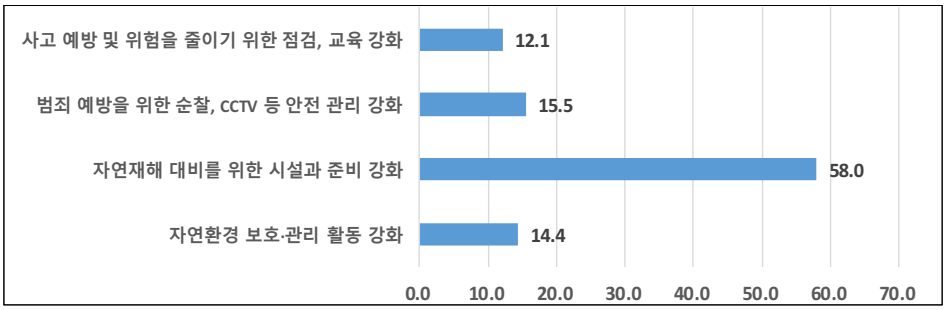


주 1) 최우선 문제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를 선택한 응답자 174명을 분석함.
2)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자가 없어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시설과 준비 강화’(58.0%),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CCTV 등 안전 관리 강화’(15.5%), ‘자연환경 보호·관리 활동 강화’(14.4%) 등이 주요하게 꼽혔음

〈그림 3-27〉 자연환경·재해 및 생활안전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주 1) 최우선 문제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를 선택한 응답자 174명을 분석함.
2)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이 없어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자연환경·재해 및 생활안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주관식으로 조사한 결과,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강화, 치안 및 방범 강화, 산불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읍부 거주민은 치안 및 방범 강화, 면부 거주민은 자연재해 예방 대응 강화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졌음.

□ 기후변화 및 대응

❍ 응답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기후변화 및 대응과 관련해 경험하는 주요한 어려움으로 '더위·추위로 인한 생활 불편과 비용 부담'(50.0%)을 가장 많이 꼽았음. 다음으로 '날씨로 인한 농어업 작업 및 생산 불안정'(18.4%), '친환경 농어업 전환의 어려움이나 부담'(17.6%)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표 3-20〉 기후변화 및 대응 관련 주요 어려움(1+2순위)

단위: %

구분		더위·추위로 인한 생활 불편과 비용 부담	태양광 등 시설 설치 및 이용 어려움	날씨로 인한 농어업 작업 및 생산 불안정	친환경 농어업 전환의 어려움이나 부담	정보나 도움을 얻기 어려움
전체		50.0	11.4	18.4	17.6	2.6
지역 구분	읍부	49.2	9.4	18.8	21.1	1.6
	면부	50.7	13.2	18.1	14.6	3.5
연령	30대 이하	27.6	17.2	19.0	32.8	3.4
	40대	48.6	13.5	24.3	13.5	0.0
	50대	64.0	6.0	8.0	14.0	8.0
	60대	49.3	11.6	23.2	14.5	1.4
	70대 이상	62.1	8.6	17.2	12.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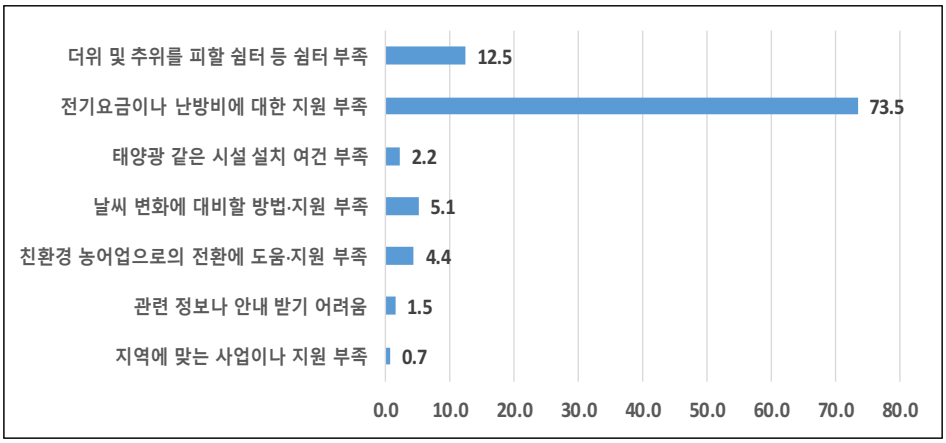
주 1) 응답자는 '집·생활환경 등 정주 환경' 가운데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의 1순위 또는 2순위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농어업 및 재생에너지 활용'을 응답한 272명임.
2) 1순위와 2순위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로 합계는 100%를 초과함.
3)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자가 없어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읍·면부와 30대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더위·추위로 인한 생활 불편과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한편,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는 '친환경 농어업 전환의 어려움이나 부담'(42.7%)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음.

❍ 가장 큰 어려움인 '더위·추위로 인한 생활 불편과 비용 부담'의 원인으로는 '전기요금이나 난방비에 대한 지원 부족'(73.5%), '더위 및 추위를 피할 쉼터 등 쉼터 부족'(12.5%), '날씨 변화에 대비할 방법·지원 부족'(5.1%) 등의 순서로 많이 응답하였음.

〈그림 3-28〉 기후변화 대응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의 가장 큰 원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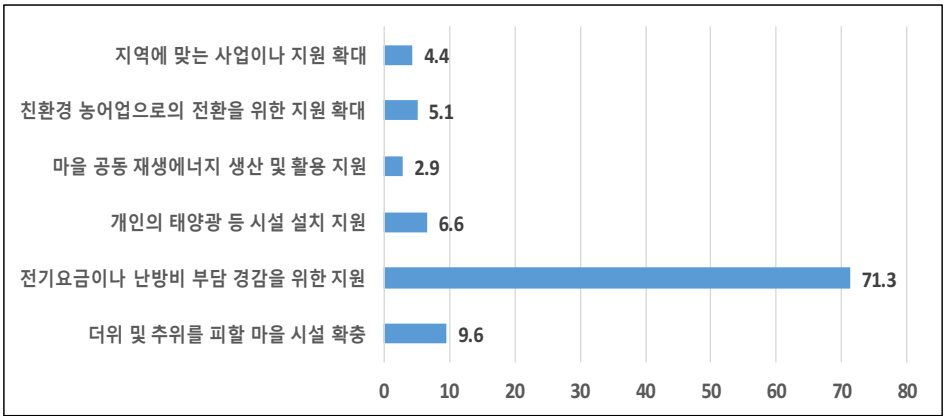


주 1) 최우선 문제로 '더위·추위로 인한 생활 불편과 비용 부담'을 선택한 응답자 136명을 분석함.
2) 응답 항목에 '기타'가 포함되었으나 응답자가 없어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71.3%)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더위 및 추위를 피할 마을 시설 확충'(9.6%), '개인의 태양광 등 시설 설치 지원'(6.6%)이 뒤를 이었음.

〈그림 3-29〉 기후변화 대응 관련 최우선 문제(1순위)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주 1) 최우선 문제로 '더위·추위로 인한 생활 불편과 비용 부담'을 선택한 응답자 136명을 분석함.
2) 응답 항목 중 '친환경 농어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 및 '기타'는 응답자가 없어 제시하지 않음.
자료: 연구진 작성.

❍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주관식 문항 형태로 조사한 결과, 읍·면부 거주민 모두 에너지 비용(냉난방 및 전기료 등) 지원 확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친환경 영농 정착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주요하였음.

3. 소결: 제5차 기본계획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

□ 지금까지 제5차 기본계획의 고도화 방향과 전략체계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삶의 질 관련 주요 여건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를 살펴보았음.

□ 그 결과, 응답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필수 공공·민간서비스 이용 여건, 소득·일자리 여건 및 지역 활력, 집·생활환경 등 정주 여건에 대해 각각 보통 수준(3점) 이상으로 평가하였음.

○ 가장 점수가 낮은 영역은 소득·일자리 여건 및 지역 활력으로, 농어촌 주민이 평가하는 거주지역의 경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음. 반면, 가장 점수가 높은 영역은 집·생활환경 등 정주 여건이었음.

○ 면부 주민의 경우 읍부 주민과 비교하여 3개 영역 모두에 대해 거주지역의 여건이 더 열악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특히, 이는 필수 공공·민간서비스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음. 즉, 농어촌 내부에서도 읍부와 면부 주민 간 체감하는 생활 여건의 격차가 존재함.

○ 연령 집단의 경우 3개 영역 모두에서 30대 이하 청년층은 다른 연령 집단과 비교해 다소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미하였음. 특히, 필수 공공·민간서비스 이용 여건, 소득·일자리 여건 및 지역 활력 각각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음(2점대).

- 이는 향후 청년의 농어촌 지역 정착·유입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거주지역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는 필수 공공·민간서비스 이용 여건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이어 소득·일자리 여건 및 지역 활력, 집·생활환경 등 정주 여건이 뒤를 이었음.

○ 이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소득이나 주거환경뿐 아니라, 일상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줌.

□ 필수 공공·민간서비스 이용 여건 가운데 최우선으로 중요한 항목은 '병원·돌봄서비스 이용 편의성'이었으며, 소득·일자리 여건 및 지역 활력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안정적 확보', 집·생활환경 등 정주 여건에서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으로 나타남.

○ 필수 공공·민간서비스 이용 여건과 소득·일자리 여건 및 지역 활력에 대한 중요성은 읍부 주민보다 면부 주민에게 더 두드러졌음. 이는 해당 영역에 대한 개선 요구가 면부에서 상대적으로 현저할 가능성을 시사함.

○ 연령 집단에서는 소득·일자리 여건 및 지역 활력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 40대와 달리, 다른 연령 집단에서는 필수 공공·민간서비스 이용 여건의 중요성이 가장 컸음.

-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만큼 경제활동과 가구 생계에 대한 관심이 높은 40대의 특성이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3개 영역의 세부 항목별로 농어촌 주민이 주요하게 경험하는 어려움과 그 원인 및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필수 공공·민간서비스 영역) 응답자들은 보건의료·돌봄, 교육·문화·여가, 교통, 금융·인터넷·통신(전화), 일상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시설·서비스 부족, 교통 불편 등으로 인한 접근성 제약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였음.

이에 따라 서비스 공급 기반 확충과 이동 지원 강화를 통한 접근성 개선이 가장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나타남.

❍ (소득·일자리 및 지역 활력) 생활에 필요한 소득 부족과 지역 내 일자리·창업 기회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또한, 지역 활력 측면에서는 외부 인구 유입과 교류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인 소득 확보 지원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만의 볼거리·즐길거리 확충과 주거·편의시설 등 생활 여건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 (집·생활환경 등 정주 여건) 단열 미비나 노후화로 인한 주거환경 불편, 미흡한 생활 인프라와 빈집 등이 공존하는 마을 환경, 자연재해 우려, 기후변화로 인한 생활 불편 및 비용 부담 등이 주요 어려움으로 나타남. 이에 주택 개보수 지원,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자연재해 대응 강화,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등에 대한 요구가 우선적으로 확인되었음.

□ 상기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제5차 기본계획의 고도화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추진이 검토될 수 있음.

❍ 첫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관련 정책 영역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제5차 기본계획은 기본서비스 보장, 소득 기반 강화와 지역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 조성의 순서로의 전략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기본서비스 보장은 보건의료, 돌봄, 교육·문화·여가, 교통, 금융·인터넷·통신·일상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성 문제가 공통적으로 드러난 만큼 농어촌 지역 어디에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접근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요구됨.

- 서비스의 양적 확충을 넘어, 주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본서비스 보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소득 기반 강화와 지역 활력 제고는 농어촌 주민들이 낮은 평가를 내린 생활 필요 소득의 부족, 지역 내 일자리와 창업 기회의 부족, 외부 인구의 방문·체류 저조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과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소득 안전망 강화와 함께 지역 내 경제활동 기반 확충, 생활인구 확대와 이주민 맞춤형 정착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됨.

❍ 넷째,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 조성은 농어촌 주민들이 주요 어려움으로 지적한 노후 주택과 열악한 마을 환경, 생활 인프라 부족, 자연재해 우려 및 기후변화로 인한 생활 불편 등을 반영하여, 주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미래세대와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 주거·생활환경 개선과 농어촌 공간의 재생 및 재구조화, 생태보전과 안전환경 조성,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됨.

❍ 다섯째, 면부 주민은 읍부 주민보다 삶의 질 여건을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하였으며, 청년층 역시 서비스 이용 여건과 소득·일자리 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음. 따라서 제5차 기본계획의 고도화는 지역 간·계층 간 격차 해소를 중요한 정책 추진 원칙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이상의 결과는 제5차 기본계획의 고도화가 기본서비스 보장, 소득 기반 강화와 지역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이에 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비전과 목표, 전략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4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고도화 방향 및 전략체계

□ 본 장에서는 농어촌을 둘러싼 여건 및 정책환경에 대한 분석(2장)과 삶의 질 관련 농어촌 주민 대상 인식조사(3장) 결과를 종합하여 제5차 기본계획의 고도화 방향을 논의함.

○ 오늘날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필수적인 각종 생활서비스 기능의 약화, 전통 산업인 농어업의 위축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함. 반면 생활인구 유입 확대, 외국인 증가, 사회연대경제 조직 및 창업기업 증가 등 새로운 변화 역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기존의 대응 중심 정책을 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활용한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기존 제5차 기본계획은 이 같은 농어촌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고, 필수적인 공공·민간서비스 확충을 통해 생활인구가 확대·정착하는 선순환을 만들고자 추진되었음.

○ 한편 기본사회 구현을 지향하는 현 정부에서는 농어촌 주민을 위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누구나 누려야 할 필수적인 서

비스 영역을 넓게 인정하는 기본서비스에 대한 강조, 사회 전반의 AI 전환을 통한 혁신과 효율화,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과 새로운 경제 기반의 마련, 생활인구·지역 산업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과 긴밀히 연계된 지역 균형발전의 도모, 정책 참여자로서 주민(시민)의 참여와 사회연대경제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 한편, 농어촌 주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필수적인 공공·민간서비스 이용 여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소득·일자리 및 지역 활력, 정주 환경 개선 역시 중요한 정책 수요로 확인되었음. 또한 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고도화(안)에서는 '농어촌 어디에서나 기본서비스 보장'을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하였음.

- 이는 정책환경 검토를 통해 설정한 고도화 방향의 우선순위와 세부 수요를 농어촌 주민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 이에 제5차 기본계획의 고도화 방향은 기존 계획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기본서비스 보장, 소득 안정과 지역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 조성,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 확대, 사회 전반의 AI 전환 등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략체계를 재구성하고자 함.

1. 제5차 기본계획 고도화 방향

□ (정책 목표) 농어촌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 구축

○ 기존 제5차 기본계획의 농어촌 특화 성장 전략 마련 중심에서 더 나아가,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서비스 및 기본소득 보장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 구축을 함께 추구함.

-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이 스스로 활력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함.

□ (정책 대상) 농어업인·농어촌 주민을 중심으로 생활인구·관계인구까지 포괄하되, 이들을 정책 수혜자를 넘어 포용적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확장

○ 농어촌의 청년·여성·이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과 생활인구·관계인구가 정책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어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전략) 기본서비스 보장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 및 활력 제고, 쾌적하고 조화로운 정주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삶의 질 정책체계 고도화

○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 필수 공공·민간서비스의 보편적 이용 기반 구축과 접근권 보장을 통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또한 농어촌 주민들이 중요하게 인식한 소득·일자리 여건 지역 활력 분야에 대응하여, 기본소득을 통한 소득 안정과 청년·지역 기반 일자리 및 경제활동 확대, 생활인구 기반 체류형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 기반과 활력을 제고함.

❍ 마지막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5극3특 정책과 연계한 공간 재편과 생활환경 개선, 생태 보전과 안전환경 조성,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등을 통해 쾌적하고 조화로운 정주 환경을 구축함.

□ (추진기반) 기존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반 정책 추진, AI 활용을 통한 삶의 질 정책의 혁신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개선) 사전협의제도와 농어촌 영향평가의 정책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서비스 기준 보고방식과 삶의 질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여 범부처 협력과 정책 조정 기능을 제고함.

❍ (지역사회 기반 정책 추진) 취약지역 맞춤형 컨설팅 운영 및 주민 참여·사회연대경제·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삶의 질 정책 추진을 강화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성 높은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취약지역 맞춤형 컨설팅 운영을 통해 농어촌 지자체의 삶의 질 여건 개선을 촉진함.
- 주민공동체 활동 촉진을 위한 거점(공간) 조성과 현장포럼 등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읍·면 단위 주민 주도 계획 수립을 촉진하고, 생활 수요 대응 및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함. 또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삶의 질 정책의 기획·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함.

❍ (AI·데이터 활용) 사회 전반의 AI 전환 기조를 반영하여 농촌공간정보 등 AI·데이터 기반 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체감형 서비스 혁신을 위해 AI 활용을 확대함.

〈그림 4-1〉 제5차 기본계획의 고도화 방향

구분	As-Is (기존 제5차 기본계획)	To-Be (제5차 기본계획 고도화)
정책 목표	도·농간 삶의 질 격차 완화와 농어촌 특화 성장전략 마련	농어촌의 기본적 생활보장과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
정책 대상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장	함께 만들어가는 포용적 지역사회
전략	농어업·농어촌 자원 활용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농어촌 **어디에서나 기본서비스** 보장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농어촌 주민의 **소득 기반 강화**와 지역 활력 제고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쾌적하고 조화로운 정주 환경** 조성
추진 기반	삶의 질 정책 평가·환류 체계 개선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	**[강화] 삶의 질 정책 평가·환류 체계 개선** + 사전협의제도 및 농어촌 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 보고방식 구체화 + 현안 중심의 삶의 질 위원회 운영 활성화
	서비스 취약지역 문제 해결방안 모색 (취약지역 컨설팅 도입) 기업과의 다각적 협업 모델 구축	**[확대] 지역사회 기반 정책 추진** + 주민공동체·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 확대 +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기반 강화
	삶의 질 정책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관련 법·제도적 근거 보완)	**[강화] 현장 수요 기반 제도 운영** + 현장 수요 기반 제도 개선 과제 도출
		[신규] AI·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 + 삶의 질 정책 전반의 AI 활용 확대

자료: 연구진 작성.

2. 비전 및 전략체계

□ 기존 제5차 기본계획은 농어촌 특화 성장 전략과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도·농간 삶의 질 격차 완화에 중점을 두었음.

□ 현 정부의 기본사회 구현 기조와 AI 전환, 지역균형발전, 주민 참여 및 사회연대경제 강화 등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5차 기본계획의 고도화는 기본서비스 보장과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기반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는 삶의 질 중심 정책체계로의 전환을 지향하여야 함.

□ 또한 농어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삶의 질 관련 농어촌 주민의 수요를 함께 반영하여 전략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5차 기본계획의 고도화는 다음과 같은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추진 기반으로 구성됨.

□ (비전) ‘기본이 보장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농어촌’

❍ 기본서비스와 기본소득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지역의 활력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농어촌을 지향함.

□ 목표

❍ 농어촌 주민 누구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보건·복지·교육·문화·교통·금융 등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민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접근권을 보장함.

❍ 농어촌 기본소득 등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계층을 위한 지역 기반 일자리 확대와 생활인구 기반 체류형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확충함.

❍ 5극3특과 연계한 공간 재편과 생활환경 개선, 생태 보전 및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미래세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을 조성함.

□ 추진 전략

❍ 필수적인 공공·민간서비스의 보편적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농어촌 주민의 기본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함.

- 보건·복지·교육·문화·교통·금융·디지털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서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서비스 공급 기반을 확충함.
- 디지털 기술과 AI를 활용한 생활서비스 혁신을 통해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함.

❍ 기본소득 등 소득안전망 강화와 청년·지역 기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과 활력을 제고함.

- 기본소득 등 소득안전망 강화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불안정성을 완화함.

- 청년·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을 통해 지역 내 경제활동 기반을 확대함.
- 생활인구 확대와 체류형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소비와 경제 순환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강화함.
- 귀농어·귀촌 및 이주민의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인구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활력 회복을 도모함.

❍ 공간 재편과 생활환경 개선,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을 조성함.

-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을 향상하고 삶의 질을 제고함.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및 5극3특 정책과 연계하여 농어촌 공간의 재생과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 활용 체계를 구축함.
- 생태 보전과 안전 환경 조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고, 재난·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함.
- 기후위기에 대응한 친환경 농어업 확산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여 미래세대와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을 조성함.

□ 추진 기반

❍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강화) 삶의 질 정책의 성과관리 및 환류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 이를 위해 사전협의제도 및 농어촌 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삶의 질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범부처 협력과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함.

- 또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평가 결과를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책 모니터링의 정밀도를 개선하고, 평가 결과의 활용성을 높임.

❍ (지역사회 기반 정책 추진 강화)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에 기반한 상향식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함.

- 이를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지역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여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 또한, 주민공동체, 사회연대경제 조직, 기업 등 다양한 지역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함.

❍ (AI·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 AI 기술과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어촌 정책의 대응성과 미래 적응력을 강화함.

- 농촌공간정보 등 AI·데이터 기반 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여 정책 기획·집행·평가의 과학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필수적인 공공·생활서비스 분야의 AI 활용을 확대하여 주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을 도모함.

〈그림 4-2〉 제5차 기본계획 고도화를 위한 비전과 과제

비전

기본이 보장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농어촌

목표

1. **공공·생활서비스 확대 및 접근권 보장**
2. **소득 안정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 확충**
3. **미래 지속 가능한 농어촌 공간 형성**

전략 및 과제

농어촌 어디에서나 기본서비스 보장	■ 보건·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 ■ 교육·문화·여가서비스 확충 ■ 교통·금융·디지털(AI) 서비스 접근권 보장 ■ 식품사막 등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소득 기반 강화와 지역 활력 제고	■ 농어촌 소득안전망 강화 ■ 사회연대경제 육성 및 계층별 지역 일자리 지원 ■ 생활인구·관계인구 기반 지역활성화 ■ 귀농어·귀촌인 및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
쾌적하고 조화로운 정주 환경 조성	■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조성 ■ 농어촌 공간 재생과 재구조화 ■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생태 보전 ■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추진 기반

■ 삶의 질 정책 평가·환류 체계 개선

○ 사전협의제도 및 농어촌 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 농어촌서비스 기준 달성도 보고방식 개선

○ 현안 중심의 삶의 질 위원회 운영 활성화

■ 지역사회 기반 정책 추진 강화

○ 농어촌서비스 취약지역 컨설팅 운영

○ 주민공동체·사회연대경제 기반 지역사회 실행력 강화

○ 기업(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등)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 기반 강화

■ 현장 수요 기반 제도 운영

○ 관련 법·제도 근거 보완 및 현장 수요 연계

■ AI·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

○ AI·데이터 기반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범부처 협력 활성화

자료: 연구진 작성.

5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4)]

□ 제4장에서 제시한 기본계획 고도화 방향과 정책 비전·전략체계를 바탕으로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를 구체화함.

○ 기존 제5차 기본계획의 정책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변화한 농어촌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과제를 보완·재구성함.

○ 이하에서는 '농어촌 어디에서나 기본서비스 보장', '소득 기반 강화와 지역 활력 제고', '쾌적하고 조화로운 정주 환경 조성'의 전략별로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함.

4) 어업·도서·어촌 관련 과제는 윤영준 전문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문내용에 기반함.

1. 농어촌 어디에서나 기본서비스 보장

□ 제4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략1. 농어촌 어디에서나 기본서비스 보장’은 단순히 시설과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보건·의료, 보육·돌봄, 교육·문화·여가, 교통, 생활서비스 등 주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존 삶의 질 정책 영역에서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금융·디지털(AI) 서비스 등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까지 기본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주민이 이러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농어촌의 낮은 인구밀도와 장거리 이동, 전문인력과 기관·시설의 부족 등을 고려하여 방문형·이동형·디지털(AI) 방식 등 다양한 전달방식을 확충하고,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핵심 추진과제와 세부 과제를 제안함.

1.1. 보건·복지서비스 강화[5)]

1.1.1.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지난 수십 년간 농특세를 활용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인력 부족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계속 확인

- 인구감소로 인해 민간 의료 인프라는 빠르게 철수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공중보건의사 수급 감소로 정상적인 운영에 한계

❍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성질환 관리, 응급의료 대응, 지속적 건강관리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및 전문인력 부족, 장거리 이동 부담 등으로 인해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이 지속

- 읍·면 단위 농어촌은 의료기관 간 거리와 교통 불편으로 정기적인 진료와 예방적 건강관리가 어려우며, 고령자·독거가구·거동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공백 위험이 확대
- 농어촌은 의료기관 부족뿐 아니라 병·의원 방문을 위한 이동시간과 교통비 부담, 보호자 동행 등의 제약으로 미충족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
- 또한 지역 내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간 연계가 부족하여 만성질환자와 퇴원환자 등에 대한 지속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역

5) 조승연 교수(경기대), 김동진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중섭 선임연구위원(전북연구원)의 자문내용을 참고함.

량에도 한계가 존재. 특히, 도서·해상 응급환자는 발생지에서 의료기관에 도달하기까지 해상·항공·육상 이송의 전환과 접안·인계, 수용병원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개별 이송수단의 확보와 함께 단계 간 지연을 줄이는 대응 필요

* (도서 지역) 환자 상태와 기상, 접근 가능한 접안 장소 및 의료기관의 치료 역량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 치료로 연결하고, 즉시 이송이 어려운 경우 현장대응 보완 필요

- 농업인은 장시간·고강도 농작업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근골격계 질환, 낙상사고, 농기계 사고, 농약 노출, 온열질환 등의 위험이 높지만,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족
- 고령 어업인은 작업 형태와 조업 일정에 따라 신체 부담과 의료 이용 여건이 달라지므로 작업 관련 증상과 일상생활의 기능 저하를 함께 확인하고 치료·재활·돌봄 연계가 필요. 특히, 작업 관련 통증이나 만성질환의 관리가 조업 일정과 이동 제약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기존 방문건강관리의 개인별 관리 기능 보완 필요성 존재

❍ 이러한 여건에서 농어촌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진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넘어 지역사회 기반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일차보건의료체계 강화가 필요

- 거동이 불편한 고령인구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보다 생활권 내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지역 기반 일차보건의료 기능 강화가 필요

❍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비대면 진료와 원격협진을 활성화하고,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기반 건강안전망을 구축하여 의료·돌봄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굴하

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

- 도서 지역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더라도 선박 결항, 진료 예약과 운항시간 불일치 등으로 검사·처치와 대면진료가 필요한 후속 단계에서 의료 이용 중단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대면진료 권고 이후 예약, 이동, 진료와 의약품 수령, 복약관리, 재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의료지원사업과 지역 의료기관, 약국의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 보완 필요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가)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

○ 농어촌 지역의사 양성체계 구축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확대) 전문의가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기관을 현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까지 확대

  * 시행 지역은 현재 6개 시도(강원, 경남, 전남, 제주, 충남, 경북)에서 5개 시도를 추가해 연내 11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

- (지역의사제 신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 의료취약지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

  * 공보의 감소로 의료취약지의 의료자원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설되는 지역의사제는 장기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최소한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읍·면 단위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개소 수(비율): ’25년 730개(59.5%)→’26년 1,023개(82.1%)→’27년 1,083개(86.9%)

❍ **농어촌 지역 일차의료 기능 강화**

-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만성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주지 인근 의원급의료기관을 통해 질병예방부터 만성질환 관리까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주치의 모델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5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관리 계획 수립, 체계적인 교육 및 상담, 거동 불편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및 비대면 관리, 상급병원 진료 연계, 퇴원 후 증상 관리 등 제공

- (지역보건의료 체계 및 기능 개편) 기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권역별 거점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고, 의료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상시진료와 방문진료 기능을 강화함. 또한, 보건진료소는 건강상담, 방문건강관리, 비대면 진료 지원 등 지역 밀착형 일차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권 건강관리 거점으로 기능을 재정립

  * 현재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중심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공보의 감소로 보건지소의 진료효율이 감소함에 따라 전달체계 개편이 불가피

  *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조산사 면허 + 24주 이상 전문교육)이 상주해 의과 진료(91종 의약품 처방 등)를 제공하는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

- '26년도 공보의가 미상주 보건지소 기능개편을 토대로,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최적의 거점화 모형(권역거점형, 보건소 집중형 등)을 적용

  * 권역거점형: 거점 보건지소에 의사인력을 배치하여 의원급 진료허브 구축
    보건소집중형: 보건소에 의사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컨트롤 타워 기능 확립

나) 농어촌 맞춤형 건강안전망 강화

❍ **농어촌 비대면 진료 및 원격협진 활성화**

-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기반을 확충하여 거동불편 고령자, 만성질환자,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의 지속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고, 재진·경증질환·퇴원환자 사후관리 등을 중심으로 비

대면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섬·산간지역 등 장거리 이동 부담이 큰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의료공백을 완화하고, 필요시 대면진료와 연계되는 하이브리드 진료체계를 구축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비대면 진료 지원 거점으로 활용하여 화상 진료 연결, 건강정보 입력, 처방 안내 등 이용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원·병원·약국과 연계한 진료·처방·복약지도·대면진료 전환체계를 구축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권역별 거점병원 간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하여 만성질환 관리, 재진 상담, 퇴원환자 사후관리, 정신건강 상담 등 지원

*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과 의사가 원격으로 협진할 경우 별도 수가를 지급하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통합형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기능을 유지

-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원격 응급협진 체계를 강화하고, 구급대·보건기관·거점 병원 간 실시간 의료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적정 이송과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

❍ 비대면진료 이후 대면진료 및 사후관리의 연속성 강화

- (대면진료 후속연계) 기존 비대면진료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대면진료 권고 이후의 후속관리 절차를 보완하여 예약·이동·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결항이나 예약 변경으로 진료를 받지 못한 주민의 의료 이용을 재연계
- (후속 의료이용 점검) 의약품 수령·복약·재진 등 후속 의료이용의 중단 여부와 원인을 점검하여 담당 의료기관·약국의 후속 조치로 연결하고, 반복되는 이용 제약을 운영 개선에 반영
- (진료정보·역할 관리) 기존 진료자료와 연계기록의 활용범위 및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의료기관·약국의 전문업무와 현장지원자의 예약·이용 보조업무를 구분
- (현행사업 활용) 2026년 어복버스 사업에 포함된 진료비·약제비·약 배송비

지원, 섬 차트 관리, 교육, 의료기관 협업 및 조사·평가 기능을 활용하되, 의약품 수령은 비대면진료 지침의 대상·절차와 약사의 복약지도·수령 확인 기준에 따라 연계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은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을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환자 및 희귀질환자로 한정하며, 약사가 환자와 수령방식을 협의하고 복약지도, 수령 확인, 조제기록을 수행하도록 규정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 (농촌 왕진버스 확대 운영)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진단, 치료 등을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제공서비스 다양화 등 지속 확대하고, 사후 건강관리와 지역보건의료기관 연계를 지원
-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와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완화

○ 지역사회 기반 건강안전망 구축

- (농촌 응급처지 역량 강화) 농촌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응급처치인력 육성 교육 운영
- (건강관리 사각지대 발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조직과 연계한 마을 기반 건강안전망을 구축하여 건강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 관리
- (사례관리) 읍·면 단위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건강위험군 사례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이장·부녀회·생활지원사·요양보호사·자원봉사자 등 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한 상시 건강 확인 체계를 구축

* 마을 단위 인력은 정기 안부 확인, 복약 여부 확인, 건강 이상 징후 점검,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필요시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과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

- AI 기반 건강위험 예측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건강검진 결과, 의무기록, 복지서비스 이용정보, 응급실* 이용정보 등을 연계·분석하고 건강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

  * 일정 기간 의료이용이 중단되거나 반복적 응급실 이용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 알림 체계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로 식별. 필요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 폭염·한파·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마을 단위 건강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함.

  * 폭염 취약 고령자를 대상으로 전화·방문 안부 확인 체계를 운영하고, 냉방 취약가구 및 거동불편자의 건강상태를 집중 점검하여 응급상황을 예방

- 경로당·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내 예방 중심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함. 이를 위해 주민참여형 건강지킴이 제도와 AI 기반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결합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관리·돌봄이 통합된 농어촌형 건강안전망을 구축

❍ 농어촌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

- 농어촌 주민의 우울, 고립감, 자살위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 예방, 조기발견, 치료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

-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전국 확대)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일시 주거, 특수청소, 행정·법률·학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 2026년 7월부터 기존 12개 시도에서 부산, 울산, 경기, 전북, 전남 등이 추가되어 전국으로 확대 시행

- 또한 연령과 소득 조건 없이 자살 유족과 시도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외래·입원·약제비)를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

  *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유족의 우울증 비율이 27.8%에서 3.8%로 감소하고, 자살 생각 비율이 11.2%에서 0%로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회복 효과를 확인

○ 농업인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 농업인의 작업 특성과 생활환경을 반영한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농작업 관련 질환과 사고를 예방
- (근골격계 질환 예방) 농작업 자세 개선 교육, 스트레칭·근력 강화 프로그램, 작업 보조기기 보급 등을 확대하고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 및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 특히 여성농업인과 고령농업인의 경우 건강검진과 재활 프로그램을 연계한 지속관리 체계를 구축
- (농약 노출 및 온열질환 예방) 농작업 보호장비 보급, 안전교육, 계절별 건강관리 지침 제공 등을 강화하고, 폭염 시기에는 고위험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함. 농번기에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건강관리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점을 고려하여 이동형 건강검진 차량과 찾아가는 건강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
- (농기계 사고 예방) 농기계 운용 안전교육과 현장 중심 위험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재활 연계체계를 마련함. 농업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울·고립감·스트레스 등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 기반 건강안전망과 연계
- (통합 건강관리체계 운영)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예방·진료·재활이 연계되는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운영

  *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지역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위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 지역 특성과 작목 특성을 반영한 농작업 건강위험 관리모델을 개발·보급하고, 농업인 건강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하여 향후 농촌형 건강정책 수립의 기반 자료로 활용

○ 어업인 작업 특성을 반영한 개인 건강관리 및 치료·재활 연계

- (어업활동 반영 건강관리) 어선어업·양식·마을어업·해녀·갯벌 작업 등 활동 유형과 조업 일정을 반영하여 기존 방문건강관리의 개인별 건강확인·후속 관리 기능을 보완

  * 작업 중 확인된 건강 이상은 의료기관의 진료·재활 등 개인 건강관리로 연결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개인의 치료·보상 절차를 구분

- (증상·기능별 서비스 연계) 작업 관련 통증, 근골격계 증상, 만성질환 관리 상태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와 이용 자격에 따라 진료·재활·운동 및 돌봄서비스를 연계

  * 경상국립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조선대병원은 어업안전보건센터로 어업인 질환의 연구·예방·치료 등을 제공하고, 센터 운영과 여성어업인 특화검진을 지속 추진(해양수산부)

- (건강관리 연속성 확보) 방문 취소나 진료 중단 이후의 이용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의 연속성을 높이고, 건강관리 인력의 자격과 업무 범위에 맞게 증상 확인·예방교육·서비스 연계를 수행

[도서]

○ 응급환자 발생부터 적정치료까지 관계기관 연계 강화

- (적정 이송경로 연계) 환자 발생지와 상태, 접안·인계 장소, 가용 이송수단 및 수용병원 정보를 연결하는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보완하여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에 맞는 이송 경로 선택을 지원

- (기관별 역할·연락체계) 해경·소방·지자체·의료기관의 법정 업무와 관할에 따라 신고 접수, 의료적 판단, 이송수단 조정, 환자 인계 및 병원 수용 확인의 역할과 연계 절차를 구체화

  * (사례) 진도군 조도의 응급환자를 경비함정으로 이송한 뒤 육상에서 대기하던 119에 인계(서해지방해양경찰청 보도자료, 2025. 2. 4.)

- (이송 전·전환 대응) 해상·육상 이송의 전환 지점과 즉시 이송이 어려운 상

황에 대한 현장대응 방안을 보완하고, 가용 의료인력·원격 의료지원·응급처치 장비의 활용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검토

- (지연원인 점검·환류) 출동·이송 실적과 함께 수용병원 확인, 접안·인계 및 적정치료 도달 과정의 지연 원인을 점검하여 지역별 대응절차 개선에 반영

□ 기대효과

○ 지역의사 양성과 지역사회 기반 일차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주민이 생활권 내에서 예방·진료·건강관리가 연계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비대면 진료와 원격협진을 확충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완화

○ 디지털 기반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체계를 결합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굴·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비대면진료 이후 대면진료, 의약품 수령, 재진 단계의 중단을 줄여 도서 지역 주민의 치료 연속성 제고

○ 지역 기반 건강안전망과 AI 기반 건강위험 발굴·사례관리 체계를 통해 만성질환 악화와 응급상황 발생 위험을 낮추고, 농어촌 주민의 건강관리 지속성과 응급 대응 역량을 강화

○ 농업인의 작업환경과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농작업 관련 질환과 사고를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중심 건강관리 기반 마련

○ 고령 어업인의 작업 관련 증상과 기능 저하를 조기에 확인하여 필요한 진료 및 재활로 연결하여, 조업과 생활 여건을 고려한 후속관리를 통해 개인 건강 관리의 중단을 완화

○ 도서·해상 응급환자의 이송 전환과 병원 수용 과정의 지연을 줄여 적정치료 접근성 개선. 즉시 이송이 어려운 상황의 대응방안을 보완하여 이송 전, 이송 중 의료지원의 연속성 강화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 국정과제 83.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 국정과제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 국정과제 85.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1.1.2. 돌봄·보육서비스 공급 확충

□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은 고령화와 영유아 수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보육시설 폐원 증가와 돌봄서비스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한계와 불편한 교통 여건, 관련 서비스 인프라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보육·돌봄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 특히 영유아 돌봄 인프라 부족으로 가정 내 양육 비율이 높고, 부모의 농번기나 새벽·야간 작업 등 농어업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벗어난 개별 맞춤형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

- 농어촌은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기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외에 가정 내 양육 아동을 위한 다양한 틈새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낮아, 일시·긴급 돌봄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 개선 필요

❍ 또한 농어촌은 빠른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리적 여건과 돌봄 인프라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 어려움 발생

- 농어촌은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취약하여, 의료·돌봄 등 기초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기반 확충 필요

❍ 이러한 농어촌의 보육·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생애주기별 돌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공동체 등 지역의 가용자원을 활용한 지역 주도 서비스 공급 확충과 AI 등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사각지대 발굴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가) 농어촌 맞춤형 보육·돌봄서비스 확충[6)]

❍ 농어촌 보육서비스 다양화

-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확대)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찾아가는 돌봄교실, 농번기 주말 돌봄 운영 등 농촌지역의 돌봄 공백 해소 및 영농 집중 지원을 위해 돌봄방 운영 지속 지원. 특히 농어업 종사 가정에서 농번기 새

6) 김은설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자문내용에 기반함.

벽 혹은 야간 등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벗어난 시간 동안 영유아기 자녀 돌봄 수요가 높으므로, 이른 혹은 늦은 시간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집, 돌봄 센터를 발굴하고 운영 지원을 확대

* 2026년부터 정부에서 소수(2개소)의 새벽돌봄 기관을 시범적으로 선정, 지원하고 있으나 돌봄제공 센터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지역사회 육아파트너 운영) 지역 기반의 가정 간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육아파트너가 될 수 있는 가정을 선정하고,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영유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자체 단위의 육아파트너 풀(pool)을 구축·운영

- 지자체에서 육아파트너 희망 가정을 모집·선정한 후 일정 시간 교육을 실시하여 이수자들로 풀(pool)을 구성하고, 영유아 부모의 이용 신청에 따라 인근 거주자를 중심으로 파트너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 일본에서 시행 중인 '패밀리 서포트'를 벤치마킹,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활동비, 환경조건 등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 (농어촌형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 농어촌은 정규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벗어난 개별 돌봄 수요가 높으나,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부족과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서비스 수요와 공급 간 원활한 매칭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형 공급체계 마련 필요

- 농어촌에서 새벽 또는 야간 시간대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활동수당과 교통비를 농어촌 여건에 맞게 확대 지원하고, 농어촌 지역민의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해 자격교육 참여와 교육 이수의 편의를 제공

* 현재 아이돌보미 대상 교통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어촌의 이동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확대 필요

- 인근 도시지역 거주자가 농어촌 지역에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농어촌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기반을 확충

○ 보육취약지역 지원·관리 강화

- 도서벽지, 농어촌을 포함한 보육취약지역에 별도 원장 임용 없이 국공립 어린이집 분원(최소 5인 이상 20인 이하 규모 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부담을 완화

  *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설치비를 지원

- (영유아 교육·보육 인프라 데이터 체계 구축)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각 관할기관의 수급 정보를 연계하여 지리정보시스템으로 분석하고 정책지도를 개발함으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실제 수요에 따른 수급 정책 수립을 지원

  * (정책지도) 지역 내 기반시설(인프라) 분포 특성 및 공간 간 불균형 상황을 지도상에 구현하여 정책 결정 지원

  * 시설 분포 및 접근성 분석을 통해 수요집중 지역을 확인하고 서비스 현황 파악, 지원기관 분포 및 취약우선지원지역을 확인

나) 농어촌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 지역 기반 통합돌봄 운영체계 조성

-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돌봄 추진에 대응하여,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돌봄 인프라(시설, 인력 등)를 보완하고, 제도권 서비스로 포괄하기 어려운 생활돌봄 영역을 포함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

- (돌봄 자원 확보 및 활용 확대) 이에 농어촌의 다양한 주민공동체(농촌돌봄농장(사회적농장), 주민생활돌봄공동체, 자원봉사단체, 직능단체 등)를 지역 돌봄 자원으로 발굴·육성하고,* DB 구축 및 통합돌봄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

  * (농촌돌봄활동지원) 농촌지역 서비스 제공주체로서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육성 및 지원

  * 통합돌봄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회서비스원 등과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인접 지역 및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 주야간보호시설, 장기요양시설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돌봄 필요 노인이 사회적농장, 치유농장 등에서 제공하는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확대

- (읍·면 단위 운영체계 구축) 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을 반영해 시·군 중심인 통합돌봄 운영체계를 읍·면 생활권 단위까지 확장하기 위한 전담인력 지정* 등 운영체계를 보완

  * 일정 요건(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을 갖춘 지역주민의 참여를 허용하여, 현장 수용성을 갖춘 지역 기반 돌봄 체계 마련

  * 2026년 8월부터 주민공동체가 읍·면 단위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장보기, 주거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과 공공·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는 '농촌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충북 제천)

- (사례관리 기반 상시 돌봄 지원) 거동 불편 및 고립 우려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 방문과 수시 대응을 결합한 지속관리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 단위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사례관리 기능을 수행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등 기존 방문형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과 주민공동체 연계하여 역할 분담을 통한 상시 돌봄체계 운영

- (지역 내 분산된 주거자원을 활용한 중간집 운영) 퇴원환자 등을 위한 단기 돌봄·주거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원주택(중간집)의 도입·확대를 위해 농어촌 유휴시설(빈집, 귀농어·귀촌 유휴 주택, 고령자복지주택 공실 등) 활용을 촉진하고,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를 연계한 지속적인 운영체계 구축

- (도서 지역 서비스 중단 대응 및 퇴원·복귀 연계) 도서 지역의 결항·입도 지연과 육지 연안 취약어촌의 인력·이동 제약에 따른 방문 취소에 각각 대응. 서비스의 성격과 긴급성에 따라 일정 조정·대체 지원을 연계하고, 대상자와 보호자가 변경된 이용방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또한, 퇴원·복귀 시 귀도 가능 시점과 입도 인력의 방문 일정을 함께 고려

❍ **주민참여와 AI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 (사각지대 발굴) AI 기반 분석을 활용하여 고립·건강·소득 복합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자동 안부 확인 시스템을 통해 이상 반응을 감지
-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장·부녀회장·돌봄종사자(생활지원사, 돌봄반장 등) 등 마을 단위 인력을 활용한 현장 방문 및 초기 사정·응급 대응 추진. 위기 수준에 따라 보호자 및 공공 담당자와 연계 강화
- (서비스 신청·연계) 지역 내 산재된 복지정보를 통합 안내하는 '지역특화 복지·상담 AI' 도입을 통해 주민의 정보 접근성과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

  * (농촌형 AI 생활서비스 추진) 돌봄로봇(가정), 키오스크(거점)를 통해 접수된 서비스 수요를 지역 내 사업과 연계하여 생필품·교통·식사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

- 농어촌 특화 돌봄 자원(주민생활돌봄공동체, 사회적농장 등)을 복지정보에 포함하여 안내. 챗봇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음성 AI 활용을 병행하는 등 수단을 다양화하고, 사투리 대응 등 농어촌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

❍ **이동지원을 연계한 서비스 접근성 개선**

- (서비스 연계형 이동지원) 거동 불편 고령자 등 이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승하차 지원 등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예약-이동-이용' 연계 체계를 구축
- 초기에는 기관(종사자)을 통한 이동지원 예약 대행 및 연계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서비스 예약과 이동지원을 연계한 시스템 기반 자동 연계 체계로 고도화*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이용자의 이동 필요를 입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한 배차 최적화를 통해 이동 효율성을 제고. 이와 관련하여 이동취약 여부 등 공통 기준에 따른 정보 입력과 통합 관리체계를 통해 서비스 간 연계성 및 운영 안정성을 확보

-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와 주민공동체,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차량 외부 탑승·하차 보조 등 이동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나홀로 외출이 어려운 고령자의 서비스 이용 과정의 접근성을 제고. 필요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기존 돌봄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 지원을 강화

□ 기대효과

○ 농어촌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보육·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생애주기별 돌봄 공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육·돌봄 환경 조성

○ 주민공동체, 사회적농장, 육아파트너, 아이돌보미 등 지역 기반 돌봄자원의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보육·돌봄서비스 공급 기반 마련

○ 농번기·새벽·야간 돌봄과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농어촌 정주 환경 조성

○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 이동지원 연계를 통해 돌봄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 국정과제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 국정과제 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 국정과제 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 국정과제 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1.2. 교육·문화·여가서비스 확충

1.2.1. 교육 및 평생학습 기회 확대[7)]

□ 배경 및 필요성

❍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소규모화로 농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과 방과 후·돌봄 기회가 축소되고, 학교 단위의 교원·강사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에도 한계

❍ 통학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원거리 통학과 교육자원 부족 등 농어촌의 구조적 제약이 지속되고 있어,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대학·지역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단위 교육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필요

❍ 농어촌의 자연·생태·산업과 주민공동체를 교육자원으로 활용하고, AI·디지털 교육을 접목하여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농어촌 특화 교육모델 확산 필요

❍ 또한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교육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과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 기반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

- 현재 농어촌은 도시 청년과 지역주민이 폐교, 빈집, 농산물, 경관 등 지역자

7) 권순형 선임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박정우 연구위원(전남연구원) 자문내용에 기반함.

원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지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실천형 교육 플랫폼이 부족

- 이에 폐교·빈집·유휴 공공시설 등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청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학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평생학습 기반 확충 필요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가) 지역 단위 농어촌 교육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급하는 농어촌형 온 동네 초등돌봄·교육 체계 구축

- (협력체계) 교육지원청과 시·군을 중심으로 학교, 지역 돌봄기관, 지역대학 및 마을교육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 내 프로그램·인력·공간을 공동 관리

  * 교육지원청은 학교별 수요 취합과 프로그램·강사 매칭 및 질 관리를 담당하고, 시·군은 지역 돌봄공간, 보조인력, 운영비 및 이동수단 등을 지원

- (프로그램) 지역 인재와 지역 문화·산업을 활용하고, 치유·숲 생태계·정원·동물사랑·식생활교육 등 농어촌 자원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확산

  * 지역의 산업·기관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사례(부산 자갈치수산시장, 강원 양양 서핑산업, 전남 지역사회 교육기부 등)를 참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공급) 강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학교에는 교육지원청이 지역대학·교원양성대학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지원

  * 프로그램 공급기관이 프로그램 개발, 강사 확보, 학교 매칭 및 사용료 지원 등을 일괄 수행

  * (소외지역 프로그램 공급사업) 강사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도서 지역 등을 대상으로 '26년 150억 원을 투입하여 학기당 1,500학급 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

- (인력)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육성된 인적자원과 치유농업사·농촌교육농장주·산림교육전문가 등을 전문강사로 양성하고, 교육청과 대학이 강사 연수 및 프로그램 품질관리를 지원

○ 대학·기업 연계 진로체험과 이주배경학생 맞춤지원 강화

- (진로체험) 교육지원청이 학교별 수요를 취합하고, '꿈길'에 등록된 대학·기업·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농어촌·도서벽지 학생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 원거리 지역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진로체험버스 등을 활용하고, 농어업·지역산업과 연계한 찾아가는 체험과 장기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을 운영

- (이주배경학생 지원) 한국장학재단과 참여 대학·대학원이 멘토 선발·교육·매칭 및 활동관리를 담당하고, 농어촌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멘토링 지원을 '29년까지 1,400명으로 확대

  * 학교·가족센터·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을 멘토링 활동기관으로 연계하고, 기초학습, 한국어교육, 학교생활 적응, 문화교류 및 진로상담을 통합 지원

- (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고,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통해 학습·정서·진로 지원을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

나) 농어촌 특화 교육 및 평생학습 기반 강화

○ AI·지역자원을 연계한 농어촌 특성화학교 육성

- (AI 공동교육)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거점학교와 인근 소규모학교 간 AI·소프트웨어 공동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원격수업·순회수업과 학교 간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

- AI 중점학교를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여 인근 소규모학교와 AI·소프트웨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우수 교육모델을 지역 내 학교로 확산

  * AI 중점학교: ('26) 1,141교 → ('27) 1,500교 → ('28) 2,000교

-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청 또는 지자체의 공모·검증을 거친 마을교육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방과후·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역량과 안전관리 요건을 갖춘 조직을 대상으로 선정

- (특성화)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게 농어촌의 자연·생태·문화·산업을 반영한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의 작은 학교 교육과정 기획·지원 기능을 강화

  * 학교·지역기관·농어촌단체·마을 등이 스마트농업, 생태·산림·해양 관찰 및 지역문제 해결형 교육과정의 기획·운영에 참여

- (우수모델 확산) 지역 특화 교육과정의 운영성과를 '농어촌 참 좋은 학교', 학교 간 네트워크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확산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 심사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지원

○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평생학습 거점 조성

- 농어촌의 폐교, 빈집, 유휴 공공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청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학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평생학습 거점을 조성하고, 프로젝트 학습(PBL), 공동학습, 지역문제 해결형 교육 등을 운영

  * 단순 이론교육을 탈피하여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을 운영하고, 지역자원 활용, 공동체 활동, 지역사회 문제 해결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대학, 평생교육기관,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역자원 활용, 디지털 역량, 지역문제 해결 등을 주제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학습공동체를 육성

다) 통학과 교육활동을 연계한 학생 이동지원 확대

○ 수요자 맞춤형 통학 지원 확대

- 학교가 학생별 거주지·통학거리·등하교 시간 등을 조사하고, 교육지원청과 시·군이 이를 통합하여 통학버스 노선, 통학택시 및 교통비 지원방식을 조정

  * 학생의 거주지와 등·하교 수요를 반영한 수요응답형(DRT) 통학버스 및 에듀택시를 단계적으로 도입

  ** 학부모와 학생이 실시간 차량 위치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등·하교 시간 외에는 고령자 병원 방문, 생활서비스 이용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 교통서비스로 활용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

- 통폐합 학군의 원거리 학생은 통학 여건에 따라 통학비(교통비) 또는 하숙비 등을 지원하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공동 통학차량을 활용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

  * 농어촌 초·중·고 통학버스 제공 비율: ('20) 51.3% → ('23) 56.0%

❍ 교육활동 이동지원 강화

-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진로체험기관이 프로그램 일정과 이동 수요를 공유하고, 방과후·돌봄·진로체험 참여 학생의 이동 수단을 연계

  * 초기에는 교육지원청과 시·군이 학교별 이동 수요를 취합하여 공동차량과 통학택시를 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교육활동 일정과 통학수단을 연계한 공동 배차체계로 고도화

- (안전관리) 교육지원청·지자체·운송사업자가 통학차량 운행과 승하차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학교 밖 이동 안전을 점검

□ 기대효과

❍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 및 지역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농어촌의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부족과 강사 구인난을 완화하고 교육서비스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

❍ AI·디지털 교육과 농어촌의 자연·산업·공동체 자원을 결합한 특화 교육과정 확산으로 작은 학교의 교육력과 지역 정주 기반을 강화

❍ 대학·기업·공공기관 및 지역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농어촌 학생의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이주배경학생의 학습·학교 적응 지원을 강화

❍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평생학습 기반을 확충하여 청년과 지역주민의 학습 기회와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

❍ 통학과 교육활동 이동지원을 연계하여 원거리 거주 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 문제로 인한 프로그램 미참여 완화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 국정과제 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 국정과제 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1.2.2. 문화·여가 기반 확대[8)]

□ 배경 및 필요성

❍ 문화·여가 활동은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건강 증진, 사회적 관계 형성, 사회적 고립 예방 등과 연계되는 기본서비스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거주 지역·소득·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기본권 보장이 중요

❍ 그러나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화·여가시설의 지역 편중, 교통 접근성 한계, 문화예술인 및 전문 문화기획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문화·여가 서비스 이용과 참여에 구조적인 제약이 지속

- 특히 소규모 읍·면 지역은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이동·정보·경제적 제약 등으로 일상적인 문화·여가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실정

8) 박주영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장세길 선임연구위원(전북연구원) 자문내용에 기반함.

❍ 또한 농어촌의 생활문화와 지역 고유의 문화·역사 자원이 체계적으로 기록·보존되지 못한 채 소실되고 있으며, 지역문화의 지속 가능한 계승과 활용 기반 마련 필요

-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지역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필요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가) 문화·여가 서비스 이용 및 참여 기반 강화

❍ 주민의 일상적 생활공간에서의 문화·여가 서비스 이용 기반 구축

- 농어촌 주민의 문화·여가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읍·면 생활권 단위 문화·여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중심지 및 기초생활거점 등 지역 생활서비스 거점과 생활 SOC 복합화시설 등을 문화·여가 기능과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적 이용 기반 강화

-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문화·여가시설 접근이 어려운 산간·도서·소규모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전시·독서·체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고, 이동형 문화·여가 서비스 운영체계를 강화

- (디지털 기반 접근성 강화) 온라인 전시·공연·교육 콘텐츠 활용을 확대하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이용 지원*을 병행하여 지역 간 문화 접근 격차를 완화

  * (마을 단위 문화·여가 활동 공간 조성) 마을 단위 디지털 문화 도우미 운영, 공동 이용 거점(경로당·기초생활거점 등) 기반의 집합 이용 지원, 음성 안내 등 이용 편의성 개선 병행

❍ 맞춤형 문화·여가 참여기회 확대

- (이용 제약요인 해소를 통한 참여기회 보장) 고령자·장애인·교통취약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동형 문화·여가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동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확대 및 활동비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제약 완화

- (고령친화형 프로그램 확대) 농어촌 고령자의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하여 전통문화, 생활예술과 함께 걷기, 체조, 실버체육 등 생활체육을 결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로당·마을회관 등 생활권 거점을 중심으로 운영을 활성화
- (사회적 고립 대응형 참여 프로그램 강화) 독거노인, 은둔형 주민 등 고립 위험군을 대상으로 문화·여가 및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공동체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 자원과 연계하여 정서적 교류 기능을 강화

나) 주민 참여형 지역문화 기반 조성

❍ 주민 참여형 생활문화 및 창작기반 조성

- (주민 참여형 생활문화 활성화) 주민 동아리, 생활예술, 세대통합 문화활동 등 주민 주도의 문화·여가 활동을 확대하고, 마을 단위 공동체 기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 (유휴시설 활용 문화창작 거점 조성) 폐교·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예술인, 청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창작·전시·교류 기능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 (지역자산 기반 문화콘텐츠 창작 지원) 농업·어업·생태·경관·식문화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과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교육·체험 프로그램과 연계
- (지역 문화거점 기능 강화) 생활문화시설 및 문예회관 등을 지역 예술의 창·제작, 주민 참여가 결합된 복합문화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마을 및 생활권과 연계한 문화활동 확산 기반을 구축

❍ **지역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기반 강화**

- 농어촌의 생활문화, 지역어, 생활의례 등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고 디지털화하여 지역문화의 지속 가능한 활용 기반을 마련
-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자원의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콘텐츠와 교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지역문화의 활용 가치를 제고

□ 기대효과

❍ 생활권 기반 문화·여가서비스 확충과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문화·여가 향유 격차를 완화

❍ 주민 참여형 생활문화 활성화와 지역문화거점 조성을 통해 문화 향유 중심에서 참여 중심의 지역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농어촌 지역문화자원의 체계적인 기록·보존과 디지털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 국정과제 105.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 국정과제 106.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 국정과제 91. 인구가족구조 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1.3. 교통·금융·디지털(AI) 서비스 접근권 보장

1.3.1. 교통취약지역 지원 및 안전 강화[9)]

□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 강화 정책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버스 이용 수요 감소, 운수종사자 부족 등 교통여건 변화와 함께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발전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

- 의료·복지·교육·상업 기능이 중심지로 집중되면서 교통취약계층의 생활권 접근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 증가와 운전면허 반납 확대 등으로 이동권 보장과 교통안전 확보가 농어촌 삶의 질의 핵심과제로 부각

❍ 특히 도서 및 해상교통 의존 어촌 주민의 필수생활 목적 이동은 항로의 존재나 운항 횟수뿐 아니라 기항지 이후 육상교통, 서비스 운영시간, 대기 및 귀도 조건이 실제 이용 가능성을 좌우

- 출도하더라도 진료·행정·구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운영시간 내에 이용하지 못하거나 당일 귀도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해상·육상 이동과 서비스 이용 시간의 연결을 함께 보완할 필요

❍ 한편 AI 기반 수요응답교통(DRT), 통합이동서비스(MaaS),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 기반 교통서비스와 데이터 기반 교통안전 관리체계 구축 필요

- 교통안전 인프라 부족, 농기계·전동휠체어 등 저속 이동수단과 일반 차량의 혼재, 응급대응 취약 등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 관리체계 구축 필요

9) 김원철 연구위원(충남연구원) 자문내용에 기반함.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가) 농어촌 맞춤형 이동권 보장체계 구축

❍ AI 기반 수요응답교통(DRT) 고도화

- 교통취약 농촌지역에 AI 기반 수요응답형 마을버스·택시 등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을 개선
- 이를 위해 현재 운행 중인 수요응답교통(DRT)에 음성 AI 기반 호출서비스를 도입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의료·통근·장보기·복지시설 이용 등 통행 목적을 반영한 생활복지형 DRT 서비스를 확대
- (데이터 기반 DRT 서비스 확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이동수요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광역 DRT와 연계하여 농어촌 광역생활권 이동서비스 확대 필요

❍ 농어촌형 통합이동서비스 구축

- (농어촌형 MaaS 플랫폼 구축) 버스, DRT, 농촌형 교통모델, 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합하는 농어촌형 MaaS(Mobility as a Service) 플랫폼을 구축하여 예약·결제·정보제공 기능을 통합하고 생활서비스와 연계한 이용 편의를 향상

  * 병원과 교통수단의 예약 연계, 관광지 입장권과 교통패스 연계, 지역화폐와 교통바우처 연계 결재 등 생활서비스 중심 플랫폼으로 개발 필요

- (AI 기반 이동서비스 고도화) AI 기반 이동수요 분석과 개인 맞춤형 이동서비스 추천 기능을 활용하여 생활인구와 관광객 이동데이터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운영체계 마련 필요

❍ **생활밀착형 이동서비스 확대**

- (생활물류 연계형 공공교통서비스 구축) DRT와 마을택시 등을 활용하여 여객과 소형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통합형 공공교통서비스 도입 필요

  * 우체국·농협·로컬푸드 직매장 등과 연계하여 약품·생필품·농산물 배송과 여객 운송을 연계하는 생활물류체계 구축

  *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활용) 산간·오지 마을택시 및 DRT를 활용한 여객·화물복합운송 서비스(2025. 4.)

- (고령자 이동권 보장)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DRT 및 농촌형 교통모델 이용 지원, 병원 동행형 교통서비스, 복지관 셔틀, 마을순환형 이동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의료·복지 등 생활밀착형 이동서비스 제공 필요

- (생활접근성 중심 이동권 보장체계 마련) 노선 수와 운행 횟수 중심의 평가체계에서 벗어나 의료·복지·교육·상업시설 접근시간을 반영한 생활권 이동지표를 개발하고, 농어촌 최소 이동서비스 기준(MMS)을 마련하여 일정 수준 이하 지역에 대한 공공교통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필요

- (미래 모빌리티 기반 마련)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DRT, 스마트 정류장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도입 기반 마련 필요

❍ **필수생활 목적 통행을 위한 해상·육상 교통 및 서비스 이용 연계**

- (항로지원 제도별 공백 점검) 보조항로,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 등 현행 제도의 적용 현황을 구분하고, 항로 부재·운항여건·환승 불편 등 실제 통행의 제약에 맞춰 보완방안을 검토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026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 대상자를 공모하고, 해당 지원대상 항로를 「해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고시

- (생활이동 전 과정 연계) 출도부터 기항지 이후 이동, 서비스 이용, 대기와 귀도까지 이어지는 이용 과정을 기준으로 교통·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체계를 보완

- (시간표·대체접근 연계) 주요 이용 목적별 통행 여건을 바탕으로 시간표와 예약·운영방식의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결항·지연 시 이용 가능한 대체 접근수단 또는 방문·이동형 서비스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

- (통행 미완료 원인 환류) 통행 미완료 원인을 항로·연계교통·서비스 배치의 개선 근거로 활용하되, 관계기관의 권한과 운영·안전 조건을 고려하여 조정방안을 마련

- (제도 적용) 필수생활 목적 이동을 지원하는 항로와 연계교통의 기능을 보완하되, 현행 항로 지원제도의 유형과 적용요건을 구분하여 추진

  *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여객선·도선과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도서에 지자체가 행정선 등을 투입하는 경우 선박 운영비를 지원

나) 농어촌 교통안전 관리체계 강화

❍ AI 기반 교통안전 관리체계 구축

- (AI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 구축) 교통량, 속도정보, 기상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고다발지역, 고령자 사고, 보행위험지역, 농기계 사고 등을 예측하는 AI 기반 교통안전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지역별·시간대별 위험요인을 주민과 공유하고 스마트 안전시설과 연계한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 관리체계 강화 필요

❍ 주민 참여형 읍·면 중심 교통안전 거버넌스 구축

- 주민이 참여하는 읍·면 단위 교통안전협의체를 운영하여 시·군 단위 교통협의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안전 위해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

  * 주민 의견이 교통안전 정책과 개선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 **생활밀착형 교통안전교육 확대**

- 고령 운전자와 고령 보행자, 농기계 및 전동휠체어 이용자 등 농어촌 교통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강화 필요

  *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관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체험형 교통안전교육 확대

- 농번기·수확철·야간시간대 등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확대하고, 스마트 안전시설과 연계한 현장형 안전교육 운영

□ 기대효과

❍ AI와 수요 기반의 교통서비스를 활용하여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의료·복지·교육 등 필수 생활서비스 접근성 제고

❍ DRT, MaaS, 생활물류 연계 등 농어촌 맞춤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생활권 중심의 지속 가능한 교통서비스 기반 마련

❍ 생활접근성 중심의 이동권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자와 교통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

❍ AI 기반 교통안전 관리와 주민 참여형 교통안전 거버넌스 구축, 생활밀착형 교통안전교육 확대를 통해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농어촌 교통안전 수준 향상

❍ 귀도 조건을 개선하여 도서 및 해상교통 의존 어촌 주민의 이동 부담과 불필요한 대기를 완화하고, 항로 지원과 육상교통·서비스 운영 연계를 통해 기존 교통지원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제고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 국정과제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 국정과제 23.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 국정과제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 국정과제 54.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 국정과제 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1.3.2.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화[10)]

□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 지역은 금융기관 점포가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 과소 면 지역을 중심으로 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대면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금융 공백 지역이 확대

❍ 농어촌 고령 주민은 디지털 금융 전환에 적응하기 어려워 대면 금융서비스 의존도가 높고, 소득 불안정과 지리적 고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금융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상황

- 저금리 정책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금융정보 부족으로 인해 고금리 사

10) 이대기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자문내용에 기반함.

금융 이용 위험이 존재하며, 재해·질병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자금조달과 금융지원 체계도 미흡한 실정

❍ 또한 기존 금융교육과 금융상담은 도시 중심으로 운영되어 농어촌 주민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디지털 이용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교육과 상담서비스도 부족한 상황

❍ 농어촌 금융 공백을 해소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금융서비스 전달체계와 포용금융 지원, AI 기반 금융교육 및 상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가) 농어촌 금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공공성 금융기관의 농어촌서비스 기능 강화**

- (서비스 유지 의무 강화) 농협·수협·우체국 등 공적 금융기관에 대해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기반한 금융서비스 최소 공급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이 없는 읍·면 지역에서 출장 창구, 순회 방문, 대리점 지정 등의 방식으로 최소한의 대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근거 마련 및 비용 지원을 검토
- (우체국 금융 기능 확대) 전국 읍·면 단위에 고르게 분포된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이 예·적금 가입, 공과금 납부, 보험 상담, 연금 수령 등 일상 금융서비스를 우체국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타 금융기관과의 업무 제휴·위탁 범위를 확대
- (ATM 공백 지역 해소) 읍·면 단위 이하의 ATM 공백 지역에 대해 읍·면사

무소,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를 확대하고,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 철수로 인한 서비스 공백을 보완

❍ 이동형 금융서비스 도입 및 확대

* (소관·협력 주체)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참여 금융기관

- (이동형 금융 차량 운영 시범사업 추진) 고정 점포 운영이 어려운 인구 과소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지자체 간 협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이동형 금융 차량(Mobile Bank)을 시범 도입하고 성과에 따라 확산 추진. 차량 내에서 예금 수납, 공과금 납부, 카드 발급, 대출 상담 등 핵심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운영 기준을 마련
- (복지·행정 방문 서비스와 연계 운영) 찾아가는 상담·의료·행정서비스 등과 이동형 금융서비스를 연계하여 원스톱 생활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
- (순회 금융 창구 운영 확대) 농협·수협·우체국 직원이 경로당·복지관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통장 정리, 공과금 수납, 금융상담 등을 제공하는 순회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운영 실적에 연동한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하여 지속 운영 기반을 마련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금융서비스 환경 조성

- (생활 거점 활용) 읍·면 단위 생활 SOC 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지역복지관, 마을회관 등)에 금융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복합서비스 모델을 도입

  * 초기 운영 비용에 대해 지역 금융기관과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는 협약 모델을 적용

- (비대면·디지털 금융 이용 지원) 복지관·경로당 등 거점에 태블릿 등 기기를 비치하여 인터넷·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직원이나 교육 인력이 순회하며 이용을 지원

- (고령 친화적 금융서비스 환경 조성) 금융기관 방문 시 길 안내, 서류 작성 지원, 점원의 천천히·쉽게 말하기 등 고령자 친화적 응대 환경을 갖추도록 농어촌 지역 금융기관 대상 서비스 표준을 마련하고, 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

나) 농어촌 금융안전망 강화

❍ 농어촌 취약계층 대상 소액 긴급자금 지원 확대

- (농어촌형 긴급 생활안정자금 확충) 재해·질병·실직 등 긴급 상황에 처한 농어촌 주민이 고금리 사금융 이용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소액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지원 규모·한도를 확대하고 심사 요건을 완화. 특히 소득 증빙이 어려운 고령 농어업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득·재산 기준 적용을 유연화하고,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 지원 체계를 마련
- (신용보증 연계 확대) 담보와 신용이 부족한 농어업인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지역 신용보증재단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어촌 특화 신용보증 상품을 확대하고, 귀농어·귀촌인, 고령 농어업인, 여성농업인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보증 요건·한도 차등 설계 등)
- (재해·경영위기 농어업인 지원 강화) 재해복구자금·경영안정자금 등 분산된 융자 제도를 통합·정비하는 한편 지원대상·조건을 현실화하고, 위기 발생 후 신속한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 심사 간소화 및 우선 배정 등 지원체계를 개선

❍ 농어촌 주민 금융 재기 지원

- (고금리 부채 대환 지원 체계 마련) 사금융·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농어촌 주민이 저금리 공적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서민

금융진흥원·농협·수협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농어촌 지역 특화 상담·신청 창구를 운영. 창구 접근이 어려운 면 지역 주민을 위해 방문상담과 비대면 신청을 병행하여 실질적 이용 편의를 제공

- (농어업인 채무 조정 지원 강화) 다중 채무 또는 장기 연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분할 상환·이자 감면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신용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용회복위원회·농협 등과의 협력을 통해 농어촌 현장에서 접근 가능한 채무 조정 상담체계를 강화. 아울러 경영위기 조기 징후 모니터링을 통해 연체 이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

  * 상환 부담이 커지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청년농을 조기에 파악하여 금융·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경영 개선, 작목 전환 또는 폐업·재기 지원 등 맞춤형 후속 지원을 연계

- (금융 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강화) 농어촌 취약계층이 본인에게 적합한 공적 융자·보증·채무 조정 상품을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읍·면 단위 복지 담당자·농업기술센터 등 지역 현장조직과 연계하여 금융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주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지원 안내체계를 구축

  * 농어촌 주민 대상 금융 지원 정보 통합 안내 자료를 개발하여 마을회관·읍·면사무소 등 접근 용이한 거점에 상시 비치

○ 귀농어·귀촌인 및 청년 정착·창업 금융지원 강화

- (초기 정착 자금 지원 확대) 귀농어 초기 단계에 집중되는 영농 준비 자금, 주거 마련 비용 등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 구입·임차 자금 저금리 융자의 지원 기간 및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조건을 유연화. 정착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점을 고려하여 거치 기간을 충분히 설정하고, 영농 성과에 연동한 원금 유예 등 탄력적 상환 구조를 도입

- (농어촌 정착 청년의 로컬비즈니스 금융 지원) 농어촌에 정착하여 생활서비스, 문화·관광, 지역자원 활용 등 비농업 분야의 로컬비즈니스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층의 초기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용 소규모 창업자

금 대출상품을 신설하고, 신용·담보 요건을 완화

- (외국인 이주민·다문화 농어촌 주민 금융 접근 지원) 언어 장벽 및 신용 이력 부재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이주민과 다문화 주민을 대상으로, 다국어 금융 안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 이력 부족 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개선

다) 농어촌 금융교육 및 상담체계 강화

❍ 농어촌 현장 맞춤형 금융교육 확대

- (찾아가는 금융교육 운영) 마을회관·경로당·읍·면사무소 등 농어촌 생활 거점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정례화

  * 보이스피싱 예방, 연금·보험 활용, 생활비 관리 등 농어촌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 중심으로 교육

- (지역기관 연계 교육체계 구축) 농어촌 현장에 접점이 많은 농협·수협·우체국 직원,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금융교육 기반을 마련

- (대상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고령 농어업인, 귀농어·귀촌인, 외국인 이주민 등 대상별 맞춤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면 교재와 함께 평생학습관·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보급

❍ AI 기반 금융상담 서비스 도입

- (음성 기반 AI 금융상담 운영) 디지털 역량이 낮은 고령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마을회관 등에 음성 기반 AI 금융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대출·연금·보험·금융지원 제도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

  * 사투리 및 느린 말투 등 농어촌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언어 모델 적용

- (AI-전문상담 연계 체계 구축) AI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금융 문제는 금융기관 전문 상담원으로 즉시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상담 이력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상담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 기대효과

❍ 공공성 금융기관과 이동형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농어촌 금융 공백지역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권 내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이용 기반을 마련

❍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용보증, 채무조정 등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포용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충

❍ 귀농어·귀촌인과 청년의 초기 정착·창업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농어촌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

❍ 찾아가는 금융교육과 AI 기반 금융상담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금융 이해도와 디지털 금융 활용 역량을 높이고 금융소외를 완화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 국정과제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 국정과제 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1.3.3. 농어촌 디지털·AI 인프라 및 이용 여건 개선[11)]

□ 배경 및 필요성

❍ 사회 전반의 급속한 디지털화 및 AI 서비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과 고령층은 AI 기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부재로 인해 AI 활용 역량 격차 우려가 확대

* 2024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정준욱 외, 2025) 결과에 의하면 농어민 가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85.7%로 일반국민의 94.5%에 비해 8.8%p 낮은 수준이며, 주요 인터넷 이용 기기는 스마트폰(85.7%)으로 나타남(일반국민: 94.1%).

❍ AI 일상화는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서비스에도 적용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지역 청소년의 경우에는 경제적 요인으로 AI 학습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도농 간 교육격차가 확대될 우려

❍ 농어촌 지역 청년과 청년농 역시 AI 서비스를 활용한 창업과 영농 역량 강화가 필요하지만,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전문 교육기관과 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 또한 대도시와 농어촌 간에는 이동통신 품질에도 차이가 존재

- 농어촌은 이동통신 기지국 부족으로 인해 5G 등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신 스마트폰을 이용하더라도 도시지역에 비해 통화품질과 데이터 이용환경이 낮은 수준

❍ 따라서 농어촌 주민의 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이동통신 인프라 개선과 AI 활용 교육 확대를 통해 농어촌의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11) 정현민 수석연구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문내용에 기반함.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가) 농어촌 AI·디지털 역량 강화

○ AI 디지털배움터 연계를 통한 AI 역량 교육 확대 및 AI 바우처 지원

- (AI 역량 교육 확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I·디지털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농산어촌 지역 고령층을 대상 AI 기본역량교육을 확대
- 전국 지자체별 69개 거점센터뿐만 아니라 경로당, 복지관, 마을회관을 활용한 찾아가는 교육(파견교육)을 확대

  * '25년: 4,200개소 → '26년: 6,000개소 이상

- (AI 바우처 지원) AI 교육서비스 활용에 따른 농어촌 지역 청소년의 교육격차 확대를 완화하기 위해 AI 학습 튜터 구독료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도서산간 지역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AI 학습서비스와 IT 기기(스마트패드 등)를 지원

○ 농어촌 지역 맞춤형 AI 역량교육 운영

- (청년농 AI 역량교육 확대)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청년농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
- (원격 멘토링 운영) 지역 소재 AI 관련 대학원생을 멘토로 지정하고 청년농이 필요로 하는 AI 기본역량을 원격으로 1:1 교육하는 멘토링을 실시

  * AI 기초 이해, 생성형 AI 활용법(병충해 사진 판독, 생육상태 분석, 날씨 기반 대응 등), 스마트농업 데이터 이해(온도·습도 로그 해석, 급수량 비교 등), 농산물 판매·브랜딩 등

나) 농어촌 디지털 이용여건 개선

○ 농어촌 지역 이동통신 품질 개선

- (농어촌 지역 이동통신 품질 개선) 농어촌 지역 이동통신 품질 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동통신 사업자의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방안 추진

* 기존 5G 공동망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농어촌 5G 공동이용(로밍) 사업 등), 개별 이동통신 사업자도 도시지역과 동등한 수준의 이동통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소관·협력 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3사

- (농어촌 지역 이동통신 요금 부담 완화) 장애인·저소득층 중심의 기존 요금 감면 제도를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

□ 기대효과

❍ AI 디지털배움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AI 기본역량교육 및 AI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농산어촌 지역민 및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의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

❍ 농어촌 지역 맞춤형 AI 교육과 원격 멘토링 운영을 통해 청년농과 농어촌 청년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AI 전환과 창업 기반 조성에 기여

❍ 농어촌 지역 이동통신 품질 개선 및 이용 부담 완화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AI·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 국정과제 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 국정과제 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1.4. 식품사막 등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해소[12)]

1.4.1. 식품사막 해소 및 먹거리 접근성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전국 행정리의 73.5%(국가데이터처, 2020, 농림어업총조사)가 식품사막에 해당할 만큼 기초생활물자 접근에 한계

-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 등 이동취약계층은 인근 소매점까지의 이동 자체가 어려워 생활서비스·물자 접근에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식품사막 지역은 고령화와 열악한 교통 여건이 중첩되어 먹거리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

○ 현행 농식품바우처의 지원대상이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한정되어 있어, 농촌 고령 1인 가구 등 실질적 먹거리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

○ 식품사막 지역에서 먹거리는 단순 상품이 아닌 건강권·식량권 성격을 지닌 공공서비스로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먹거리 접근권 보장 필요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 **가가호호 이동장터 확대 운영**

-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농촌지역의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과 식료품을 마을별 방문형으로 제공하는 가가호호 이동장터를 확대 운영

12) 이중섭 선임연구위원(전북연구원) 자문내용을 부분 참고함.

- 읍·면 소재지 내 생필품 공급거점과 식품사막화가 나타나는 배후마을을 연계하여 안정적인 생활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 공공먹거리 전달체계 강화

-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농가·농협·사회연대경제조직 등과 연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푸드플랜을 활용한 지역 농산물 기반 공공급식 공급을 확대하여 식품사막 지역의 노인·취약계층 대상 급식, 식사배달, 먹거리 지원사업과 연계
- 단순 식사 제공을 넘어 고령층·취약계층 대상 영양관리, 방문형 식생활 상담, 맞춤형 건강식 및 식재료 지원 등 건강·돌봄 연계 기능 강화

❍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

-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 단가를 늘리고, 수산물을 지원 품목에 추가

  * 대학생 천원 아침밥 및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확대. 직장인 든든한 한끼 및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 등 계속 추진

- 특히 식품사막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농식품바우처를 활용하여 신선식품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오프라인 신청·이용체계 및 지역 내 사용처 확충

❍ 푸드뱅크 연계 식품기부 활성화

- 복지부 푸드뱅크 사업과 연계하여 식품기업의 기부물품을 이동장터 등을 통해 공급하고, 시·군 농촌부서와 복지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사막 지역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 강화

  * 복지부에서는 시군별 푸드뱅크를 이용하여 식품기업의 다양한 식재료를 공급받아 취약계층에게 나누어 주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농산어촌 지역의 이동장터 사업과 연계할 경우 농어촌 주민 대상 다양한 생필품 공급 가능

○ **‘그냥드림’ 확대 및 ‘찾아가는 그냥드림’ 본격화**

-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을 본격화
- (3대 표준모델 운영)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차량으로 마을을 순회하며 물품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상담을 제공하는 ‘읍·면·동 복지 연계형’,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민간 연결망을 통해 물품을 전달하고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지자체에 연계하는 ‘지역자원 연계형’, 지자체가 우체국에 그냥드림 신청자 정보를 전달하면 집배원이 배달 과정에서 물품을 전하고 위기 징후가 있는 대상자를 연계하는 ‘공공기관 협력형’으로 운영
- 전국 상공회의소, 기업 등 민간 참여 촉진을 통한 민간후원금 확보

[도서·어촌]

○ **지역별 수요와 이용 여건에 맞는 먹거리 공급방식 운영**

- (공급모델 선택) 상점 유무, 인구와 구매 수요, 공급주기, 신선식품 취급 가능성 및 주민의 이용 여건을 기준으로 이동형·무인형·공동구매형 공급방식을 선택 및 보완

  *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어복버스 확대계획에서 13개 낙도지역을 대상으로 냉동·냉장차량을 활용한 어복장터 운영과 가공식품·생필품을 판매하는 어복점빵 설치를 추진

- (지역별 공급체계 연계) 도서 지역의 운송·공급주기 제약과 육지 연안 취약 어촌의 상권·구매거리 제약을 구분하여 기존 상점 및 지역 운영주체와 연계한 공급·이용 지원체계를 마련
- (고령자 이용지원) 전화주문, 대면 결제 보조와 공동구매 등을 결합하여 고령 주민이 필요한 품목을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운영 지속성 관리) 품절·폐기, 공급주기, 운영비와 주민 이용을 반영한 운

영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기간 및 공급방식의 전환·중단 조건과 기존 이용자의 대체 구매 경로를 함께 검토

□ 기대효과

○ 가가호호 이동장터와 공공먹거리 전달체계 확충을 통해 농어촌의 식품사막을 해소하고, 주민의 영양 불균형과 건강 악화를 예방

○ 농식품바우처 확대와 푸드뱅크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먹거리 안전망 강화

○ 도서·어촌 지역의 공급 제약과 주민의 이용 능력에 맞는 운영을 통해 기초식품·신선식품 접근성을 제고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 국정과제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1.4.2. 생활서비스 공급·연계 기반 확충

□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생활서비스 공급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공급모델과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필요

○ 드론·자율주행·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배송모델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도서·산간지역 등 농어촌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과 상용화 지원은 미흡한 실정

❍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은 낮은 수요 밀도로 인해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인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워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체계 구축 필요

❍ 한편, 도서·어촌 주민은 행정기관 방문과 디지털 기기 활용 제약으로, 각종 생활서비스 안내 이후 서류 준비·보완과 처리 결과 확인을 완료하는데 어려움 존재

- 기존 행정 창구와 지역 현장지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신청·기관 이관·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누락을 보완할 필요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생활서비스 공급모델 발굴·확산

- (공급 유형 체계화) 지역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취약계층 분포 등 여건에 따라 다양한 공급 유형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적합한 모델을 발굴·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마을순회형(이동형), 공동주문배달형, 마을거점(경로당, 마을회관 등) 수령형, 민간연계형 등

- (운영 지원 확대) 국비·지방비 보조를 통해 이동형 특장차량, 거점 냉장보관함 등 유형별 필수 기자재 초기 시설 비용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인력 확보 및 유지 기반을 조성하며, 민간 운영주체(농협, 지역 소매점,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의 자부담과 연계한 민관 협력 운영모델을 발굴·확산

  * 행정안전부는 기아와 협력하여 소멸위기지역 대상으로 목적 기반 차량(Platform Beyond Vehicle: PBV)을 활용한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 추진(실제 배송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통해 운영)

- (우체국 배송망 활용) 전국 읍·면 단위까지 구축된 우체국 네트워크와 집배원 방문체계를 활용하여 민간 배송이 닿기 어려운 취약지역의 물류 접근성을 강화하고, 안부 확인 등 복합서비스 기능과 연계

  * 일본은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생필품 배달, 행정 대행, 이동식 금융·우편 서비스 등 지역생활지원형 우정서비스를 공급

- (사회연대경제조직 활용) 농촌지역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하고, 농촌 주민생활돌봄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하여 지역 중심의 생활서비스 공급체계를 강화

- (농어촌 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 운영) 농어촌 지역공동체 기반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훈련·상담 등 지원 지속 추진

[농촌]

❍ 신기술 기반 생활물류 접근성 제고

- (드론 배송 실증 및 상용화 지원) 거리·지형, 수요 부족 등으로 배송 공백이 발생하는 농어촌·도서·산간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배송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생활물자·식료품 등에 대한 라스트마일 배송체계를 구축

  * 국토부의 'K-드론 배송 사업'과 연계하여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의 생활물자·식료품 등에 대한 라스트마일 배송체계 구축 지원

- (농촌 특화 배송모델 개발 및 확산) 드론 및 자율주행 배송 실증사업과 연계하여 취약지역 특화 배송노선을 개발하고, 생필품·의약품 등 긴급 물품 배송서비스를 우선 적용하며, 드론 이착륙 거점을 마을 거점공간과 연계하여 활용

  * 서산시는 서산우체국과 협력하여 섬 지역 우체국 택배 드론배송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상용화 방안을 논의. 행정안전부는 섬·산간 지역에 드론 배달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등 시험 운항 추진 중

- (AI·IoT 기반 생활물류 스마트화) AI 기반 수요예측 및 배송경로 최적화 기술을 적용하고, 마을 거점에 IoT 연동 냉장·냉동 스마트 보관함을 설치하여 주문부터 수령까지 연결되는 스마트 생활물류체계를 구축

  * 마을 단위 주문 데이터를 누적·분석하여 품목별 수요 및 배송 주기 예측, 복수 마을을 순회하는 경우 최적 배송 경로를 제시

** 보관 물품에 따른 온도 모니터링, 수령 알림, 재고 관리 기능 등을 탑재하여 신선식품·의약품 등의 품질을 유지하고, 고령자를 위한 음성 안내, 중앙 콜센터 등 아날로그 접근 수단 병행

- (기술 적용 기반 조성) 농촌 물류 신기술 적용을 위한 규제 개선, 운영주체 역량 지원, 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 등 생활물류 기반을 조성

  * 드론 비행 고도·거리제한 완화, 비가시권 비행 허용 범위 확대 등

○ 생활서비스 공급 유인체계 마련

-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의 초기 시설 설치비와 물류비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민간 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 부족에 따른 운영 실패 리스크를 공공이 함께 분담함으로써 소매점·생활편의시설 등의 취약지역 공급 유인을 강화

- 소매 유통기업 등의 취약지역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상 지역 선정기준 정비와 영업허가·위생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특례를 병행하여 생활서비스 공급 기반을 확대

[도서·어촌]

❍ 지역별 미배송 구간 및 최종 수령 여건 보완

- (공공보완 대상 선별) 추가배송비, 배송 불가, 운송 지연, 품질 저하와 미수령을 구분하여 공공보완이 필요한 지역, 품목, 구간을 선별

  * 해양수산부는 2026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개편하여 택배 이용 증빙에 따라 건당 3,000원을 정액 지원하고, 자녀·지인 등이 대신 결제한 택배도 섬 지역 주소지 확인 시 지원대상에 포함

- (지역별 전달망 보완) 기존 민간 배송망을 바탕으로 지역별 전달체계를 보완하되, 도서 지역은 기항지·마을거점 사이의 연결을, 육지 연안 취약어촌은 배송망의 미취급 구간과 최종 수령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검토

- (보관·인계 책임 정립) 운송·보관·인계의 담당과 운영비 분담, 분실·변질 책임을 협약에 반영하고, 냉장·냉동품 등 품목별 관리기준을 구분

- (운송 중단 대응) 운송 중단·지연에 대응하는 보관·인계 조정과 수령 안내 체계를 보완하되, 도서 지역은 결항에 따른 공급중단 가능성을 고려
- (의약품 별도 적용) 의약품은 일반 생필품의 공동배송·보관방식을 일괄 적용하지 않고, 비대면진료 및 약사 관련 기준에 따른 대상 확인·복약지도·수령 절차를 별도로 적용

❍ **생활서비스 신청부터 처리 결과 확인까지 현장지원 보완**

- (신청 후속관리) 어촌의 각종 생활서비스 신청 미완료를 줄이기 위해 기존 행정창구와 현장지원 간 연계체계를 보완하고, 서류 준비·보완·기관 이관·결과 확인의 후속관리 기준을 마련
- (현장지원 역할 한정) 민원 접수·처리와 자격 판정은 소관 기관이 담당하고, 수협·어촌계·마을활동가·중간지원조직 등을 활용하는 경우 지역 여건과 업무별 위임·본인확인·개인정보 처리요건을 고려하여 허용된 보조기능으로 역할을 한정
- (전문서비스 연계) 현장지원의 범위는 안내·신청보조·기관 연계·결과확인 등을 중심으로 정하고,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해당 기관으로 연결
- (기록·디지털 보완) 업무별 적법한 처리 범위에서 기존 기록을 활용하여 신청 보완·이관·회신의 누락을 관리하고, 디지털 수단은 현장지원의 연속성을 높이는 보조수단으로 운영

□ 기대효과

❍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생활서비스 공급모델과 우체국 배송망, 사회적경제조직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접근성 제고

❍ 드론·AI 등 신기술 기반 생활물류체계를 구축하여 도서·산간 지역 등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의 배송 공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서비스 공급 기반 마련

❍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체계를 통해 생활서비스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 지역별 운송·수령 제약에 대응하여 생활필수품 전달의 단절 완화하고, 안내부터 서비스 이용까지의 연계를 강화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 국정과제 54.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 국정과제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2. 소득 기반 강화와 지역 활력 제고

□ ‘전략 2. 소득 기반 강화와 지역 활력 제고’는 농어촌 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자원과 경제활동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인 활력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기본소득 등 농어촌 주민을 위한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연대경제와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청년·여성 등 다양한 주체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AI 등 첨단 기술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득·일자리 창출이 요구됨.

○ 아울러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를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경제활동과 지역 활력으로 연결하는 한편, 귀농어·귀촌인·이주민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전망 확충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 새로운 기술의 활용과 인적자원의 유입을 중심으로 핵심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제안함.

2.1. 농어촌 소득안전망 강화

2.1.1. 농어업인 소득안정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농가소득의 절대적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소득 불안정이 구조적으로 확대

- 재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동일 농지 내 혼작은 인수가 제한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비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 재해대책에 의존
- 어업 분야의 경우 양식업에 한정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만 운영되며, 어로어업 및 내수면 어업에 대한 재해보험이 없어 재해 사각지대 발생

❍ 이에 공익직불제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실질적 소득 보전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농어업인 경영위기에 대응하는 종합적 안전망을 고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인 소득 기반 보장 필요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 농어업인 사회보험 지원 지속

- 국민연금 가입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 기반을 유지하고, 건강보험료 경감을 통해 가계부담을 완화

❍ 공익직불제 고도화를 통한 소득 보전 기능 강화

- 2027년 정부는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공익직불 예산 확대 예정
  * 비진흥지역 밭의 기본형 직불금 지급 단가를 논 수준으로 상향
  * 전략작물직불 및 친환경 농업직불 예산 확대,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 도입 등 추진
- (기본형 체계 정비)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농어업인의 최소 소득안정과 농어촌 정주 유지 등 공익기능 창출에 대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방지 등 추진체계에 대한 단계적 정비 필요
  *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소농직불·면적직불, (수)소규모어가직불·어선원직불·조건불리직불
- 중소규모 농어가 중심의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여 안정적인 영농·영어를 지원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환경 보전, 먹거리 안전(농약, 수질 등) 등 공익적 기능 수행 준수사항 및 이행점검 체계를 정비하여 정책 효과성 제고

- (선택형 고도화) 공익활동별 공익기능 창출 수준 및 난이도·비용에 따른 유형별 준수사항과 보상 수준 고도화 또는 신규 발굴하며, 유사 분야 직불제는 통합 추진체계로 정비하여 효율성 제고

- (어업인) 고령 어업인의 은퇴·소득전환 준비를 위해 경영이양직불 등 관련 제도의 상담·신청 연계를 보완하고, 현행 자격·이양 요건과 이양 이후 소득·생활 여건을 함께 고려

  *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이 신규 유입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여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후계인력의 어촌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

❍ 농어업 경영위험 대응을 위한 경영 안전망 고도화

- (농업 재해·수입보장 확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보험 가입이 어려운 작물에 대해서는 농작물 준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재해와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에 대응

- (농산물 가격안정제 신설)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크게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 불안을 완화

- (사료·비료 원료구매자금 공급 확대) 사료 및 비료 원료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과 축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

- (어민소득안정보험 도입) 어업활동은 보험목적물 특정 불가 및 피해규모 산정이 곤란하여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해에 따른 보상 보험이 아닌 어업 수입을 보장하는 보험제도를 통해 어업손실 보전을 통한 경영안전망 확보*

  * 공유자원 대상 생산활동이라는 점에서 자원관리(TAC 참여, 어획량 보고 등)에 기반한 손실 보전 필요

□ 기대효과

❍ 기본형 및 선택형 공익직불제 확대를 통해 농어업인 소득안정 기반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유지를 위한 공익활동 참여 촉진

❍ 농업 재해·수입보장 확대 및 농산물 가격안정제 신설 등을 통해 자연재해·가격하락 등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경영 안전망 구축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가계의 소득안정성 제고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 국정과제 71.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2.1.2. 농어촌 주민 소득지원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쇠퇴 및 지역경제 위기 심화

- 농가소득은 도시 가구 대비 58.5%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핵심 경제활동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해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이 붕괴되고 필수 서비스 공급의 어려움이 가중(심재헌 외, 2026). 이는 정주 의지를 낮추고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

❍ 도농 간 인프라 격차로 인해 농어촌 주민은 교통·주거·에너지 등 생활 필수 영역에서 구조적인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소득지원 확대 필요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농촌 1인 가구는 도시 1인 가구에 비해 대중교통 부족과 난방 등 에너지 접근성 차이로 인해 식료품, 교통, 주거·광열비 등 생활 필수 영역에서 월평균 약 15만 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 이러한 초과 지출은 개인의 소비 성향이나 선택이 아닌, 농촌의 불리한 거주 환경이 강제하는 회피 불가능한 고정 비용의 성격으로 도농 간 구조적인 비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소득지원 필요

❍ 농어촌 기본소득의 참여소득 성격

- 농어촌 기본소득은 무조건적 현금 지급이면서도, 인구감소지역에 정주하는 행위 자체가 지역사회 유지·경관 관리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참여소득)의 성격을 함께 보유

  * 거주 사실로 기여가 확인되어 별도의 참여 판정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행정비용 없이 참여소득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이점을 보유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 농어촌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및 제도화

- (시범사업 현황) 2026년 기준 인구감소지역 17개 군에서 시범 시행. 2027년 35개 군으로 확대 예정으로, 시행 지자체의 재정 부담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율 상향(40% → 50%)

  * 1차 공모 선정 10개 군은 2025년 10~12월 지급을 개시하였고, 2차 공모 선정 7개 군은 2026년 6월 발표되어 2026년 8월부터 지급(전 주민에게 월 15만 원, 일부 군은 지방비 추가로 2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13]

- (평가 및 본사업 확대)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거쳐 본사업 확대 및 제도화를 추진하되, 국고 보조율 등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병행 검토

  * 기본소득 지급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신건강 개선, 사회적 자본 축적, 인구 유입 등에 미치는 효과를 엄밀하게 실증하고, 이를 토대로 2028년 이후 전국 확대를 위한 국고 보조율 등 재정 분담 구조 현실화 및 법제화를 추진

❍ 농어촌 참여소득형 소득지원 모델 보완

- (기본소득–참여소득 결합 검토) 기본소득의 무조건 지급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위에 지역사회 기여 활동에 대한 참여소득형 지원을 선택적으로 얹는 확대 방안을 별도 층위의 검토 과제로 추진

  * 생태·경관 보전, 돌봄·생활서비스 등 지역 유지에 기여하는 활동을 대상으로 하되, 참여 요건은 자격 심사가 아닌 활동 등록 방식으로 설계하여 행정 부담과 배제 위험을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이행 확인만으로 부정수급을 방지

- (관계부처 정책 연계) 청년층 대상 소득보장 시범사업 등 관계부처 정책과 연계하여 농촌형 기본사회 서비스 공공일자리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 생활서비스 전달, 마을 경관·환경 관리, 농촌재생 매개 등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청년·중장년 일자리로 전환[14]

- (재원 다변화) 참여소득형 지원과 공공일자리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기존 재원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

❍ 농어촌 주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농지연금·농지이양은퇴직불 등 농업인에 특화된 기존 노후소득 제도와의 연계·확대와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 등으로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확충

---

13)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 6. 11.).

14) 보건복지부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참여했을 때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청년 소득보장 시범사업을 검토 중. 단 복지부는 '참여소득 도입은 정해진 바 없으며 연구·검토 단계'라고 밝힘(세계일보, 2026. 7. 18.).

□ 기대효과

❍ 도농 간 구조적 생활비 격차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

- 농어촌 특유의 거주 환경으로 발생하는 고정적 초과 지출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보전하여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와 생활 안정을 도모

❍ 참여형 소득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유인 창출

- 무조건적 기본소득 위에 참여소득형 지원을 결합하여 정주 안정과 함께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유인

❍ 고령층 노후 빈곤 완화

- 다층 노후소득 보장으로 급격한 고령화 충격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 국정과제 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 국정과제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 국정과제 90.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 국정과제 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

❍ 국정과제 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2.2. 사회연대경제 육성 및 계층별 지역 일자리 지원

2.2.1. 사회연대경제 및 포용적 지역 일자리 확대

가)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 혁신 모델 발굴·확산 및 일자리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 과소화·고령화로 시장 기반의 일자리 창출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바, 지역 자원과 주민 참여를 결합한 사회연대경제가 일자리 창출 및 생활서비스 공급의 대안적 수단으로 부상

* 사회연대경제 정의: 다양한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방식

- 소멸 위기, 돌봄, 주거 등 농어촌 지역 내 문제가 정부나 민간 주체들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
-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3. 8., 제정) 등 농촌형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

❍ 농어촌 내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농어촌 지역 여건과 공동체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혁신 모델을 창출하는 데 한계

- 농촌 내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2011년 193개에서 2023년 9,058개로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추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 부재 등 자립기반이 취약한 실정
- 기본사회 관점에서 농어촌 주민이 정주 여건과 안정적 소득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육성하여 지역 내 일자리 및 기초 서비스 공급의 주체로 활용할 필요

❍ 사회연대경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연대경제를 매개로 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 혁신 모델 발굴

- 농어촌 생활 수요(돌봄, 교육, 문화, 생활서비스, 환경·경관관리 등)와 결합된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 사업모델 발굴

  *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 사업 연계 추진 – 농어촌 특화형 사업 모델 도입 및 사업 내 비중 확대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기존 사회적경제조직과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발굴된 주민 공동체 및 지역 기반 주체(예: 신활력플러스 사업 액션 그룹 등)들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혁신 모델 발굴

-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유통, 농촌체험, 농어업유산 등 기존 농촌특화산업에 사회연대경제모델을 도입하여 지역 활성화의 경로로 활용

  * 제주 '다시봄 프로젝트' – 지역 내 유명 쉐프·레스토랑과 연계하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미식 관광 루트를 만들고, 농산물 소비 촉진 등 농민·주민·방문객이 상호 교류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활동을 추진

❍ 농어촌 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권역별 지원기관 운영, 민간 주체들이 참여하는 멘토링 활성화 등

- 사회연대경제 주체들 간 협업·연계를 촉진하는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권역별, 전국 단위) 운영

- 사회적금융기관(투자주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대상 재정 지원체계 마련

❍ **사회연대경제 기반 농어촌 일자리 확충**

- 농어촌 생활서비스 분야(식품구매, 세탁, 이동 등) 사회연대경제 기반 일자리 확대
- 돌봄농장, 주민생활돌봄공동체 등 기존 농업·농촌 기반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통한 돌봄 일자리 확충
- 신규인력의 사회연대경제 부문 진입을 위한 인턴십·펠로우십 프로그램 등 인력 양성 수단 마련
- 사회연대경제 종사자 대상 교육·역량강화·경력개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내 경력 경로 형성 지원

□ 기대효과

❍ 농어촌 생활 수요와 결합된 사회연대경제 혁신 모델의 체계적 발굴·확산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 및 정주 환경 개선 기대

❍ 사회연대경제 참여 주민의 일자리·소득 기회 확대

❍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주민공동체의 자립 기반 강화

나) 농어촌형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 경제는 외부 의존성이 높은 반면 지역 내 자원 순환 구조가 취약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성과 지역경제의 자생력 확보 제약

-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생산-소비-소득이 순환되는 지역순환경제 체계 구축 요구

❍ 기본사회 핵심 축인 기본소득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순환경제의 추진 동력을 강화할 필요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순환경제 모델의 선제적 발굴·실증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지역 내 환류 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어촌 맞춤형 순환경제 모델을 정립할 필요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 농어촌 기본소득-지역화폐 연계 순환경제 모델 발굴·실증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연계한 지역순환경제 통합 모델의 선제적 발굴·실증
- 기본소득의 지역 내 소비 순환 경로를 설계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지역 기반 경제활동 주체와의 연계 모델 확산

❍ 농어촌 지역화폐 체계 개선

- 농어촌 지역화폐 사용처에 로컬푸드 직매장, 사회연대경제 조직, 농어촌 소상공인, 농촌체험·관광 사업체를 우선 포함하여 지역 내 소비 환류 강화
- 통합돌봄 바우처, 농촌 워케이션 상품, 생활인구·관계인구 대상 체류형 상품 등과 지역화폐 연계를 통해 외부 소비를 지역 내 자원으로 전환

❍ 로컬푸드 중심의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고도화

- 시군단위 푸드플랜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함께 로컬푸드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AI 활용 수요 예측 기반 스마트 유통 시스템 구축 등 로컬푸드 혁신 추진

□ 기대효과

❍ 농어촌 주민의 소득·소비·생활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는 자립적 경제 기반 마련

❍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소비 환류 및 소상공인·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지역 기반 경제 주체의 수입 기반 확보

❍ 차세대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소비자의 신선·안전 먹거리 접근성 제고

다) 청년·여성 등 계층별 수요 맞춤형 지역 일자리 창출

□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은 인구감소·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시장 일자리 창출에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청년·여성·고령자·이주민 등 계층별로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에 다양한 제약 요인 존재

- 농어촌 청년인구(20~39세) 비율은 2000년 28.9%에서 2024년 21.3%로 감소하였고, 면부 청년인구 수는 2000년 146만 명에서 2024년 86만 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 내 청년의 비중과 활동 기반이 약화

❍ 한편 농촌 내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연대경제, 지역순환경제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계층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연결이 필요

❍ 기본사회 관점에서 농어촌 주민 누구나 안정적 일자리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층별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진입 경로 확대와 정착 기반 마련이 필요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 청년의 농어촌 일자리 확대 및 진입·정착 경로 다변화

- 농어촌 사회연대경제 조직, 농촌융복합산업 등 신규 일자리 영역에서의 청년 채용·정착 인센티브 강화
-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청년 매개자(농촌재생 등)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경로 마련
- 사회연대경제 분야 청년 창업 지원(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과 농촌 청년 정책 간 연계 강화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 포용적 고용 기반 강화

- (고령자) 노인일자리 사업 및 농어촌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사업 연계, 경험 활용형 일자리(마을 경관 관리, 생활 지원, 돌봄 등) 확대,
- (여성) 농어촌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및 사회 참여 확대. 돌봄·생활서비스·농촌융복합산업, 로컬푸드 등 여성 친화형 분야의 협동조합·마을기업 진입 지원
- (이주민) 결혼 이민자 등이 보유한, 언어·문화·생활기술 역량을 활용한 일자리 발굴 등

❍ 계층별 일자리의 안정성·지속성 제고

- 농어촌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처우 개선(사회보험 가입 등) 가이드라인 마련 및 단계적 확산
- 계층별 일자리 진입·유지 현황 및 정책 효과에 대한 정기 점검(실태조사) 실시

□ 기대효과

❍ 농어촌 청년의 일자리 진입 경로 확대와 정착 기반 통합 지원을 통해 청년의 안정적 농어촌 정착 및 농어촌 청년인구 회복

❍ 여성·고령자·이주민·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농어촌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기반 제공

❍ 농어촌 일자리의 질 제고 및 처우 개선을 통해 농어촌 종사자의 안정적 경력 형성 및 삶의 질 향상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 국정과제 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국정과제 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2.2.2. AI·디지털 기반 신산업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고령화·과소화로 인해 농림어업은 공통으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비롯한 생산성 정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AI를 비롯한 데이터·로봇 등 신기술이 중요한 대응 수단으로 부각

- 글로벌 농식품 산업은 AI·빅데이터·로봇·바이오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애그테크(AgTech)·푸드테크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정밀농업·스마트팜·스마트양식 등 기술 기반 생산모델이 농어업의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

○ 농어촌 지역에서 자생적 성장 동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디지털 창업·혁신을 매개로 한 신산업 주체의 적극적 육성을 통해 농어촌 산업 구조의 다변화와 미래 성장 기반 확보 필요

○ 그러나 국내 농어업의 AI·디지털 기술 보급은 일부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노지 작물·소규모 농가·고령농의 기술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 농어촌 주민의 신기술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저조

  * 디지털정보화 수준 – 일반국민 100% vs 농어민 80.6%(정준욱 외, 2025)

- 스마트팜·스마트양식 등 자본 집약형 모델은 청년·신규 진입자에게 진입장벽이 높고, 고령농의 활용 가능성은 더욱 제한적

○ 기본사회 관점에서 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이 일부 집단에 집중되지 않고, 농어촌 주민과 농어업 종사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농림어업의 AI·디지털 전환을 포용적 및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농어업의 AI·디지털 전환과 농촌 디지털 창업·혁신 생태계 구축을 연계한 신산업 육성이 요구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 AI 기반 스마트 농림수산 생산모델 확산

- 정밀농업·스마트팜·스마트양식 등 첨단 생산모델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시설원예·축산·노지 분야별 정밀농업 모델 보급 및 청년·신규 진입자 대상

임대형·공유형 스마트팜 확대

- 소규모 농가·고령농이 접근 가능한 보급형 스마트 농업 솔루션(저비용 센서, 모바일 앱 등) 개발·보급

❍ 농촌 디지털 창업·혁신 거점 조성

- 빈집·폐교·유휴 공공시설 등 농촌 유휴자원을 활용한 창업 거점을 조성하고 창업 보육, 코워킹(협업), 신산업 관련 실증, 교육, 네트워킹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
- 농산업 데이터·AI·푸드테크·애그테크·로컬 콘텐츠·디지털 헬스케어 등 농촌 연계 분야 창업기업 발굴·유치·육성
-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활성화펀드(로컬펀드) 등 지역 재원과 연계를 통한 거점 운영 및 창업 투자 생태계 활성화

❍ 농림어업 AX·디지털 포용 기반 구축

- 소농 및 고령농의 AI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형 기술 지원 서비스(장비 임대, 현장 기술 컨설팅 등) 체계 구축
- 농어업 분야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표준화·개방을 통해 농어업인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AI 학습·서비스 개발 기반 마련

* 농업·농촌 AX 데이터 허브 구축 시 농업인들의 접근성 제고 및 데이터 제공에 따른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

□ 기대효과

❍ AI 기반 영농·영어 의사결정 지원과 노동 절감형 기술 보급을 통해 농어업인의 작업 부담 경감 및 생산성 향상

❍ 소규모 농가·고령농 등 모든 농어업인이 디지털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

❍ 역량을 갖춘 창업가 및 기업의 농어촌 진입·정착 확대를 통해 농어촌 인구·산업 활력 회복 기대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 국정과제 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 국정과제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 국정과제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2.2.3. 농어촌 특화산업 육성 및 고도화

□ 배경 및 필요성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2014년「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 이후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농어촌 자원의 가치화와 농가소득 다변화에 기여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는 제도 도입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24년 약 2천여 개소에 이르며, 농산물 가공·체험·관광·외식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이 확장

❍ 최근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소비·향유 수요가 다양화되었으며, 농어촌 특화산업의 시장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로코노미(Loconomy) 등 지역 가치 기반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농어촌 농산물·식문화에 대한 가치소비 수요 증가

- 치유·워케이션·러스틱 라이프 등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흐름의 확산으로 농어촌 체류·관광 수요 또한 다변화·고도화
- K-푸드 글로벌화 흐름에 따라 농어촌 농산물·전통식품·식문화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동반 확대

❍ 대내외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들은 영세성, 마케팅·유통·브랜딩 역량 부족, 사업 지속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는 한계를 노정

❍ 농어촌 주민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보와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 고유 자원을 기반으로 한 특화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역 단위 통합 산업생태계 차원의 고도화가 필요

❍ 민간 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사회공헌(CSR) 활동의 고도화 흐름 속에서, 기업과 농어촌 간 협력이 농어촌 특화산업 성장과 지역 활력 제고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
- 이러한 경향을 농어촌 특화산업 정책에 적극 연계함으로써, 농어촌 경영체의 외연 확장과 도시-농촌 간 상생 협력의 정책 기반 마련 필요

❍ 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5극3특 등)과 연계하여 농촌지역 내 특화산업의 공간적 집적과 기업 간 협력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증대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 **농촌융복합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규 산업군 발굴·육성**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강화) 농촌융복합사업자 육성 확대를 통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확산으로 지역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등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에 대한 단계별·맞춤형 지원을 강화

- K-푸드·K-콘텐츠 연계 해외 진출, 수출 안내 등 우수 경영체의 글로벌 진출 지원
- 치유, 반려 동식물, 고령친화산업, 지역 기반 콘텐츠 등 농업·농촌 가치와 자원에 대한 다양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는 신규 농어촌 특화 산업군의 발굴·육성

○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서비스 산업 육성

- 체험형 로코노미(미식 투어, 양조장·가공장 투어, 농가 다이닝 등) 활성화 및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운영 참여 확대
- 농어업유산·전통문화·생태자원 등 무형 자원의 산업적 활용 모델 발굴(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화, 교육 프로그램, 문화 행사 등)

○ 농촌 로컬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투자 기반 확대 등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체에 대한 단계별(창업-성장-도약-스케일업) 맞춤형 지원체계 정비
- 농업·농촌 현장과 창업가를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농업·농촌 가치 기반 비즈니스 모델 발굴

  * 농촌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 사업 – (예비)창업가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다양한 농촌 특화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 농촌창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등을 통한 농촌창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 농촌 혁신아이디어 콘테스트 등

- 농촌특화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등 지역단위 지원 주체들의 역할 확대

❍ **농산업혁신거점 조성 및 혁신벨트 구축**

- 농업 전후방 연계산업과 바이오·푸드테크 등 농업 기반 신산업을 아우르는 농산업혁신거점을 권역별로 조성하고, 생산·연구·창업 기능이 집적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 지역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간 네트워크에 기반한 농산업혁신벨트를 조성하고, 창업지원·기업육성·기업 간 협력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산업 가치사슬의 착근
- 지자체·연구기관·대학·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농촌특화산업 육성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지역 수요 기반의 산업 육성 전략 수립 및 투자 유치 촉진

❍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농촌특화산업 혁신 및 농어촌 활력 제고**

- 농촌특화산업 부문의 농어촌-기업 상생 협력 모델 발굴 및 확산

  * 대형 유통사·외식 프랜차이즈·식품기업 등과의 계약재배·한정판 협업상품 개발 등 농어촌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모델 확대, 기업의 농산물 직거래·로컬푸드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매칭 지원

- 기업의 사회공헌(CSR)·ESG 활동과 농어촌 정책의 연계 강화

  * ESG 경영 흐름과 연계한 농어촌 친환경·저탄소·지역공동체 가치 창출형 협력 모델 발굴

- 기업 참여형 농어촌 임팩트 투자 생태계 조성

  * 농식품모태펀드 등과 연계한 기업의 농어촌 스타트업·사회연대경제 조직 투자 확대

□ 기대효과

❍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의 산업화를 통해 농가·경영체 소득 기반 확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력 제고 기대

❍ 생활인구·관계인구·방문객 등 외부 수요와 농어촌 자원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생태계 형성을 통한 농어촌 공간의 활력 회복

❍ 농어촌 특화산업 성장을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매력적인 경제활동·창업 공간으로의 위상 확립

❍ 농산업 거점 조성을 통해 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농어촌을 지역산업 생태계의 주요 공간으로 활성화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 국정과제 71.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 국정과제 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2.2.4. 안전한 일자리 환경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업은 산업재해율이 높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분야로,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건강 보호가 시급한 과제

- 농작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기준 연간 약 251명 수준으로 지속 발생

  * 농작업재해 사망자 수: 2019년 244명 → 2023년 276명

- 농작업 특성상 특정 자세의 장시간 반복, 온열질환, 농약 중독 등 만성적 건강 위해요인에 상시 노출

  * 농업분야 산업재해율 - 2023년 기준 0.76%(전체 산업 평균 0.66%)

- 농어촌의 빠른 고령화와 기계화율 확대가 농작업 재해 위험을 동시에 증대

❍ 농어촌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며 작업·주거·인권 측면의 사각지대 발생

- 외국인 근로자의 표준 근로계약, 주거·생활 여건, 임금·근로시간, 인권 보호 등의 영역에서 제도적 보호와 현장 이행 간 격차가 존재

❍ 여성·청년 등 농어촌 신규 진입 인력의 안전·복지 기반 또한 미흡하여,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노동 환경의 개선이 중요

❍ 농어촌의 모든 일하는 사람이 거주지역·국적·연령·성별과 무관하게 안전하고 존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어업·농어촌 일자리의 질적 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

- 정부는 '제2차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2025~2029년)'을 통해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도입·계획 중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 안전한 농어업 작업환경 조성

[농업]

- 농어업 작업 현장의 재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노력 강화

  * 농업인안전리더 양성, 농작업안전관리자 확대, 농작업·어로작업 안전 가이드라인 정비 등

-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가입 확대 및 보장수준 강화
- 농기계 사고 저감을 위한 119상황실 연계 시스템 구축, 농기계 검정기준 개정, 등화장치 부착 지원 등 다각적 노력 추진
- 고기능 첨단소재 개인보호구, 스마트 기술 접목 안전장비, 고령·여성농업인 대상 근력 증강·보조 웨어러블 장비 등 농작업 보호구·편의장비 개발·실용화

- 폭염·집중호우·한파 등 기후 재해 대응 작업 매뉴얼 보급 및 데이터 기반 농작업재해 예·경보시스템 구축

- 농작업 관련 질병 진료·예방 강화 및 농약·화학물질 노출 등 만성적 건강 위해요인 관리 체계 개선

[어업]

- (위험·적용 사각지대 진단) 어업활동 유형별 사고·건강위험과 종사상 지위별 제도 적용범위를 함께 고려하는 예방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기존 지원에서 누락되는 위험과 대상 확인

- (어작업위험 유형화) 작업환경·장비 사용·승하선과 미끄러짐·끼임·전도 위험, 반복작업·중량물 취급·불안정 자세 등에 따른 누적 건강위험을 예방수단 선정에 반영

- (질병·손상조사 연계)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조사는 조사설계와 표본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위험요인과 우선 지원대상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기존 안전보건 점검·교육·지원사업과 연계

  * 전국 어촌지역 3,600 어가의 만 19세 이상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업무상 질병·손상조사에서 1년 중 1일 이상 휴업을 동반한 질병 발생률은 5.2%, 손상 발생률은 2.1%로 집계

  * 업무상 질병·손상조사 결과는 예방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개인의 업무관련성이나 산재·보험 보상 여부를 판정하는 자료로 직접 대체

- (예방수단·이행관리) 확인된 위험에 따라 작업동선·장비·작업방법·보호구·교육을 보완하고, 개선 이행과 반복 위험을 점검하는 후속관리 체계 강화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6년 어선원 안전·보건 점검 및 감독의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면서 위험성평가 모바일 플랫폼 운영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신청을 함께 안내

❍ 취약계층(여성·청년·외국인) 근로여건 개선

- 여성농의 출산·육아·돌봄과 영농 병행을 지원하는 통합 지원체계 정비

  * 영농 도우미 제도 확대, 농촌형 공동육아 모델 확산 등

- 농어업 분야 신규 진입 청년 대상 안전·노동·권리 교육 강화 및 진입 단계별 멘토링 체계 구축

- 계절근로·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 정착 및 임금·근로시간 모니터링 강화

  *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기간 등을 고려한 농업인안전보험 전용상품 개발 및 보험 가입 확대

-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한 기존 주거기준이 농어촌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숙소 점검과 시설 개선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교통, 통역·상담, 행정·금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확충

  *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2026년 도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개보수비 지원 등

  * 농식품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을 통해 기존의 신축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마을 내 방치된 폐건물, 미사용 창고, 공장, 공공시설 등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기숙사로 활용. 2027~2029년 5개소 건립을 120억 원 규모로 추진

-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교부와 계약 내용의 이행을 정착시키고,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과 권리구제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국어 노무교육을 실시

- (어업 외국인) 외국인 선원,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 등 제도별 적용 업종과 고용형태를 구분하여 계약·임금·숙소·안전 관련 지원과 신고·권리구제 기관의 연계체계를 보완

  * 외국인력 도입 및 운용은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톤 이상 어선의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와 20톤 미만 어선·양식업 등의 고용허가제 적용을 구분하여 안내

□ 기대효과

❍ 농어촌 일자리의 질 제고를 통한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 및 농어촌 노동시장의 매력도 제고

❍ 농어업인 경영 안정 및 사고 발생 시 회복 지원 기반 강화

❍ 여성·청년 등 신규 진입 인력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통한 안정적 정착 및 농어업 인력 기반 확충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주거·인권 여건 개선을 통해 농어촌 노동시장의 보편적 인권 보장 기반 마련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 국정과제 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 안전관리체계 확립

❍ 국정과제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 국정과제 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2.3. 생활인구·관계인구 기반 지역활성화

2.3.1. 체류·방문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상주인구 기반의 지역 내수시장이 급격히 축소되는 가운데, 관광·체류·방문 수요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이 필요

❍ 최근 농촌관광은 마이크로화, 융복합화, 창조적 로컬화 등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전략의 고도화가 필요

❍ 이에 더해 농촌관광의 새로운 수요처로서 외국인 대상 방한 농촌관광 시장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화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단순 방문형, 경유형 방문 중심의 농촌관광은 농어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체류 기간과 지역 내 소비 효과를 확대하는 방안 필요

❍ 원격근무 확산과 워케이션 수요 증가 등 생활양식 변화에 대응하고, 생활인구·관계인구와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로컬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체류형 지역경제 기반 구축 필요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가) 농촌관광 고도화와 방한 관광 활성화

❍ 농촌 휴양서비스산업 육성 지속

- 농촌관광을 통한 농촌 관계 인구 유입 촉진 등을 위하여 농촌관광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관광 상품·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 보험 가입 등 지원

❍ 관광 패러다임 변화 대응을 위한 농촌관광 기반 구축

- (마이크로화 대응) 단체 방문객 수요에 맞추어져 있던 기존의 농촌관광 인프라를 소규모·개별관광(micro tourism) 맞춤형 시설로의 전환 지원

  * 나홀로 방문객, 부부 방문객, 연인 방문객, 모녀(母女) 방문객, 부자(父子) 방문객, 가족 방문객 등 마이크로 단위 방문객을 위한 접객 시설 확충

** 경남 진주시 정수문화마을 사례: 기존의 단체 방문객 수용 인프라를 지자체 지원을 통해 은퇴한 부부 방문객의 체류를 위한 마이크로 관광 인프라로 전환

*** 마이크로 투어리즘 프로그램 사례: 30~4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혼자하는 산촌여행'(강원도 인제군 하추리 산촌마을), 시집간 딸과 친정엄마가 함께 하는 벚꽃 여행(충청남도 홍성군 ㈜행복한 여행 나눔) 등

- (융복합화 대응) 과거 농촌관광의 주요 프로그램인 농업 및 농촌생활 체험을 넘어 교육, 문화·예술, 건강·치유, 비즈니스 구상, 투자, 취미 등 다양하게 파편화된 관광 수요자의 특수목적과 결합한 맞춤형 융복합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농촌관광 영역에 부동산 관광, 투자 관광, 낚시 관광, 생태탐사 관광, 역사교육 관광 등 다양한 융복합형 마이크로 투어리즘 프로그램 개발. 이러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개인 관광(FIT)과 편리한 패키지 관광(PT)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어야 함.

* 2026년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역시 농촌에 적극적으로 육성 필요

- (창조적 로컬화 대응) 힙(hip)한 농촌 로컬 관광명소 발굴, 해당 명소와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창의적 장소 기반 창업, 해당 명소·기업·관광 홍보 등 지원

*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로컬 힙 프로젝트'의 농어촌 버전인 (가칭)'방방곡곡 로컬 힙 농어촌관광 프로젝트' 추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연계한 농어촌 로컬 힙 청년 창업도 지원

❍ 농촌관광 기획·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단위 관광 중간지원조직 육성

- 농어촌 시·군에 현존하는 중간지원조직 내에 농촌관광 DMO(지역관광추진조직) 기능 육성. 향후 지역 단위 농촌관광 전문 여행사로 성장하도록 유도

* 인제로컬투어사업단과 같은 관광 전문지원조직의 지역단위 농촌관광 기획·운영 기능 강화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관광 전문지원조직이 없는 곳의 경우는 기존 중간지원조직 내에 농촌관광 DMO 기능 육성 지원

- 농어촌 시·군이 농촌관광 DMO를 통해 농촌관광 육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DMO가 관련 세부 사업들을 기획·운영하도록

지원체계 마련

- 현행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지역단위 농촌관광 지원사업' 등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지역 단위 농촌관광의 기획·운영 사업자로 기능하도록 지원

○ K-농촌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 '외래 입국자 3천만 명 시대'를 2029년까지 달성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과 발맞추어 농어촌 지역의 K-미식, K-컬처, K-헤리티지 등을 활용한 인바운드 농촌관광객 유치 지원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외국인 대상 농촌관광 지원은 '외국인 농촌여행상품 개발·운영 지원사업' 외 거의 없는 실정임.

- 지역별 특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융복합 거점 육성을 통해 인트라 바운드 방문객뿐만 아니라 인바운드 방문객 유치 또한 활성화할 수 있는 농어촌관광 지역 거점 조성

* K-농촌 미식벨트, K-농촌 문화지구, K-농촌 치유관광지구, K-농촌 헤리티지벨트 등

나) 농촌 체류형 소비·지역경제 연계 강화와 일·생활 결합 모델 확산

○ 농어촌 워케이션 및 농어촌 살아보기 활성화

- 일(work), 휴식(vacation), 생활(life)이 결합된 농촌 워케이션 거점 육성 활성화 및 전문화

* 현재 농촌 워케이션 거점으로 선정된 10곳(경기 이천, 충남 공주, 강원 강릉 및 홍천, 전북 정읍 및 남원, 전남 곡성, 경북 영천 및 상주, 경남 남해) 외에 추가적인 워케이션 거점을 농촌에 육성

** K-농촌 미식벨트, K-농촌 문화지구, K-농촌 치유관광지구, K-헤리티지 벨트 등과 연계 통해 농촌 워케이션 거점을 육성하여 전문화와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한편, 해당 거점에 생활서비스를 연계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또한 함께 도모

- 기업·기관 연계형 농촌 워케이션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정부 조직, 공공기관부터 특정 농어촌 지역과 연간 협약을 통해 팀 단위 워케이션 프로그램 수행. 중

장기적으로 (세제 감면 등을 지원하여) 민간기업으로 확대

* 농어촌 워케이션 운영 주체에 농어촌 지역-기업·기관 연계 워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지원

- 기존의 귀농·귀촌 준비를 위한 체험 수준을 넘어 지역활동, 공동체 참여, 로컬 창업 등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농어촌 살아보기 고도화 추진

* 청년, 가족 단위, 은퇴 세대 등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농어촌 체류 기반 조성

- 빈집·한옥·유휴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분산형 농어촌 체류 시설 확충

*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 활용·리모델링 등 빈집재생 지원 및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을 통한 빈집 거래 활성화 등

- 공유형 농어촌 주택 모델 개발을 통해, 장기 체류형 임대로 도시민의 주말·계절형 거주 확충

- 지역 식당, 카페, 체험시설 등과 연계 운영을 도모하고 공유형 농어촌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교통·의료·디지털 접근성 개선과 생활 SOC 확충

-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확대) 4도3촌 라이프 확산 및 농촌지역의 생활인구·관계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영농체험(텃밭) 외 체류·여가·체험·관광 등 패키지로 지원하는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확대

* 시·군은 임대신청을 통해 체류자를 모집, 기존 운영 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 인프라(체험·관광·경관·지역축제 등) 및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 권장

❍ 체류형 관광과 로컬 상권의 연계 강화

- 33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농촌투어패스의 활용 지역을 확대하고, 숙박·음식 체험·교통이 연계된 주중·주말·야간·계절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류기간 연장형 코스 개발 지원

-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농어촌 미식관광, 지역상점 스탬프 투어 등 로컬상권 연계 체류형 관광 확대

- 지역 통합 예약·결제 플랫폼 운영으로 체류 방문객의 편의를 증대하고, 모바일 기반 소비 데이터 관리를 통해 지역별 체류형 관광의 지속적 개선 도모

  * 지역 통합 예약·결제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 체류형 지역화폐 이용체계 확립

❍ **체류형 창업 및 로컬비즈니스 육성**

- 청년층·도시인의 창업 인큐베이팅 및 멘토링 지원을 통한 농어촌 살아보기 연계형 창업 프로그램 추진

  * 빈집·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숙박·카페·체험·관광 분야 창업 지원과 로컬 창업 펀드 및 금융 지원 확대

- 체류형 창업과 연계한 지역 순환형 융복합 비즈니스 활성화

  * 생활인구·관계인구와 지역주민 간 협업·참여형 사회적경제 모델 구축

□ 기대효과

❍ 농촌관광의 체질 개선과 관광 패러다임 변화 대응 기반 구축

❍ 농촌의 지역단위 농촌관광 경영 역량 강화

❍ 인트라 바운드 관광 중심의 농촌관광을 인바운드 관광까지 확대

❍ 체류형 농어촌 지역경제 기반 구축으로 지역상권 및 서비스업 활성화

❍ 외부 전문인력과 청년층 네트워크 유입으로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및 공동체 회복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54.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 국정과제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 국정과제 107.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2.3.2. 지역연계·관계활동 촉진

□ 배경 및 필요성

❍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는 정주인구만으로 농어촌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생활인구·관계인구 등 체류인구의 역할이 중요

❍ 인적자본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도시의 청년층, 전문직 은퇴자 등 다양한 외부 인력이 농어촌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활동 확대 필요

❍ 생활인구·관계인구의 활동이 일회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역 참여와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과 외부인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가) 도농교류를 통한 관계인구 확대와 지역참여형 프로그램 활성화

❍ 생활인구·관계인구 기반 도농교류 프로그램 확대

- 일회성 방문이나 단순 체험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활동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도농교류 확대

  * 특정 농어촌 지역의 마을 행사, 지역축제, 공동체 활동과 연계한 도시민의 체류·참여형 도농교류 활성화

- 참여자 특성별 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의 지역활동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청년: 프로젝트·창업형 교류 / 가족: 체류형 관광 / 중장년 및 은퇴 세대: 농촌에서의 인생 2막 준비 / 외국인: K-농촌문화 체험

❍ 반복·지속적인 생활·관계인구의 도농교류 프로그램 운영

- 시즌형·정기형 프로그램: 계절별 농촌활동 프로그램, 정기 방문형 체험 프

로그램, 연중 운영 가능한 관계활동 등

- 관계 심화 단계별 프로그램: 관광·체험 → 체류 → 참여 → 프로젝트 참여 → 창업·정주 유도

* 생활·관계인구 커뮤니티 운영: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지역별 네트워크 운영, 도농교류 커뮤니티 활성화 등

❍ 청년·전문가·기업 참여형 지역 프로젝트 운영

- 빈집활용, 지역 브랜딩, 로컬 콘텐츠 개발, 농어촌관광 프로그램 기획 등 지역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지원
- 청년마을만들기, 로컬크리에이터 등과 연계하여 프로젝트 기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청년 로컬프로젝트 지원
- 건축·디자인·문화·관광 전문가(생활인구·관계인구)가 참여하는 지역 컨설팅 및 (주민-전문가) 공동 프로젝트 운영
- 기업의 사회공헌 및 ESG 연계 활동을 통해 농어촌 지역사회 문제 해결

*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지원) 청년·은퇴자 등 도시민의 재능과 전문성을 농촌에 발휘토록 봉사 주체를 다양화하고, 농업유산·지역축제와 연계한 봉사를 확대

나) 관계인구 유입·관리 플랫폼 구축

❍ 지역과 외부인을 연결하는 관계인구 통합 플랫폼 구축

- 프로그램 정보 제공, 신청·예약·관리 시스템 운영, 관계인구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관계활동 통합 플랫폼 구축
- 생활인구·관계인구의 지역문제 해결형 체류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코디네이터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

* 생활·관계인구 운영 인력 양성, 마을 단위 교류 매니저 운영, 중간지원조직 기능 강화

- 지자체, 주민단체,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함께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 농촌일손여행, 프로젝트 기획·참여, 로컬 비즈니스 창업 등과 관련한 지역단위 교류 네트워크

❍ **거버넌스 및 데이터 기반 생활인구·관계인구 정책체계 구축**

- 지자체, 주민 조직,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 조직, 초·중·고, 대학, 기업,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농어촌 시·군 단위의 농어촌 관계활동 협의체 구성

  * 단발성 교류가 아닌, (수)년 단위 협약에 근거하여 워케이션, 일손여행, 사회공헌 및 ESG 등을 반복적·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세제·금융 등의 지원 제공

- 지역별 회원제 기반으로 정기방문 및 반복 방문을 촉진하는 관리체계 구축

  * 방문 이력 기반 관리체계 구축 지원 통해 반복·지속 방문 촉진

□ 기대효과

❍ 도농교류 기반의 고도화와 체류인구 확대 통한 농어촌 활성화

❍ 농어촌 지역사회에 필요한 외부 전문인력·청년 네트워크와 참여형 활동 네트워크 구축

❍ 농어촌 지역과 생활인구·관계인구의 협력체계 구축

❍ 생활인구·관계인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54.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 국정과제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2.4. 귀농어·귀촌인 및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

2.4.1. 귀농어·귀촌인 유입 및 정착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심화와 청년세대 감소로 현재의 농어촌 인구만으로는 지역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지역의 인적자본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

○ 귀농어·귀촌을 촉진하고 원활한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부터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경제활동, 주거·공간 등에 대한 다차원적 지원체계가 필요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 **귀농어·귀촌인의 정보, 경제활동, 주거 지원 등 정착 지원체계 마련**

- (통합정보 제공)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를 통해 여러 기관의 관련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문화·복지 정보를 연계 제공
- (영농 밀착 컨설팅) 농촌지역 농협(127개소) 내 '영농 네비게이터'를 양성·운영(연 50명 규모)하여 정착 초기 귀농인에게 판로·경영·비품구입 등 영농 전반에 대한 개별 맞춤 컨설팅 제공(1:1 컨설팅)
- (초기 귀농인 농외근로 제한 완화) 정착 초기 귀농인의 농지·주거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귀농창업자금(융자) 이용자의 농외근로 제한을 완화하여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정착 촉진

  * 월 60시간 미만, 농한기 4개월, 연간 종합소득액 3,700만 원 미만으로 농외근로를 제한하는 현행 방식에서, 농외근로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단,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및 영농활동 실적 증빙) 개선

- (청년 귀어인 지원) 청년 귀어인 정착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주택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 귀어귀촌종합센터와 지자체 간 연계하여 단계별 맞춤 지원을 마련하고, 청년의 희망 업종에 대한 현장중심 교육, 1:1 컨설팅 등을 추진

  * 대상 업종 확대: ('24) 어업·양식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 ('25~) 해양레저관광업 추가

- (청년 귀농어·귀촌인 경제활동 지원) 농어촌 지역에 진입하는 청년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해 창농을 포함한 농촌 비즈니스(Agribiz+) 분야의 창업·취업 지원 강화

  * 창업 자금 지원, 정보·교육·훈련 지원, 농지 임대 규제 완화, 농촌기업의 청년 취업을 위한 임금 지원, 빈집·유휴공간을 활용한 안정적 임대 및 리모델링 지원 등 분야별 지원 강화

- 지역 내 빈집,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귀농어·귀촌인이 지역에서 본격 활동 및 정착하기 이전 단계에서 중·단기 체류 주거공간, 창업·업무공간(공유오피스 등)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제공

❍ 귀농어·귀촌 촉진을 위한 컨설팅·교육 지원체계 확충

- (전문 상담 제공) 귀농어·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에게 상담센터 운영, 챗봇 상담 DB 업데이트, 상담 매뉴얼 배포 등 원스톱 전문 상담을 제공하여 탐색활동을 위한 정보·상담 접근성을 강화

- (준비 커뮤니티 지원) 지역·품목 등 유사한 관심을 가진 도시민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준비·탐색-실행-정착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준비 커뮤니티' 지원을 확대

- 귀농어·귀촌 예비자들이 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학습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 조성·확대

- (도시 거점 컨설팅·교육) 도시민이 거주지에서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 농협 등을 활용한 전문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

* 자산관리 전문인력(연 40명 규모 양성)을 통해 도시 자산 정리, 농지·주거 구득 등과 관련한 전문적 컨설팅 제공

- (청년농업학교 과정 신설) 청년농의 농업 진입과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준별 맞춤형 이론 교육과 현장 중심의 장기 실습 교육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선배 청년농의 멘토링을 통한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

* 영농정착지원금, 후계농육성자금, 공공임대농지우선 공급 등을 연계한 인큐베이팅 체계 구축

- (귀어학교 설립·운영) 귀어인의 원활한 귀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귀어학교 설립·운영

❍ 청년어업인 생산·생활·공동체 진입 시점과 조건의 연계

- (진입경로별 지원 연계) 생산수단과 허가·권리·자격별 진입 경로를 구분하여 기존 임대·창업·교육·주거 지원의 연계체계를 보완하고, 청년별 진입 장애와 제도 적용 가능성을 확인

*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추진 중이며, 양식장 임대사업은 2024년 도입 이후 임차료 지원과 함께 2025년부터 주거 및 기자재·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확대

- (지원시점 조정) 유휴·승계예정 자산과 공동이용 장비는 소유·이용 권한 및 해당 제도의 요건을 확인한 범위에서 활용하고, 지원 선정·입주·교육·조업 개시 일정의 조정을 지원

- (주거·공동체 진입 연계) 어장·양식장·항포구 접근과 생활서비스 이용을 고려하여 주거 지원을 연결하고, 청년과 어촌계·마을·지자체 간 협약으로 적법한 진입조건과 공동체 내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

*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6~2030)'은 청년바다마을,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지원 및 어촌계 가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청년 진입 지원방향으로 제시

- (사후정착 지원) 청년 진입을 수용하는 공동체의 행정·공동장비·시설 지원은 근거와 조건을 검토하여 연계하고, 임대 종료·승계 이후의 생산수단 확보와 소득·주거 유지 가능성을 점검하는 사후지원 연계를 보완

- (권리·자격 구분) 어업권·양식업권·어업허가·어선과 어촌계 자격을 하나의 임대·승계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협약은 개별 법령의 허가·권리 이전 절차를 대신하지 않음

  * 「수산업법」 제32조는 어업권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어, 어선 등 생산수단의 임대지원과 어업권의 이용·및 이전은 각각의 법적 요건을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

□ 기대효과

○ 귀농어·귀촌 예비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밀착형 컨설팅 제공으로 귀농어·귀촌을 촉진하고 실행 이후 초기 이탈을 방지하며, 지역사회 적응·융합을 통한 안정적 정주·정착 지원

○ 청년·창조계층 중심의 귀농어·귀촌 수요에 부응하는 창업·비즈니스 지원 강화로 농어촌 혁신 인재 유입을 확대하고, 이들의 지역 내 경제·사회·문화 활동을 농어촌 활력 제고로 연계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2.4.2. 외국인·이주민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인력 부족 구조가 심화되고 농어업 분야 생산인력으로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들의 생활·체류 기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체계는 미흡한 상황

○ 외국인, 이주배경가족[15]의 유입 확대로 농어촌 지역의 주민 구성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이민여성 등 이주배경가족의 지역사회 통합,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지원 등 이주배경가족의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정책적 대응 강화가 필요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 지역사회와 연계한 이주배경가족 지원 강화

- (이주배경가족 통합 서비스 지원) 가족·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자녀 양육·교육, 가족생활지원(한국어교육·법률·의료 등), 지역사회 연계(일자리·지역주민 교류) 등 맞춤형 종합 가족서비스 제공

  * '26년 4개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7년 20개소, '28년 50개소, '29년 100개소로 확대 추진 계획 (성평등가족부)

- 가족에 대한 상담·통번역·정보 제공, 취업교육·일자리 연계, 사회관계망 형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양육·교육(언어교육, 기초학력 향상, 진로설계 지원 강화)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농어촌 이주배경학생[16]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학생을 연결하여 제공하는 멘토링 사업을 확대

  * 멘토링 사업을 '25년 1,000명 수준에서 '29년 1,400명 규모로 확대

-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상대적 사회적 취약계층인 이주배경가족(결혼이민여성),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지원 등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방안 마련

❍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적응 및 생활 지원체계 강화

- (유휴시설 활용 숙소 확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공·폐건물, 유휴시설(농협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숙소 건립을 지속

15) 이주배경가족은 본인이나 부모가 외국 출신이거나 한국으로 이주해 온 경험이 있는 가족을 뜻하며, 국제결혼가정(다문화가정), 외국인가정, 중도입국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등이 있음.

16) 이주배경학생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학생을 의미함.

적으로 확대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과 연계한 마을 빈집 정비, 농공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운영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기반 공간을 공급하고, 체류형 쉼터를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숙박시설 운영 등 지원

- '2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을 빠르게 확산할 필요

  *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사업 현황: ('22~'23) 10개소(준공 완료), ('24~'26) 10개소, ('25~'27) 10개소, ('26~'28) 5개소 등 총 35개소 추진 중

- (숙소 임대 정보 플랫폼) 인력중개 관련 플랫폼 등을 통해 지역 내 민박 등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숙소 임대를 연결하는 정보 접근성 제고

- (통합 서비스 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이주배경가족 지원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적응 및 생활 지원을 위한 통합 서비스 지원

- 가족·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상담·통번역, 심리정서 및 긴급위기 지원, 한국어교육, 취업교육, 자조모임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

  * 통합 서비스: 사례관리(대상자 욕구·역량 기반 정보 제공,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한 사례관리), 사회적응 지원(상담, 취업교육,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긴급위기 지원(심리정서 상담·치료, 긴급돌봄 등), 지역특화 서비스(무료법률 지원, 문화이해활동 지원 등)

[어업·어촌]

- (현장 접근성 강화) 항포구, 사업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국어 안내·통역과 육상숙소·생활시설, 의료·행정서비스의 이용 경로를 연결하여 현장 접근성을 강화

- (독립적 고충처리) 고용주를 거치지 않는 상담 접점을 기존 지원기관과 연계하고, 고충 접수·전문기관 이관·처리 결과 확인의 후속관리 절차를 보완하여 의사소통·지역갈등 문제의 조기 대응을 지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원법 위반 신고제도를 통해 체불임금, 재해보상, 근로계약 등 선원근로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와 시정 절차를 운영

- (공동 생활기반 보완) 공동숙소와 통역·생활 안내 등 지역 공동기반은 실제 수요와 운영주체를 확인하여 보완하고, 고용주의 임금·숙소·안전 등 법적 의무와 공공지원의 역할을 구분

  * 법무부는 2026년 하반기 계절근로 프로그램 개선방안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소음, 악취, 진동이 심한 장소 및 침수, 산사태 등 재해위험지역의 숙소 제공 제한을 발표

- (관계기관 역할 구분)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지자체 및 관련 지원기관의 소관에 따른 협업 추진, 모집·알선·분쟁 처리 권한과 생활지원 기능을 구분

□ 기대효과

❍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정적 주거·체류 기반 마련을 통해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생산 분야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이주배경가족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 강화를 통해 이주민이 농어촌 공동체의 실질적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농어촌 인구 다양성을 지역 활력의 자원으로 전환

❍ 외국인·이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을 통해 소멸위기 농어촌 지역의 인구를 유지하고 지역 공동체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기여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88.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 국정과제 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3. 쾌적하고 조화로운 정주 환경 조성

□ '전략 3. 쾌적하고 조화로운 정주 환경 조성'은 농어촌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기후위기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주거와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빈집·폐교 등 유휴시설을 지역 수요에 맞게 활용하며, 정부의 지역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추어 농어촌 공간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이와 함께 주민이 농어촌 공간의 재생과 관리에 참여하고 지역활동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전한 생활환경과 생태 보전 기반을 조성하고 재난·재해와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의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농어업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을 통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정주 기반 개선과 농어촌 공간의 체계적 관리,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 안전한 환경 조성과 생태 보전,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핵심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제안함.

3.1.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개선

3.1.1. 주거환경 및 빈집 정비

□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 지역은 높은 노후주택 비율, 빈집 증가, 난개발 시설 분포 등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

- 농어촌 빈집 수는 '20년 5만 6천 동에서 '24년 7만 8천 동으로 증가하여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범죄 발생 소지 및 마을 경관 훼손 등 주거환경 심각 저해
- 주택의 노후화와 슬레이트 등 유해 환경 노출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고령화에 대응한 주거복지 통합형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 농어촌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

-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시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빈집 관리에 대한 역할을 재정립하고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빈집 관리 시스템 구축
- (지역 맞춤형 빈집 정비 촉진)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내 매매 가능 빈집 파악 및 소유자 동의, 빈집 정보 플랫폼 등록 등 지속 지원으로 빈집거래 활성화 및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빈집이 증가하거나 비율이 높은 곳을 구역단위로 재생하여 빈집 정비의 규모화·집중화 도모

* (농어촌빈집정비지원사업) 농촌 빈집 철거 지원으로 위해요소 제거 및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도모

- 빈집 밀집도와 향후 발생 가능성 등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행·재정적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특정 빈집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간소화

  *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 우선 철거가 이루어지도록 유도(철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및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제공

-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 방치된 빈집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공공 활용 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세금 부담 완화

  * 재산세 부담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신고서 검토 제외

- (빈집은행 활성화) 시·군 지자체 단위로 빈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빈집은행을 운영하고, 민간 부동산 중개 플랫폼과 연계하여 빈집 매매 및 임대 거래 활성화 추진

  * 빈집의 위치, 상태, 소유자 정보 등을 포함한 현황 조사 및 빈집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 (빈집 활용 프로젝트) 소유자가 매각할 의사가 있는 빈집을 민간 및 공공에서 매입한 후 모듈러 주택을 신축하거나, 귀농·귀촌인 및 도시민에게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추진

  * 빈집을 순수 주거용뿐만 아니라 워케이션, 청년 창업, 문화 및 체험 공간 등 생활·창업·문화 공간으로 전면 개조하는 민간 주도 프로젝트를 지원

  * 농어촌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을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 신설

- 도서·어촌 빈집은 공유·상속 등 권리관계, 접근 여건과 활용 수요가 정비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철거·운반·폐기물 반출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정비방식을 구분

❍ **취약지역 주민의 노후 및 슬레이트 주택 정비 지원 확대**

-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강화)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집수리 봉사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지속 지원

- (농어촌 취약지역개조사업 확대)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주민 불편이 큰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취약지역개조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위생 등 긴급한 생활인프라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최소 30가구 이상, 30년 이상 노후 또는 슬레이트 지붕 주택 40% 이상(행정리 기준)

  * 추후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소규모 마을까지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하수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소방도로 확보 등 안전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정비 추진 필요

- (석면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처리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2033년까지 농어촌 지역의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 지원 가구에 대해서는 철거 및 지붕 개량 비용의 실질적 자부담 해소로 주거약자 맞춤형 지원 강화

- (맞춤형 주택 개조 지원)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기존에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맞춤형 주택 개조 및 수리비 지원*을 강화

  *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며,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욕실 미끄럼 방지 바닥재, 동작 감시 센서등과 같은 거주자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

- (주거관리 서비스와 연계와 생활지원 강화) 고령자와 1인 가구가 집중된 농어촌 마을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 관련 서비스와 노인 생활지원을 연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도입

  * 간단한 집수리(전기, 수도, 보일러 수리 등) 및 생활 고충 해결을 돕는 주민 밀착형 마을관리소 설치 및 활동가(농촌 마을 홍반장)를 양성

□ 기대효과

○ 스마트한 농어촌 빈집 관리를 통해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민 누구나 머물고 싶은 쾌적한 공간으로 재창조

○ 농어촌 빈집을 도시민 체류형 공간으로 재생하여 지역의 생활인구를 증가시키고 정주인구로 전환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

○ 취약지역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여 도농 간 삶의 질 격차 해소 및 농어촌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 보장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 국정과제 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3.1.2. 생활 인프라 및 다양한 주거 기반 확충

□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정주 인구의 유출을 막고, 청년 및 귀농·귀촌인의 신규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양질의 생활 인프라 확충이 필요

- 청년층 유입을 위해 일자리와 문화, 보육 등이 결합된 쾌적한 주거환경이 필요하며 은퇴자, 외국인 노동자, 단기 체류자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공간의 확충이 필요

○ 농어촌 지역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하여 에너지 가격 상승에 매우 취약하며 농어촌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도시보다 더욱 가중되는 구조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 청년 유입을 고려한 신규 주거 기반 조성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확대) 주거 안정, 육아 부담 완화, 문화·여가 등 청년층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귀농·귀촌 청년의 유입 및 정착을 지원

- 청년층의 농어촌 지역 유입을 위해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 공동보육시설과 문화·여가 복합 커뮤니티시설 확충

  * 만 40세 미만의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 또는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이면서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우선 임대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확충) 전남형 만원주택 등 농어촌 지역 특성을 살린 임대주택 사업을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고 일자리 연계, 청년 활동 지원, 공동체 운영 프로그램과 결합한 플랫폼 정책으로 확대 추진

- (청년 바다마을 조성) 청년층의 어촌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 수산업 일자리, 어촌계 가입 등을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는 청년 바다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 (지역활력타운 연계 조성) 주거, 생활 인프라, 공공서비스가 결합된 지역활력타운을 다부처 협업으로 조성하여 은퇴자·청년층 등의 원활한 정착 지원

❍ 고령자 특화형 신규 주거 기반 조성

-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 건설임대 위주였던 방식을 다변화하여, 리모델링과 매입임대 방식 등 연간 총 3,000호 수준으로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 돌봄 필요도가 높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의료 및 요양 서비스가 패키지화된 맞춤형 임대주택*을 제공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주택에 건강관리, 생활지원, 재가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건립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공급

- (생활 안전 스마트서비스 고도화) 고령자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복지시설 내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입주시키고, 세대 내에는 비상벨 및 동작센서 등 스마트 응급안심서비스를 도입하여 고령자의 생활 안전 확보

❍ **LPG 배관망 방식의 난방 인프라 확충**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 제약이 큰 농어촌 여건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상 가구가 거주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지속 추진

- (LPG 배관망 보급사업 확대) 150세대~1,000세대 미만의 중규모 읍·면 단위로 배관망 보급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50세대 이상 도서 지역에 대해서도 LPG 배관망 보급을 우선 지원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70여 개 읍·면 단위(약 5만 세대)까지 확대 구축

- (농어촌 주택 성능 및 난방 환경 개선) 농어촌 주택의 에너지 효율 제고* 및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등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사용 확대를 위해 관련 인센티브 및 보일러 시스템 설치 지원

  * 패시브하우스, 액티브하우스 등 에너지 절감형 주거 모델을 개발 및 보급하고,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에너지 효율 기준 준수를 유도

□ 기대효과

❍ 농어촌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청년층의 장기적 지역 안착을 유도하여 농어촌 활력 제고 및 지속 가능성 확보

❍ 맞춤형 주거서비스와 생활지원을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 지역 특성에 맞는 LPG 공급망 구축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안전사고 발생률 저감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15.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발전 기반 확립

❍ 국정과제 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 국정과제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3.2. 농어촌 공간 재생과 재구조화

3.2.1. 농어촌 공간 재구조화 및 거점 기능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공간 구조적 쇠퇴 및 점(點) 단위 분산 투자의 한계

- 개별 시설 확충 중심의 분산적 투자는 주변 공간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실질적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

  * 선(線)·면(面) 단위의 계획적 접근을 통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는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

❍ 5극3특 중심의 국가 공간전략 전환에 대응한 농촌 생활권 기반 마련 필요

- 초광역 메가시티(5극)와 특별자치도(3특) 중심의 공간전략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광역권 형성이 중소도시로의 인구·자원 집중을 촉발하여 오히려 인근 농촌의 소멸을 앞당길 위험(빨대효과)이 제기

- 국내 정책 담론이 도시 간 연계와 광역경제권에 집중되어 도농 연계 논의가 미진한 결과, 농촌정책이 광역 인프라의 파급효과를 기다리는 수동적 위치에 고착

- 이에 광역 전략에 편입되는 방식이 아니라, 농촌 스스로 생활권 체계를 세우고 이를 광역 체계에 접속시키는 방향으로 공간관리 체계를 전환할 필요

* 관계부처·민간이 참여하는 '농촌계획협약' 개편이 추진되어 지원 범위가 시·군에서 광역·초광역 생활권 단위까지 확대 추진(추진방안 마련 2026년, 시범 추진 2027~2028년).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 각 지자체별 농촌공간 계획 수립 지원 및 원활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추진으로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

- (농촌공간정비) 실질적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지자체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농촌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물 정비·이전 지원

- (농촌지역개발종합지원) 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성 검토, 모니터링, 컨설팅 및 평가, 역량강화 등을 지속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역개발 정책 추진

○ 특화지구·재생거점 기반 농촌공간 재구조화 고도화(농촌공간계획 2.0)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본계획 수립 후 「농촌특화지구계획」만으로 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해진 여건을 활용, 특화지구 8종의 현장 안착과 입지 특례·계획 패스트트랙을 추진

* 특화지구 내에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신고로 완화하는 등 규제 특례와 부처 연계 사업(예: 축산지구 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을 집중 지원하여 재구조화의 실행력을 제고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2024. 3. 29. 시행(2023. 3. 28. 제정), 시행령 개정으로 특화지구 8종 확대(2025. 11. 4. 시행, 특성화농업지구 신설), 현행 법률 2026. 1. 2. 시행.

❍ **농촌 생활권 기반 광역 연계 공간관리 체계 구축**

- (생활권 단위 계획·협약) 시·군 경계를 넘는 농촌 생활권을 설정하고, 농촌계획협약 개편에 맞추어 광역·초광역 생활권 단위의 계획 수립과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지방시대위원회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특화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계획-사업-예산의 접합 구조를 확보

- (계층적 연계망 설정) 광역 거점도시–중소도시–농촌 생활거점–배후마을을 잇는 계층적 공간 연계망을 설정하고 각 층위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

- (광역 결절점 연계) 광역 철도·도로망 확충 시 농촌 생활권의 접근 수요를 계획 단계에서 반영하고, 철도역·터미널·고속도로 휴게소 등 기존 광역 결절점을 농촌 접근 노드로 활용하여 공간적 단절을 해소

  * 광역 수요응답형 교통(DRT)·환승 연계 체계와 결합하여 생활권 간 이동을 보장하되, 결절점 연계가 인구·자원 유출 통로로 작동하지 않도록 관계인구·워케이션 등 역방향 유입 유인과 결합하고 유출 심화 여부를 상생 장치로 모니터링(단순 접속이 아닌 쌍방향 연계)

- (상생 장치 마련) 광역권 발전전략 수립 시 대도시–농촌 간 이익·재정 공유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거버넌스 의사결정에 농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 농어업인삶의질법의 사전협의·농어촌 영향평가 등 기존 제도에 근거하여 광역권 계획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선언적 협조가 아닌 법적 근거 확보),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이행 담보 기제로 활용하며,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결과를 광역권 단위로 확인하여 인구·자원 유출 심화 여부를 지속 관리

❍ **농촌공간계획 기반 생활서비스·환경기능 입지 조정 및 집약 배치**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지속 추진) 농촌에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 보완을 위해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지원을 통해 농촌형 복합서비스 거점 시설을 지속 확충하되, 지역 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복합서비스 거점 시설을 복합화·집적화하는 방향으로 조성

- 특히, 생활거점(읍·면 소재지)–재생거점–배후마을의 3층 생활권 체계를 기준으로 생활서비스·환경기능의 입지를 조정·집약

* 배후마을은 이원적 전달로 서비스 결핍을 방지 — 돌봄·안부확인 등 최소 필수 서비스는 방문형(찾아가는 서비스)으로 상시 도달하고, 고차 서비스는 DRT로 거점에 연계

* 이로써 소득지원을 통한 정주 유지와 공간 집약을 통한 서비스 효율화가 배후마을 연결을 매개로 양립

[도서·어촌]

❍ **생활·생산 동선을 반영한 정주거점 및 접근 여건 보완**

- (생활·생산 동선 반영) 주거지, 항포구·선착장, 어장·양식장과 돌봄·물류·생활서비스 거점 간 실제 이용 동선을 바탕으로 정주 거점과 접근 여건을 보완하고, 지역별 육·해상 교통 및 재난·대피 조건을 함께 고려

  * 신안 만재도항은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접안시설을 연장하고 계류시설을 설치하여 여객선 직접 접안이 가능해졌으며, 목포항에서 만재도항까지 이동시간이 약 6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단축된 사례

- (기존 거점 우선점검) 기존 거점의 이용 현황과 배후마을 접근 여건을 우선 확인하여 주민 수요에 맞는 기능 보완과 연결 동선의 정비 순서를 설정

- (거점 기능·연계교통 조정) 거점의 위치·기능 조정에 따른 생업공간 접근과 서비스 이용의 변화를 검토하고, 주민의 이동 부담이 커지는 경우 연계교통과 제공방식의 보완을 병행

- (유지관리 기반 확보) 정비 및 거점 운영에 필요한 인력, 유지보수비와 관리책임을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대상과 절차에 맞춰 추진

  * 2027년도 어촌뉴딜 3.0사업 공모 설명회에서 '어촌회복형'을 낙후 어촌의 생활·안전 기반 개선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제시

□ 기대효과

❍ 광역 전환기 농촌의 독자적 정주 기반 확보

- 농촌 스스로 생활권을 세워 광역 체계에 접속함으로써 빨대효과 리스크를 사전 점검·관리

○ 계획-사업-예산 접합을 통한 실행력 제고

- 생활권 단위 계획과 지역발전투자협약·포괄보조를 연계하여 실질적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

○ 생활·생산 동선에 맞는 정비로 어업활동 유지와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 국정과제 49.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 국정과제 54.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 국정과제 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 국정과제 71.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3.2.2. 소멸 위기에 대응한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 기반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농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로 공동체 활동이 약화되지만, 활동성에 제약이 큰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돌봄, 일상적 모임 등 마을 공동체 역할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경로당 등에서 주민들의 공동 식사나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활동 등이 수행되는 마을들이 증가하는 상황

❍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공간으로서 마을의 역할이 요구되지만, 기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시설들이 노후한 곳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

- 반면 중앙정부의 마을 단위 사업이 지방에 이양된 이후 다수 지자체에서 농촌 마을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관심이 저하되었음.

❍ 주민자치회 확대 및 제도 기반 마련 등 최근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농촌 공동체 활동 육성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귀농·귀촌 유입 및 생활인구증가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다변화되는 여건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농촌 공동체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
-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을 위한 제도(농촌공간계획, 농촌특화지구 등)가 안착하는 과정에서도 공동체 주체들의 논의 및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함.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 공동체 활동을 위한 플랫폼 공간 조성

- 주민들의 일상적인 모임, 교류, 공동체 활동의 기반이 되는 마을 단위 공동시설을 개선하고 확충

  * 농촌협약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 재원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

- 읍·면 소재지 거점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배후마을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공동시설을 개선하며, 특히 미래형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문화·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지원

  * 대전 유성구 스마트경로당 사례 참고: ICT 시스템을 활용, 유성구 관내 170개 경로당('24년 기준)에서 회의, 교육, 여가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운영하며, 이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 운영하며 행정 조직 등 지원 체계를 구축

- 읍·면 소재지 이외에 주변 마을에 대해 거점 기능을 갖는 중심마을을 '작은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동체 활동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유휴공간 등 기존 시설 활용을 유도

- 기존 공공시설이나 유휴공간 등을 개선하여 공동체 활동 공간 활용도를 높이며, 주민 조직이나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이 해당 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유휴시설 활용 활성화) 농어촌 지역의 유휴시설을 주민의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하여 농촌 일자리 창출 및 소득 확대, 농촌 주민의 사회서비스 수혜 확대 등 농촌활성화를 도모

❍ 공간 재생을 위한 현장포럼 확산 및 주민 실천 활동 지원

- 주민들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포럼 확산을 유도

  * 현장포럼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과제 발굴, 마을규약 제정, 공동공간 활용 등의 논의 유도

- 지자체 및 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을 통해 현장포럼이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농촌특화지구 지정·운영, 주민협정 체결 등의 논의로 발전해가도록 지원

- 현장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마을환경·경관 개선 활동, 빈집 주변·유휴부지 정리, 공동공간 정비 등을 포함한 주민 주도로 진행되는 소규모 실천활동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수단 확대

❍ 현장 지원 주체 육성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 관련 부처 사업을 활용하여 주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현장 활동가를 발굴·육성

  * 현장에 밀착해서 활동하는 주체를 발굴·지원하는 목적으로 추진해온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등의 사업 방식을 활용

  * 하동군은 마을협력가를 관내 마을에 파견해 마을자원 조사, 비전 수립,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주민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8개 면 16개 마을에 협력가를 파견

- 주민자치회 등 읍·면 주민의 의사형성기구 활동을 바탕으로 읍·면 내 마을 간 공동 의제 발굴과 개별 마을 단위 공동체 활동의 제약을 보완을 지원하

는 한편, 읍·면 주민 전체의 생활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대상으로 공동 의제를 형성하고 다루도록 지원

* 주민자치회, 이장단협의회, 읍·면 행정 조직,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읍·면 단위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주체들의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후속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읍·면 단위 상향식 계획 수립 과정을 유도하고 지원

* 농촌공간계획, 농촌특화지구 관리 등과 연계

- (도서·어촌) 어촌계·마을법인·협동조합 등이 어촌 공동·공공자산의 운영주체가 되는 경우. 회계·정산·행정·노무·위생·민원 대응에 필요한 실무지원체계를 보완하고, 담당인력과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운영역량을 강화

□ 기대효과

❍ 공동체 활동 공간 확충과 주민들의 실천 활동 지원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마을의 공동체 기능 회복

❍ 현장포럼, 소규모 주민 활동 등을 유도함으로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실행력 제고

❍ 현장 지원 주체 육성 및 읍·면 단위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공동체 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새로운 공동체 육성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5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 국정과제 54.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 국정과제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조성

3.3.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생태 보전

3.3.1. 생활안전 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 빈집·폐공장 등 방치 시설이 증가하면서 범죄·안전사고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치안 인프라와 긴급대응 역량이 부족하여 생활안전 사각지대가 형성

- 가로등, CCTV 등 안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관할 지구대·파출소까지 거리가 멀어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에 한계

❍ 고령층 중심의 소규모 급식시설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위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식품 위생 관리와 예방 중심의 식품 안전 대응체계가 미흡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지속**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한 CCTV 설치,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보수, 산사태 등 재해 예방 등 지원 지속 추진

❍ **주민참여와 연계한 농어촌 생활안전 예방체계 강화**

- (취약계층 안전) 농어촌 고령자·여성 1인 가구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안심기기 보급,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확대 등 추진
- (치안 활동 및 범죄 예방) 이장·마을리더 중심의 자율방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관할 지구대·파출소와 연계한 주민 접촉·문제 해결적 순찰 활동으로 예방 중심 치안 활동 전개*

* 112 신고 데이터(신고 다발지역, 주요 범죄 동향 등) 기반으로 범죄 취약 요소를 공유하여 지역별 맞춤 범죄예방대책 수립

- (온열질환 예방) '26년도에 도입한 농어촌 온열질환 예방요원의 참여자를 선도농업인에서 다양한 지역 주체를 포함하도록 확대

* 일본은 농업협동조합, 농업 관련 단체, 농자재·농기계 판매점, 농업고등학교·농업대학, 농업기술 보급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현장 안부 확인 및 예방 수칙 안내 등을 실시

- (생활안전 거버넌스) 범죄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주민점검신청제 및 AI 안전신문고를 적극 활용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연계한 노후시설 보수, 방범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참여 거버넌스 강화. 지역별 안전 데이터 관리를 통해 재난·화재·폭염·감염병 등 위험정보 사전 예측 및 알림서비스를 강화

❍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 (위생 관리) 경로당·마을급식소 및 이동급식시설 등 소규모 급식시설 대상 위생점검 및 식재료 보관·조리환경 개선을 강화하고, 조리 종사자에 대한 식품안전 교육 확대

- (식품 안전 관리) 기상정보, 식재료 유통·이력정보, 과거 식중독 발생 패턴 등을 연계한 AI 위험 알림서비스를 구축하고, IoT 기반 냉장·냉동 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예방 중심 식품안전 대응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주민참여 기반 예방 중심 치안활동 강화, 생활안전 거버넌스 구축, 식품 안전관리 등을 통한 일상적 생활안전 여건 개선

□ 관련 국정과제

❍ 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 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 안전관리체계 확립

❍ 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3.3.2. 재난·재해 대응 강화[17)]

□ 배경 및 필요성

❍ 농촌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노후 농업기반시설(저수지, 제방, 배수시설 등)과 어촌의 어선 및 양식장은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예방 인프라 확충이 중요

- 농어촌 지역은 재난 경보·대피소 접근성·마을 단위 대피 역량이 도시에 비해 낮으며, 노후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재난예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안전기준 개선이 요구
- 재해 발생 후에도 피해 농어업인의 경영 회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산간·도서 지역은 구조·복구 인력의 접근 자체가 지연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 **재난·재해 대응 역량 및 예방 인프라 확충**

-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노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최신 기준과 기술을 반영한 시설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재난 예방 기반을 강화
- (호우·산사태) 극한호우 대응을 위해 홍수배제능력이 미흡하거나 노후화된 수리시설, 산사태 취약지역 등의 시설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집중호우

17) 신지영 선임연구위원(한국환경연구원) 자문내용을 부분 참고함.

예방시설(사방댐 등) 설치

- (산불) 산림과 인접한 국가유산·전통사찰·주택 등 대상 숲가꾸기*를 통한 산불 확산 차단

  * 연료물질 제거, 내화수림대 조성 등

- (홍수·가뭄) AI 기반 홍수예보 확대 및 수해 감시체계와 연계한 홍수·침수 위험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저수지·양수장 등 용수공급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 기반을 확보

- (태풍·해일) 어선의 안전한 피항을 위해 노후화된 방파제 개보수 등 전국 국가 어항 보강 추진. 양식시설 구조 기준을 강화하여 유실·파손 최소화

- (폭염) 고령자, 농어업 종사자, 외국인 등 농어촌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폭염 위험 예·경보 및 안부 확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무더위쉼터·그늘쉼터 확대 및 이동형 도입 등 접근성 제고 등 생활밀착형 폭염 대응시설을 확충하여 온열질환 예방 기능 강화

  * 드론과 차량을 활용한 논밭 예찰 및 작업 중지 권고 강화, 폭염 위험에 따른 농작업 행동 기준 구체화, 다국어 정보 제공 등

❍ 재난·재해 피해 최소화 도모

- (대피체계) 하천변 저지대·산사태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발굴하여 통제·대피계획 수립 등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피 지원체계와 비상연락망을 정비한 지역 맞춤형 대비 체계 구축

- (사후 복구) 집중호우·태풍 등 재해 발생 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신속점검 및 복구지원 실시. 농로·소하천 유실 시 영농 접근성 단절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농업기반시설 복구 체계를 마련하고, 재해 이력 데이터 축적·분석을 통한 반복 피해지역 우선 지원

- (일상 회복) 재난 피해 농어업인의 신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이재민 임시주거·생활지원 등 구호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조사·접수의 디지털화를 통해 복구비 지원 절차 간소화

□ 기대효과

○ 재난 유형별 예방 인프라 확충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국가어항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농어촌 주민과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재난 취약계층 맞춤형 대피체계 구축 및 지역 재난관리계획 강화를 통해 지역 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피해 농어업인의 신속한 경영·생활 회복 기반 마련

□ 관련 국정과제

○ 7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3.3.3. 생태환경 보전·활용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 지역에서 영농폐기물·생활폐기물 및 해양쓰레기·폐어구 등 해양폐기물의 처리 미흡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여 주민 정주 환경 악화 및 생태환경 훼손이 이어지고 있음

○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따라 2030년까지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OECM)을 국토 면적(육상·해양)의 30%까지 확보해

야 하는 가운데, 농어촌이 보유한 갯벌·경작지 등 생태자원을 보전·복원하고 이를 생태관광·치유 등 활용 가치로 전환하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됨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 폐기물 관리체계 강화 및 농어촌·해양 환경오염 저감

[농어촌]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농어촌 지역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한 공동집하장 인프라를 확충하고, 적절한 수거·처리 확대를 위한 수거보상금 지급 등 지원 강화
- 특히 산불조심기간(2~5월, 11~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와 연계하여 마을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며, 산불 취약지역, 고령층·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
-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확대를 위한 수집·운반 차량을 확충하고,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를 확대

  * 농어촌 생활폐기물 매립률을 '25년 18.5%에서 '29년에는 16.0% 수준으로 감축

- 도서 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의 정기적 수거를 위한 소형 생활쓰레기 수거선을 개발·도입하고, CCTV 설치 등 수거장 집하 생활폐기물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수거하는 방식 추진
-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단 운영 확대)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지역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쓰레기 클린농촌단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관리 기반 마련 및 정주 여건을 개선

  * 클린농촌단은 ①방치 쓰레기를 공동(거점)집하장으로 운반, ②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 이물질 제거 등 분리·선별 작업, ③공동(거점)집하장 내 쓰레기 분리·배출 등 청소, ④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연계 활동 등을 수행

  * 수거 대상 쓰레기는 공공장소에 방치되어 있고, 손으로 직접 수거하거나 간이 집게 등 소형 도구를 이용하여 수거 가능한 수준

-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관리) 정화주간 운영 등 사전 예방활동을 통해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집중호우 전·후에는 적시 수거를 통해 부유쓰레기가 방치되지 않고 신속히 수거되도록 관리

  * '25~'29년 기간 동안 연간 4만~6만 톤 수거

[해양]

- (해양쓰레기) 선박 기인 해양쓰레기 불법배출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상시 수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
- (폐어구 수거) 연근해 수역에 유실·침적된 폐어구에 대해 수중드론 활용 조사 및 데이터 기반 순환수거 방식을 도입하여 수거의 효율성을 제고
- 정부 주도 사업에서 민간·시민단체의 기부금 등을 활용한 폐어구 수거 사업 참여 확대 및 휴어기 어업인의 폐어구 수거 등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오염사고 초동대응 강화) 해양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지역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양자율방제대 운영을 활성화하며, 이를 위해 활동 대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및 우수 해양자율방제대 선정 등 지원

❍ 민간 참여 기반 생태 복원 및 자연공존지역 확대

- (갯벌 복원) 갯벌 복원을 위한 신규사업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

  * 갯벌재생형, 해수소통형, 기능개선형, 경관개선형, 기수역복원형, 철새서식지복원형 등 유형별 복원사업 추진

- 온실가스 감축 외부 사업에 대한 투자와 그에 따른 탄소배출권 획득, 연안 경관, 탐조활동 등과 연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홍보 등 민간 참여 기반 강화를 통해 기업의 ESG와 연계한 사업 추진 확대
- (해양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어업인이 해양 생태계 유지·증진 활동을 하도

록 지원하는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도입 검토

* 민간-정부(지자체) 간 생태계 유지·증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의 성과에 따라 계약금 지급

- (민간 참여 생태계 보전활동 지원) 마을 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비오톱(생물서식공간) 조성, 오염된 연안 유입 소하천의 자연형 하천 복원 등 주민 주도 생태계 보전 활동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마련

- 생물다양성 보전 사업 등을 희망하는 기업(수요자)과 OECM 후보지를 가진 지자체/주민 공동체(공급자)를 매칭해 주는 오픈 플랫폼 구축·운영

- 보전 활동이 우수한 지역을 자연공존지역(OECM) 후보지로 우선 발굴·조성하고, 보전과 이용이 조화된 생태관광 및 지역 브랜딩(예: 친환경 인증 등)으로 발전시켜 주민 공동체 소득 창출로 연결

* 쿤밍-몬트리올 GBF에 따른 2030년 보호지역 30% 목표 달성을 위한 자연공존지역(OECM) 확충과 연계, 생태가치가 높은 갯벌·논·경작지 등을 체계적으로 발굴·관리

❍ 생태관광 활성화 및 농어촌 자연자본을 활용한 자연·생태서비스 확대

- (생태관광지역 확대)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역 지정·조성을 확대함.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에 대해서는 운영 평가, 컨설팅,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품질을 관리하고 제도 운영을 내실화함

* 생태관광지역 '25년 40개소에서 '29년 45개소로 확대 계획

- (자연·생태자원 및 농업·농촌경관 관리 활동 지원) 다랑논, 전통 과수원 등 생물다양성이 높은 경작지를 환경·경관 자원으로 조성·관리하는 활동, 경관작물 재배 또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전통농업 방식을 통해 고유의 경관을 조성·관리하는 활동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공동체 기반 관리 활동 촉진) 주민 생활권 범위의 자연·생태 자원을 보전·관리 및 활용하기 위해 지역사회 공동체가 집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지불제 등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

- 관리·보전 활동의 지속 가능한 구조 마련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농촌 경관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등 활동으로 발전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

❍ **공동체 참여 기반 자연자원 및 농업·농촌경관 관리 확대**

- (농촌특화지구 참여 인센티브) 농촌지역의 자연·생태자원 관리, 농업·농촌 유산, 경관작물 등을 통한 고유의 농촌 경관 조성·관리를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근거한 농업유산지구, 경관농업지구 등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하여 주민참여 기반의 관리·보전 활동을 촉진·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개편) '22년까지 기 선정된 사업지를 지속 지원·관리하되 공익직불제 개편방향과 연계하여 향후 확대·개편 추진
- (유관 제도·정책의 조정 및 연계) 주민 생활권 자연·생태자원의 공동체 관리활동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공익직불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등 현행 유관 제도·정책의 조정·연계 방안 마련도 필요
- (공동체 활동 기반 운영조직 지원) 보전 활동 촉진을 위해 농업인·비농업인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가 지역의 해당 자원을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 유지·발전 활동까지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 운영조직*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도와 다면적기능지불교부금을 재원으로, 복수 집락이 연합해 농용지 보전, 지역자원뿐 아니라 생활서비스 지원, 경제활동 등 커뮤니티 유지에 필요한 다면적 활동을 수행하는 일본의 농촌RMO(지역운영조직) 사례 참조

□ 기대효과

❍ 폐기물 수거·처리 인프라 확충 및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농어촌 및 해양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개선 및 생태가치 보전에 기여

❍ 갯벌 복원, 자연공존지역 확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등을 통해 2030년

보호지역 30% 달성 목표에 기여하고, 농어촌주민·농어업인의 생태보전 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생태보전 체계를 구축

○ 농어촌 자연자본의 보전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 소득 창출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 국정과제 105.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3.4.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3.4.1.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및 지역 에너지 전환[18)]

□ 배경 및 필요성

○ 탄소중립과 분산에너지 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농어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유휴공간을 바탕으로 에너지 생산과 지역경제를 연계할 수 있는 잠재력 존재

- 농어촌은 태양광·풍력·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생산의 핵심 입지이나, 발전사업의 혜택이 지역사회에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고 주민 참여 또한 제한적인 실정
-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부족과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전환 체계 구축 필요

18) 이상호, 전연경, 신지영(한국환경연구원) 자문내용에 기반함.

❍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지역 산업과 연계한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참여하는 지역 에너지 생태계 조성이 필요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 주민참여형 햇빛소득마을 조성 확대

- 주민참여형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확대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되는 지역 주도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확산하고,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주민·지자체·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등을 활성화하고 발전수익의 지역 환원 및 마을기금 조성 등 이익공유 체계를 마련
-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펀드 등과 연계하여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햇빛소득마을 모델을 확산

❍ 영농형 태양광 등 농어촌 특화 재생에너지 확산

-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여 농업 생산과 재생에너지 생산이 공존하는 농업 모델을 확산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지구별 특성을 반영한 입지 특례와 제도 개선을 추진

  * 재생에너지지구 내 태양광 발전 관련 규제 완화, 영농형 태양광 허용 확대, 태양광 발전시설의 농지 설치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

- 시설원예단지를 대상으로 태양광·열(PVT) 등 신재생에너지 최적 활용기술을 보급하고, 스마트팜 데이터 기반 지능형 에너지 관리시스템 실증을 확대

- 가축분뇨, 농업부산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기존 퇴·액비 중심 처리방식에서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확대

❍ 농어촌 에너지 전환 기반 구축

-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농업시설과 공공시설의 에너지 절감형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 단위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
- 지자체 중심의 지역 에너지 계획을 고도화하고 주민·기업·전문가가 참여하는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 주도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
- 주민 대상 에너지 전환 교육과 컨설팅, 에너지 협동조합 운영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소비 데이터 기반의 지역 에너지 관리체계를 구축

□ 기대효과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소득을 확대하고, 지역 주도의 에너지 전환 기반 마련

❍ 영농형 태양광, 재생에너지지구 및 RE100 기반 농산업 혁신거점 조성을 통해 농어촌의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자립 기반 강화

❍ 주민참여형 지역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과 분산에너지 체계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에너지 전환과 농어촌의 회복력 제고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15.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발전 기반 확립

❍ 국정과제 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 국정과제 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 국정과제 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 국정과제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3.4.2. 농어업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 기반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기후위기 심화와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고투입 농법, 가축 장내발효·분뇨처리, 농어업 분야의 에너지 소비 증가 등은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부담을 가중

❍ 특히 농어업은 기후변화에 민감한 산업인 동시에 국민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라는 점에서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탄소중립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이에 농어업 분야 탄소중립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적 기반 정비, 저탄소·친환경농업 확대, 지역 맞춤형 경축순환 모델 구축 및 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등 다각적 전략 추진 필요

□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 **농업·농촌 분야 기후위기 대응 법·제도 기반 강화**

- (법률 체계 정비) 농업·농촌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성과 체계적 추진에 한계. 이에 농업·농촌의 특수성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기후위기에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안** 추진

* 관련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 「(가칭)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법」

- (종합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국가 차원의 여러 계획*에 분산되어 있으며, 농업·농촌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로드맵이 부재. 이에 국가 상위 계획과 연계한 농업·농촌 분야 기후위기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행관리 및 성과점검 체계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

  * 관련 상위 계획: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19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3년),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25년) 등

-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 농업 분야 기후변화 영향 예측, 대응기술 개발, 대응전략 수립, 기후스마트농업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

  * 농업 분야 기후위기 대응 전담 전문기관을 통해 정책·연구·기술보급 기능을 체계화하고, 농업·농촌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총사업비: 594억 원)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친환경농업 확대

- (탄소중립직불제 확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추진* 및 제도 활성화를 통해 경종·축산 분야 저탄소농업 확산

  * '24년~'26년 시범사업 운영 이후 성과평가 및 감축 효과 검증을 거쳐 본 사업화 추진 필요

- 경종 분야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논물 관리,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등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농가의 참여를 제고하고, 논벼 재배 과정의 메탄 배출 저감과 농경지 탄소저장 기능 강화

- 축산 분야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이, 가축분뇨 처리방식 개선, 사육방식 개선(한우 거세월령 조정 등) 등 저탄소 축산활동을 실천하는 농가의 참여를 제고하고, 가축 장내발효·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아산화질소) 저감

- 또한 ICT 장비 보급·확대를 통해 사양관리 및 분뇨관리를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를 강화하고, 감축 효과가 검증된 저탄소 축산기술과 영농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인증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 인식 제고*

  * '30년까지 저탄소 인증 농가 3만 호, 연간 유통·판매량 5만 톤, 소비자 인지도 95% 이상 달성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탄소 저감 영농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6년 기준 농산물 68개 품목과 축산물 3개 축종을 대상으로 인증취득 지원사업(컨설팅, 인증심사 등) 추진

  * 인증 대상: (농산물) 식량, 과수, 채소, 특용, 임산물 / (축산물) 한우, 돼지, 젖소

- (친환경유기농업 확산) 화학비료·농약 중심의 고투입 농법은 질소계 온실가스(아산화질소) 배출을 증가시키고 토양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이에 화학비료·농약 사용 저감과 유기물 활용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유기농업을 확산하여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농경지 탄소저장 기능 증진 유도

- 유기농경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탄소저장 기능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현장 실증 확대

  * 논: 시비방법 개선, 우렁이농법 개선, 미생물 활용 등/ 밭: 경운방법 개선, 피복작물 등

❍ **지역 맞춤형 경축순환 모델 구축 및 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 (지역 맞춤형 경축순환 모델 구축·확산) 가축분뇨의 퇴·액비 활용이 저조하고 화학비료 의존도가 높은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토양 특성, 재배 작물, 양분 수용능력, 가축분뇨 발생·처리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경축순환* 모델 구축·확산

  * 농가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경종·축산 간 유기적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축순환직불금 지급 검토 (~'30년)

- 퇴·액비의 고품질화 및 균질화를 통해 농가의 수용성을 높이고, 시비처방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퇴·액비 우선 처방체계를 마련하여 화학비료 사용 저감 및 농업 분야 자원순환 촉진

- (가축분뇨 에너지·자원화 추진) 가축분뇨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퇴·액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지면적은 감소하고 농경지 양분 과잉 문제가 심화. 이에 지역별 농경지의 양분 수용능력과 살포 가능량을 고려하여 퇴·액비를 적정하게 활용하고, 잔여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정화처리*, 고체연료**·바이오가스 전환, 바이오차·바이오플라스틱 생산 등 에너지·자원화를 추진하여 처리방식 다변화

- 친환경 방식의 가축분뇨 처리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를 인프라 확충하고 정화 처리 및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비중 확대

  * 정화처리 비율: '22년: 13% → '30년: 25% 이상으로 확대

  ** 고체연료 전환: '30년까지 가축분뇨 118만 톤/년 고체연료화, 연간 50만 톤 온실가스 감축

  ***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확충: '22년 8개소에서 '29년 28개소까지 확대

□ 기대효과

❍ 법·제도 기반 정비를 통해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연계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고, 농업 분야 탄소중립 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 탄소중립직불제 활성화 및 저탄소·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농가의 자발적 탄소중립 참여 확대

❍ 지역 맞춤형 경축순환 모델 구축과 가축분뇨의 에너지·자원화 확대를 통해 축산 분야 환경부담을 완화하고, 순환형 농업체계 구축 및 재생에너지 활용 기반 확충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40. 지속 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 국정과제 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 국정과제 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사업으로 농업 육성

6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기반 고도화

□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고도화가 농어촌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과제의 보완과 함께, 계획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추진기반도 정비되어야 함. 특히, 정책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에 반영하고, 농어촌의 다양한 주체가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기존 삶의 질 정책의 평가·환류체계를 내실화하고, 지역에 기반한 정책 대상과 참여 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 협력과 AI·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음.

1. 삶의 질 정책 평가·환류 체계 개선

1.1. 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 제고

□ 사전협의제도의 환류 기능 제고를 위한 협의 대상 과제 확대

○ 사전협의제도는 농어촌 삶의 질 정책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을 협의하는 제도임. 삶의 질 기본계획의 환류 수단 가운데 유일하게 관계부처의 후속조치를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임.

○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삶의 질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삶의 질 정책 수단을 통해 확인된 정책 현안의 후속조치로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어촌 영향평가 결과 중 관계부처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도 사전협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협의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협의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농어업인삶의질특별법」 제9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전협의 관련 조문 수정이 필요함.

* 「농어업인삶의질법」 제9조의2 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점검과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협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이행계획서 심의 절차 합리화를 통한 차년도 시행계획 연계 강화

○ 현행법상 이행계획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본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별 사업의 개선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장관급 본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이행계획서 심의

가 연말 또는 익년도 상반기까지 지연되면서, 심의 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 실무위원회 역시 장관이 주재하므로 이행계획서 심의를 위해 별도로 개최하는 데 부담이 있음. 따라서 이행계획서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의를 관련 분과위원회가 수행하고, 그 결과와 차년도 시행계획 반영 여부 및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본위원회에 종합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편안) 대상 과제 선정·통보(6월) → 소관 부처 이행계획서 제출(8월) → 분과위원회 심의(9월) → 심의 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9~12월) → 본위원회에 사전협의 결과 및 이행 현황 종합 보고(익년도 상반기)

□ 관계부처 참여 촉진을 위한 비재정적 지원 및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사전협의제도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참여 유인과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개선사례의 위원회 보고 및 대외 공유, 이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전문가 자문 지원 등 비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선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 확인 이후 차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를 간소화하는 등 관계부처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농어촌 영향평가 운영 내실화 및 정책 환류 강화

□ 과제 담당자의 의견과 사업 특성을 반영한 영향평가 과제 선정 및 활용도 제고

❍ 과제 담당자의 의견과 정책·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의 점검 필요성과 평가 결과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영향평가 대상 과제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과제 담당자가 소관 정책·사업의 농어촌 영향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기반 자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와 담당자 의견을 영향평가 후보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체크리스트 예시) 농어촌 지역 적용 시 형평성 저해 가능성, 도·농간 수혜 수준 차이, 사업추진체계의 농어촌 특성 반영 여부 등

- 한편, 기존과 같이 삶의 질 위원회 민간위원, 점검·평가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병행하여 현장 및 산·학계 관점에서 주요 현안을 발굴하고, 자기평가 결과와 담당자·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영향평가 후보과제 풀(pool)을 구성함.

❍ 평가 대상 선정 과정에서 수렴한 과제 담당자의 의견은 영향평가 방향 및 주요 검토사항에 반영하고, 소관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후속조치의 이행 기반을 강화함.

□ 분과위원회를 통한 영향평가 후보 과제 및 평가 결과 검토 강화

❍ 분과위원회는 종합적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후보군에 대해 영향평가 대상으로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분야별 우선순위와 추가 현안, 영향평가의 방향 및 주요 검토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 (적절성 기준 예시) 대상 정책·사업의 정책 효과가 도·농간 차별적으로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등

❍ 또한, 본위원회가 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전에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포함된 분과위원회 사전 검토를 거쳐 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사항의 취지와 근거를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함.

1.3.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 보고방식 개선

□ 목표치 대비 달성 수준과 변화 추세를 반영한 보고방식으로 개선 검토

○ 현행 점검은 항목별로 중기 목표치에 대한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달성'과 '미달성'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계획 기간 동안 목표치 달성 여부를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나, 현행 방식은 목표치에 근접한 경우와 크게 미달한 경우를 모두 동일하게 '미달성'으로 분류하여 서비스 수준의 개선 정도와 변화 추세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목표치 달성 여부를 단순히 이분하기보다, 목표치 대비 달성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점검 결과의 정밀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시) 항목별 점검 결과를 ① 목표치 달성한 경우 '우수'(목표 달성), ② 목표치 대비 9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양호', ③ 70% 이상 90% 미만인 경우 '개선 필요', ④ 70% 미만인 경우 '취약'으로 구분

○ 또한 목표치 대비 달성 수준과 함께 전년 대비 및 기준연도 대비 개선도를 관리함으로써, 서비스 현재 수준과 변화 추세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4. 현안 중심의 삶의 질 위원회 운영 활성화

□ 분과위원회를 현안 중심의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원탁토론) 방식으로 운영

○ 그간 분과위원회는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사전협의제도, 농어촌 영향평가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해 왔음. 그러나 서면 자문 형태로 검토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이 주요해, 농어촌의 다양한 현안을 시의성 있게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분과위원회를 분야별 현안을 발굴하고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상·하반기 각 1회 분과별 소관 분야의 주요 현안을 선정하고, 분과위원과 관계부처, 현장 전문가 및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주제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함.
- 현안의 특성과 논의 목적에 따라 정책 동향과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및 신규 정책과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 논의 주제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참여시켜 정책 집행 과정의 경험과 지역 현장의 개선 수요를 수렴하고, 논의 결과를 삶의 질 위원회 심의에 반영함.

○ 라운드테이블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보완, 관련 정책·사업의 개선 등에 활용함.

□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의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 연계 강화

○ 분과위원회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 중 관계부처 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검토하고, 주요 정책 방향의 설정이나 범부

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본위원회 논의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함.

❍ 이를 통해 분과위원회의 전문적 논의가 일회성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관계 부처의 정책 개선과 위원회의 정책 조정으로 이어지도록 함.

1.5. 평가·환류 체계 전반에 어촌의 특수성 반영 강화[19)]

□ 기존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의 점검·평가·환류 체계에서 어촌의 특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

❍ 기존 농어촌 삶의 질 정책의 점검·평가 과정에서 행정구역 단위의 평균적 수준이나 시설·서비스의 존재 여부만으로는 해상교통 의존, 도서 지역 특성, 생활권 분절 등 어촌의 구조적 제약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도서 지역의 결항, 당일 왕복 곤란과 육지 연안 취약어촌의 원거리 이동, 서비스 공급 부족, 생업공간과 생활서비스 거점 분리 등 어촌 고유의 공간·접근성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 취약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어촌의 공간적, 생활권적 특성을 기존 삶의 질 정책 점검·평가체계에 보완하여 도서·연안 내부의 정책 취약성과 원인에 대한 설명력을 제고하는 한편, 서비스 취약성 진단 결과와 관계부처의 정책개선, 차년도 시행계획 연계를 통해 어촌주민의 실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환류 기능 강화가 필요함.

- (평가체계 중심 연계) 시행계획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점검, 사전협의 및 농어촌 영향평가 등 기존 제도별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각 제도의 점검·판단 과정에 도서·연안어촌의 공간적·생활권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완함.

19) 윤영준 전문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문내용에 기반함.

- (어촌 구조적 취약성 진단) 도서·연안의 공간적 분절, 해상교통 의존 및 결항·계절성, 필수 서비스 공급 취약, 육상·해상 연계 부족 등 어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제약을 중심으로 지역별·유형별 정책 취약성을 진단함.
- (취약원인별 정책수단 보완) 시행계획, 서비스 공급현황, 해상교통 운항자료, 공간자료 등 관련 정책자료를 활용하여 어촌의 취약 원인을 유형별로 진단하고, 원인에 대응하는 정책수단과 관계부처의 개선과제를 구체화함.
- (정책환류·이행강화) 점검·평가 결과를 관계부처의 개선조치와 차년도 시행계획 보완 등에 활용하고, 제시된 개선사항의 후속조치와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함.

□ 공통 농어촌서비스기준 기반의 어촌형 보완 측정·해석체계 마련

○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공통 목표와 공식 점검체계를 기본 틀로 하고서, 도서·연안의 공간·교통·서비스 공급 특성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는 보완 측정·해석체계를 마련함.

- (보완대상 선별) 항목별 서비스 정의와 측정방식에 이미 반영된 조건을 확인하고, 도서·연안의 이용 제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항목과 조건을 중심으로 보완분석의 범위를 설정함.
- (공식 결과와 보완진단 구분) 공식 달성도는 현행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보완진단은 공식 결과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용 제약과 지역 내부의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하여 두 결과의 측정대상과 조건을 구분하여 제시함.
- (보완 필요성 확보) 실증을 통해 공식 목표나 판정조건의 보완 필요성이 확인되면,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검토함.

* '2025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 결과(안)'(26. 6. 공표)는 자가차량 접근시간, 119구급대 현장도착, 고용서비스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운영 등 항목별 방식을 적용함. 수요응답형 교통과 도서 여객선 관련 조건도 현행 시행령의 대중교통 서비스기준에 반영되어 있음(농림축산식품부, 2026).

□ 이동·시간·서비스 제공조건을 고려한 실질적 서비스 이용기회 파악

❍ 실질적 서비스 이용기회는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이동·시간·제공조건이 결합하여 주민에게 형성되는 이용 여건으로 파악하며, 실제 이용실적이나 정책효과와는 구분

❍ 서비스 특성에 따라 고려할 조건을 달리 적용함.

- (해상교통과 서비스 이용의 연결) 주민이 해상교통을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지로 이동하는 경우, 육상·해상 교통의 연결, 운항 일정과 실제 운항·결항, 승선·환승 대기, 서비스 운영 시간을 함께 고려하고, 이용 후 귀환 여건은 서비스 특성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함.
- (육지 연안의 접근제약 반영) 육지 연안의 취약어촌에서는 원거리 이동, 저밀도 수요에 따른 공급여건, 육상교통과 서비스의 제공 빈도·시간대가 이용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동수단과 서비스 운영시간의 연결을 중심으로 보완함.
- (방문·비대면 서비스 제공조건) 방문·순회 서비스는 제공인력과 장비의 접근 및 제공일정의 연결을 확인하며, 비대면 서비스는 제공 가능한 기능, 통신과 이용지원 여건, 필요한 대면서비스와의 연결조건을 파악함.
- (응급 대응·이송 단계 구분) 현행 119구급대 현장도착의 측정대상을 유지하면서, 도서 지역의 현장 대응·환자 이송에 영향을 주는 접근·연계조건을 보완 분석하고, 일반 생활서비스 이용을 위한 주민의 출도·귀도와는 구분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2022년 서해권 섬 어촌 점검은 해상·육상 이동시간을 함께 분석하였으며, 의료기관 접근시간에 환승·운항 대기와 결항에 따른 대기·체류시간이 추가될 수 있음을 지적함(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2).

□ 세부 공간단위와 다양한 서비스 전달방식을 반영한 공급여건·지역 내부격차 보완진단

❍ 항목별 기초 측정단위와 공식 집계단위를 바탕으로, 평균적 결과에 가려질 수

있는 개별 도서·거주지·생활권의 공급여건을 보완적으로 파악함.

❍ 다양한 전달방식이 어느 지역과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여 어촌 내부의 이용기회 차이를 진단함.

- (세부 공간분석과 공식 집계 연결) 서비스 특성과 자료 여건에 적합한 세부 공간단위를 검토하고 공식 집계단위와의 대응관계를 유지함. 동일 행정구역이나 도서 안에서도 거주지와 서비스 제공지, 해상교통 이용 시 선착장의 연결에 따라 달라지는 이용 제약을 확인함.
- (전달방식별 공급범위 확인) 이동·방문·비대면 서비스의 기능, 대상 주민, 공급범위, 제공 빈도, 이용가능 시간과 지속성을 파악함. 사업·장비·시설의 존재와 실제 제공범위를 구분하고, 여러 전달방식을 통해 서비스가 도달하는 지역과 주민을 확인함.
- (항목별 인정요건에 따른 해석) 수요응답형 교통·프로그램 등 현행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식은 해당 요건에 따라 평가하고, 추가 전달방식의 보완진단은 공식 인정 여부와 구분하여 서비스의 실제 공급범위와 항목별 공간요건을 함께 확인하여 이용기회를 해석함.

□ 대표지역 실증을 통한 측정·해석체계의 단계적 고도화 및 정책 활용

❍ 도서·연안의 서로 다른 접근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실증지역을 대상으로 보완 측정·해석방법의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증함.

- (지역유형별 실증) 도서·연안의 접근구조가 다른 지역에서 자료 확보 가능성, 측정 타당성, 서비스별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공식 점검 결과와 보완진단을 대조하여 이용 제약과 내부격차에 대한 추가 설명력을 확인함.
- (단계적 고도화) 실증 결과와 관계부처·전문지원기관·전문가 협의를 토대로 측정·해석방법과 필요한 항목의 보완 여부를 검토하고, 검증된 범위부터 단

계적으로 활용하며 공식 기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절차와 연계함.

- (정책환류 연계) 보완진단을 기존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서비스 취약지역 진단·컨설팅과 연계하여 지역별 취약 원인과 정책개선 과제를 구체화함. 교통과 운영시간의 연결, 방문서비스 제공범위 등 개선이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여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검토를 지원함.

  * 도서·접근 취약어촌을 대상으로 자료 확보 가능성, 측정 단위의 적정성, 해상교통 반영 방식 등을 시범 검증할 것을 제안함.

2. 지역사회 기반 정책 추진 강화

2.1. 농어촌서비스 취약지역 컨설팅 운영

□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결과와 연계한 취약지역 컨설팅 제도 도입·운영

○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고, 문제를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컨설팅 제도를 도입·운영함.

  * 전문지원기관이 구축한 읍·면 단위 공간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서비스 사각지대를 세밀하게 진단

  - 이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에 대한 지역의 인식을 높이고 서비스 여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삶의 질 위원회를 통한 부처 간 정책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26년 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지역 선정과 수행체계 등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

○ 취약지역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수준과 지역별 서비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별하고, 해당 지자체의 컨설팅 참여 및 협조 의향,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함.

- 취약지역 선정은 ① 서비스 달성률('달성항목 수/점검항목 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 ② 서비스기준 이행수준(점검항목의 '목표치 대비 이행수준'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 ③ 농어촌 시·군 전반적으로 달성 정도가 낮은 항목을 중심으로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함.

* ① 서비스기준 달성률 기준 선정: 전체 점검 항목 중 미달성 항목 수가 많은 달성도 하위 시군을 취약지역으로 선정, 달성 여부가 명확해 산출방식이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용이한 반면, 실제적인 서비스 수준 격차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 ② 서비스기준 이행수준 기준 선정: 중기 목표치 대비 이행 수준의 평균을 산출하여 취약지역을 선정, 지역의 실질적 이행 정도/취약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반면, 산출방식이 다소 복잡(일부 항목 역수 변환 등)하여 이해도가 낮아지는 단점 존재

❍ 컨설팅은 대상 지역 공무원, 중간지원기관 활동가, 지역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행 체계를 통해 추진함.

- 전문지원기관이 총괄·조율하고, 지역 연구기관 등 현장 밀착적 수행이 가능한 지역기관이 서비스 세부 실태, 주민 수요 등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협력수행 방식으로 추진함.

❍ 또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만큼, 컨설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서비스기준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서비스기준자문단(가칭)' 풀(pool)을 구성·운영함.

- 자문단은 시도연구원의 연구자, 각 서비스기준 항목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선과제와 중앙정부의 정책 조정 및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구분하여 제안함.

-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삶의 질 위원회 논의로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모색함.

2.2. 주민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기반의 지역사회 실행력 강화

□ 주민공동체의 활동 기반 조성과 주민 주도 정책 참여 확대

❍ 농어촌 주민이 지역의 문제와 수요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의 활동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주민의 논의가 실천적 활동과 지역정책으로 이어지는 상향식 추진구조를 강화함.

* 농촌 SOC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공동체 참여 확대

- 읍·면 소재지, 거점 기능을 갖는 중심마을 등을 '작은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존 공공시설과 유휴공간 등을 주민조직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함.

- 주민이 지역 공동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현장포럼 등 공론 기회를 확대하고, 논의 결과가 주민 주도의 소규모 실천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이때 주민공동체 활동을 개별 마을 중심으로 머무르지 않고, 읍·면 등 생활권 단위로 확장해 여러 마을과 지역 주체가 공동 문제에 대응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함.

* 마을공동체 관련 부처별 정책·사업을 연계·조정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추진 및 분야(먹거리, 돌봄, 주거)별 마을공동체 모델 설계·확산

- 면 단위 주민자치회 등 주민 대표기구를 주축으로 마을 간 공동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통합적인 공동체 활동을 추진함. 이는 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주민이 함께 논의하거나, 지역자원과 관련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읍·면 단위 상향식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포괄할 수 있음.

* 예시: 주민의 논의와 활동을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운영, 주민협정, 농촌공간의 재생·관리 등 지역정책의 수립과 실행으로 연계

❍ 아울러 주민공동체의 활동과 지역정책을 현장에서 연계·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활동가와 중간지원조직 등 지원 주체를 발굴·육성함.

□ 지역의 필요에 대응하는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 육성

❍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농어촌 주민의 생활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을 지원함.

* ('26. 3월) 192개소 → ('28) 300개소 → ('30) 500개소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 돌봄·교육·문화·생활서비스 등 필수 서비스, 로컬푸드·농식품 가공·유통·농촌체험·관광 등 농촌특화산업, 환경·생태자원·농어업유산·경관 관리 등 지역 수요와 자원을 반영한 사업모델을 기획·확산함.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빈집정비 등 지역재생사업, 어촌 활력사업,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산림치유사업 등 참여를 우대하고, 농어촌 민박, 특산품 판매 등 지역 자원 기반 수익모델을 확산

- 지방정부와의 서비스 협약을 통해 돌봄농장, 주민생활돌봄공동체 등 기존 농업·농촌 기반 조직이 지속 가능한 서비스 공급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정부-민간기관-사회적기업 등 주체가 협력하는 모델을 구축·운영하는 한편(사회적기업 협력 모델), 중앙-지방-협동조합이 협력한 공동 과제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을 지원함(협동조합 협력 모델).

❍ 농어촌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지속 활동할 수 있도록, 발굴·교육·활동지원 등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갖추고, 조직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함.

- 기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지역의 지원기관을 활용하되, 지원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는 광역 단위의 지원과 전문 멘토링을

강화함. 또한, 지역 간·전국 단위 네트워크와 사회적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조직의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

- 아울러 인턴십·펠로십과 역량 강화·경력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수행할 인력을 양성함.

2.3.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 기반 강화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재정·인적자원 연계 확대

○ (지역문제 해결형 협업 확대) 다양한 기업·기관이 농어촌 지역문제의 발굴부터 사업 기획·실행 및 성과 확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함.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및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 등을 개선하여 기업·공공기관의 참여가 단발성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함.

  * 기업, 지자체, 주민 등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추진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 방식의 협업 모델을 확산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경우 민간기부 한계로 인한 결손액을 정부 재정으로 확충하고, 지자체 등 대상 수요 공모를 추진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함.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지역 등을 우선 지원하고, 특히 농어촌서비스 취약지역 컨설팅과 연계해 서비스 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

○ (AI·디지털 기술의 현장 실증 및 확산) 농어촌 현장을 기반으로 AI·디지털 기술의 실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혁신과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함.

- 서비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지자체·기업·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확대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AI·디지털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지원함.
- 기존 제5차 기본계획에서 제안된 '(가칭)스마트 농촌 실험실(R&D)' 사업을 구체화하여 생활서비스, 돌봄,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AI 기반 서비스를 실증하고, 효과가 확인된 모델의 확산을 지원함.

○ (재정·인적자원의 지역 연계 확대) 기업·공공기관의 재정·인적자원을 농어촌의 수요와 연계하고, 지역의 문제 해결과 성장 기반 확충에 활용함.

- 일본의 기업판 고향사랑기부제 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업의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기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함.
- 단순 기부금 지원 외에 전문인력 파견, 임직원의 프로젝트 참여, 전문지식 및 기술 지원 등 기업·공공기관의 인적·지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 지원 모델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문제 해결과 혁신을 위한 역량 제고를 도모함.

3. 현장 수요 기반 제도 운영

3.1. 관련 법·제도적 근거 보완

□ 변화하는 농어촌 여건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

○ 인구감소와 고령화, 필수 서비스 축소, 기술 발전 등 농어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삶의 질 정책의 추진을 제약하는 법령과 사업 지침을 점검하고, 제도적 제약이 확인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함.

- 예를 들어, 식품 구매,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별로 이동·방문 서비스와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운영 실태와 규제·지원 상의 제약을 조사할 수 있음.

- 현행 제도와 사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정책 수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추진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 공급 주체 및 지원 방식 등에 관한 근거를 보완함.

3.2. 현장 수요 연계 및 환류

□ 삶의 질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농어촌 현장 참여 확대

○ 분과위원회가 농어촌 현장의 여건과 정책 수요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함.

- 예컨대 분과위원회 전문가 라운드테이블과 정책 현안 논의 시 해당 분야의 농어촌 현장 관계자를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포함하여 현장의 경험과 정책 수요가 논의 과정에 직접 반영되도록 함.
- 정책 분야와 안건의 성격에 따라 농어업인, 주민, 지역 활동가, 서비스 제공기관,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현장 주체의 참여를 확대함.

□ '(가칭)농어촌 삶의 질 현장리포터' 운영

○ 농어촌 주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삶의 질 관련 문제와 지역의 정책 수요를 상시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으로 구성된 '(가칭)농어촌 삶의 질 현장리포터'를 운영함.

- 139개 농어촌 시·군의 추천을 받아 읍 지역과 면 소재지 외 배후마을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와 주민 의견 수렴 역량을 갖춘 주민을 각각 1명씩 리포터로 선정함.

* 면 지역은 교통과 생활서비스 접근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고려

- 지역활동가,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참여자, 사회연대경제 조직 관계자 등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과 정책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민을 우선 선정하되, 전체 리포터의 성별과 연령 등이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함.

  * 지자체로부터 3배수를 추천받아 삶의 질 위원회 사무국이 최종 구성

- 리포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활동 실적과 전체 구성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정기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에 참여한 리포터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속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표창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함.

- 정기적인 의견수렴과 현안 제안을 통해 소득·일자리, 공공·생활서비스, 주거·정주 환경, 공동체, 안전 등 삶의 질 전반에 걸친 지역 현안과 제도 개선 수요를 파악함.

- 리포터가 제안한 현안을 분야별·지역별로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분과위원회 라운드테이블의 논의 주제 발굴, 시행계획 수립 및 삶의 질 위원회 안건 검토 등에 활용함.

- 제안사항의 검토 결과와 정책 반영 여부를 리포터에게 공유하여 현안의 발굴·검토·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는 환류체계를 구축함.

  * 농식품부 2030자문단 등 정책대상 참여형 의견수렴 제도의 운영 경험을 참고하되, 전국 농어촌 시·군의 읍 지역과 배후마을 주민을 연결하는 지역 기반의 상시 현안 모니터링체계로 차별화

4. AI·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

4.1. AI·데이터 기반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구축

□ 삶의 질 정책을 지원하는 공간정보·데이터 기반 마련

○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삶의 질 정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결과와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를 시각화한 지도서비스를 구축·운영함.

- 2026년 개정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따라 139개 농어촌 시·군의 항목별 달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함.
- 연도별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를 지역별·주제별로 살펴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를 제공함.

○ 농식품부에서 구축 중인 '농업·농촌 AX 데이터 허브'와 연계하여 시·군별 삶의 질 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함.

* '농업·농촌 AX 데이터'를 수집·융합·제공·거래하는 거점으로서, AX 관련 농업·농촌 전 분야의 데이터를 공간정보(전자지도) 기반으로 결합

- 시·군과 관계기관에 분산된 삶의 질 관련 공간·행정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지능·서비스 계층으로 구성된 통합 활용체계를 마련함.
- 정책수요, 필수 서비스 접근성, 서비스 취약지역 등을 분석하고 지역별 정책 대안과 사업 우선순위 설정을 지원하는 분석모델을 개발함.
- 분석 결과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성과점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공유 기능을 구축함.

□ 삶의 질 관련 정보의 연계·공동 활용 확대

❍ 농어촌 삶의 질 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구축·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함.

- 농어촌 생활 SOC, 대중교통, 재난 취약지역 등 농어촌 삶의 질과 관련한 공간정보를 종합정보체계의 구축·활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함.

* 「농어업인삶의질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표 6-1〉 「농어업인삶의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편안
제12조의2(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 법 제32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이란 농업·농촌과 관련된 객체의 위도·경도, 주소 등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이 수집·생성·가공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경지 전자지도 정보 2. 농경지 영상정보 3. 자동화된 농림축산물의 생산·유통·가공 시설의 환경, 생육, 제어, 경영 등 관련 정보 4. 축산차량이동 정보 등 가축방역 관련 정보 5.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정보 등 농식품사업 관련 정보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토지 관련 정보 7. 비옥도 등 농경지의 변동사항 및 토양도(土壤圖) 등 토양환경 관련 정보 8. 종자, 농약잔류허용기준, 병해충 및 면세석유류 등 영농 관련 정보 9. 농작물·가축 및 농업용시설물에 대한 농업재해 및 농업재해보험 관련 정보 10. 농축산물 가격 및 유통량 등 농축산물의 유통 관련 정보 11. 이력추적관리 정보 및 농축산물의 이력관리 정보 등 농축산물의 안전 관련 정보 1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	제12조의2(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 ---------- 〈신설〉 12. 공연장 등 문화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등 문화·여가 관련 시설 정보 13. 기초생활서비스(이미용, 세탁, 약국, 주유소 등)에 해당하는 농어촌 생활 SOC 관련 정보 14. 대중교통, 수요응답형 교통모델 등 농어촌 교통 여건 관련 정보 15. 집중호우, 침수, 산사태 등 재난 취약지역 정보 ※ 제12호(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는 제16호로 이동

자료: 연구진 작성.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의 농식품 공간정보서비스(팜맵), 농어촌공사의 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RAISE) 등 관련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표준화와 연계·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중복되는 기능은 단계적으로 조정·통합함.

□ 농어촌 주민 체감형 AI 서비스 확산

❍ 생활밀착형 AI 서비스의 실증·확산

- AI 기반 장보기 지원, 건강 모니터링, 지능형 영상관제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스마트 농촌생활권에 적용하고 이용률과 주민 만족도를 바탕으로 개선함.

  * 2030년까지 농촌 주민이 일상에서 AI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농촌생활권을 100개 이상으로 확대

-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폐기물 자동 수거 시스템, AI 기반 수요 예측과 배차·경로 최적화를 적용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모델의 농어촌 적용 가능성을 실증함.

- 단, 이 같은 모델의 현장 적용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수용성을 고려하는 한편, 주민의 선택권과 사람에 의한 최종 판단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4.2. AI 활용 범부처 협력 과제 발굴 및 활성화

□ 범부처 AI 사업과 연계한 농어촌 삶의 질 과제 발굴 및 확산

❍ 범부처 AX 스프린트 사업을 활용한 농어촌 생활서비스 과제의 사업화를 추진함.

- 2026년부터 11개 관계부처 합동(기획처 총괄)으로 추진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 스프린트)'의 농식품부 과제 가운데 '농촌 생활서비스' 분야에 대한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후속 과제를 지속 발굴함.
-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협력하여 AI 기반 농어촌 수요응답형 교통모델 사업을 기획하고, 보건복지부 등과 AI 기반 취약계층 발굴, 비대면 의료·건강관리 지원, 비대면 상담·정신건강 지원과 같은 신규 협력 과제를 발굴함.

❍ 부처협업 기반 AI 사업에 농어촌 삶의 질 분야의 반영을 확대함.

- 과기정통부 주관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의 후속·유사 사업 추진 시 기존 농업 분과를 농업·농촌 분과로 확대하여 농어촌 필수 서비스 분야의 AI 기술 개발과 확산을 유도함.

  *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 정부 부처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와 현장 수요를 AI 기술과 결합하여,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정부지원 사업(2022~2025년)

-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공 데이터와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은 AI 서비스를 개발하며,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 실증과 성과 검증을 거쳐 서비스의 도입·적용을 추진함.

부 록

설문지 - 농어촌 기본생활 여건 및 인식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D

농어촌 기본생활 여건 및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농업·농촌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주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생활하시면서 느끼는 불편함과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돌봄, 교통, 일자리, 주거, 생활환경 등** 일상생활에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 또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농어촌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답은 없으니 평소 느끼시는 대로 편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며, 제21조(개인정보의파기)에 따라 조사 종료 후 모두 파기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통계 분석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응답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답례품을 드립니다.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4~5.

조사 내용 문의	조사 진행 문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담당자 정민주 정책전문연구원 (061-820-2257)	㈜리서치앤리서치 엄승범 전임연구원 (02-3484-3076)

SQ1	성별	1) 남성 2) 여성
SQ2	연령	1) 19세 미만 ☞ 조사 종료 2) 19세~29세 3) 30대 4) 40대 5) 50대 6) 60대 7) 70대 이상
		만 (_____)세
SQ3	거주하는 지역	1) 경기/인천 2) 강원 3) 충북 4) 충남/세종 5) 전북 6) 전남 7) 경북/대구 8) 경남/부산/울산 9) 제주
	시군 여부	1) 시 지역 2) 군 지역 3) 광역시의 구 지역 ☞ 조사 종료
	읍면동 여부	1) 읍 지역 2) 면 지역 3) 동 지역 ☞ 조사 종료
	현재 거주하는 마을(리)에서 거주기간	1) 6개월 미만 2) 6개월 이상~1년 미만 3) 1년 이상~3년 미만 4) 3년 이상~5년 미만 5) 5년 이상~10년 미만 6) 10년 이상

A. 농어촌 생활 여건에 대한 인식

A01.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의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이 얼마나 그렇다고 느끼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의료, 돌봄, 교육, 교통 등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음	1)	2)	3)	4)	5)
2. 생활에 필요한 소득이나 일자리가 있고, 사람들이 찾아와 지역에 활기가 있음	1)	2)	3)	4)	5)
3. 집과 생활환경 등이 쾌적하고 안전해 살기 좋음	1)	2)	3)	4)	5)

- 1 -

A02.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의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삶의 질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1순위부터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가장 중요한 항목부터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 의료, 돌봄, 교육, 교통 등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음
2) 생활에 필요한 소득이나 일자리 기회가 충분하고, 지역에 활기가 있음
3) 집과 생활환경 등이 쾌적하고 안전해 살기 좋음

1순위	2순위	3순위

B. 삶의 질에 특히 중요한 핵심과제

B01. [생활서비스]와 관련하여,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의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가장 중요한 항목부터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 병원이나 돌봄서비스(노인·아동)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음
2) 교육이나 문화·여가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음
3) 버스 등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4) 은행 이용이나 인터넷, 전화 사용에 불편함이 없음
5) 장보기, 세탁, 약 구입 등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움

B02. [소득 및 지역 경제]와 관련하여,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의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가장 중요한 항목부터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 생활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2) 지역에 다양하고 충분한 일자리가 있음
3) 다른 지역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머무르면서 지역에 활기가 있음
4)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지역에서 잘 정착함

B03. [정주 환경]과 관련하여,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의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가장 중요한 항목부터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 집과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유지됨
2) 마을이나 주변 공간(빈집, 빈 창고, 공터 등)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잘 활용됨
3)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고, 재난이나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음
4) 마을이 지속가능하도록 농사나 어업을 할 때 환경을 덜 해치고, 햇빛이나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를 활용함

C. 핵심과제 실태 및 보완 방향

※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의 상황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B01=1번으로 1, 2순위를 응답한 응답자만

C01.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느끼는 어려움을 가장 큰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
2) 거리가 멀거나 이동이 불편하다
3) 비용이 부담된다
4)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맞지 않는다
5) 예약이나 대기 때문에 이용하기 불편하다
6) 필요할 때 바로 이용하기 어렵다
7) 기타 ( )
8) 해당 없음 ☞ 1순위 응답시 다음 세트 문항으로

C02. 앞에서 선택하신 어려움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시설이나 서비스가 부족해서
2)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3) 비용 부담이 커서
4) 안내가 정보 제공이 부족해서
5) 이용 절차가 어렵거나 복잡해서
6)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7) 기타 ( )

C0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1)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더 많아져야 한다
2)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가 더 다양해져야 한다
3) 마을로 찾아오는 서비스나 집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
4) 버스 등 이동이 더 편리해져야 한다
5) 이용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보조금, 바우처 등)이 필요하다
6) 무료나 저렴한 서비스가 더 많아져야 한다
7)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거나 다양해져야 한다
8) 예약이나 신청, 이용 방법이 더 간단해져야 한다
9) 이용 방법이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10)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한다
11) 기타 ( )

C04.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 B01=2번으로 1, 2순위를 응답한 응답자만

C05. [교육이나 문화·여가 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느끼는 어려움을 가장 큰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부족하다
2) 거리가 멀거나 이동이 불편하다
3) 비용이 부담된다
4)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일정이 맞지 않는다
5) 신청이나 예약 때문에 이용하기 불편하다
6)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찾기 어렵다
7) 기타 (　　)
8) 해당 없음 ☞ 1순위 응답시 다음 세트 문항으로

C06. 앞에서 선택하신 어려움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부족해서
2)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3) 비용 부담이 커서
4) 프로그램이나 활동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5) 신청이나 이용 방법이 어려워서
6) 안내나 정보가 부족해서
7)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거나 참여 분위기가 부족해서
8) 기타 (　　)

C07.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1)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더 많아져야 한다
2) 가까운 곳에서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더 많아져야 한다
3) 마을로 찾아오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4) 버스 등 이동이 더 편리해져야 한다
5) 참여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보조금, 바우처 등)이 필요하다
6) 무료나 저렴한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7) 신청이나 이용 방법이 더 간단해져야 한다
8)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일정이 다양해져야 한다
9) 같이 참여할 사람을 찾기 쉽거나 참여 분위기가 더 좋아져야 한다
10) 기타 (　　)

C08.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 B01=3번으로 1, 2순위를 응답한 응답자만

C09. [버스 등 교통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느끼는 어려움을 가장 큰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1) 버스 등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하다
2)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 부족하다
3) 이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4) 버스나 택시 요금 등 이동 비용이 부담된다
5) 길을 걷거나 이동할 때 안전이 걱정된다 (특히 고령자, 아동 등)
6) 기타 ( )
7) 해당 없음 ☞ 1순위 응답시 다음 세트 문항으로

C10. 앞에서 선택하신 어려움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버스 노선이 부족하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서
2)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해서 (버스, 택시, 마을버스 등)
3) 목적지까지 거리가 멀거나 이동 경로가 불편해서
4)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 부족해서
5) 이동할 때 드는 비용을 줄여주는 지원이나 제도가 부족해서
6) 길을 걷거나 이동할 때 차가 빠르게 다니거나 인도가 없어 위험해서
7) 기타 ( )

C11.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1) 버스 노선을 늘리거나 운행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
2) 택시, 마을버스 등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더 많아져야 한다
3) 길이 불편하거나 돌아가야 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4) 이동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예: 요금 지원, 바우처 등)
5)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도입하거나 확대해야 한다 (농촌형 수요응답형 버스·택시 등)
6) 인도, 횡단보도 등 길을 걸을 때 위험한 구간을 정비해야 한다
7) 마을 안에서 차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보호 구역을 늘려야 한다
8) 교통안전 교육을 늘리고, 고령자 등을 위한 안전 장비(야광/반사 조끼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9) 기타 ( )

C12.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 B01=4번으로 1, 2순위를 응답한 응답자만

C13. [은행 이용 및 인터넷·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느끼는 어려움을 가장 큰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은행, 현금인출기 등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기가 부족하다
2)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없거나 접근이 불편하다
3) 비용이 부담된다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수수료 등)
4) 이용 방법이 어려워서 사용하기 힘들다
5)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렵다
6)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맞지 않는다
7)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
8) 인터넷 속도가 느리거나 연결이 잘 안 돼서 이용하기 어렵다
9) 기타 ( )
10) 해당 없음 ☞ 1순위 응답 시 다음 세트 문항으로

C14. 앞에서 선택하신 어려움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은행, 현금인출기 등 시설이나 기기를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2)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까운 곳에 골고루 있지 않아서
3) 비용 부담이 커서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수수료 등)
4) 사용 방법을 배울 기회가 부족해서
5)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서
6)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제한되어 있어서
7)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알기 어려워서
8) 인터넷이나 통신 기반이 잘 안 갖춰져 있어서
9) 기타 ( )

C15.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1)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기가 더 많아져야 한다
2) 집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버스 등 이동이 더 편리해져야 한다
4) 이용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보조금 등)이 필요하다
5) 무료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더 많아져야 한다
6) 사용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이나 안내가 필요하다
7)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한다
8)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거나 다양해져야 한다
9) 이용 방법이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
10)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거나 연결이 잘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11) 기타 ( )

C16.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 B01=5번으로 1, 2순위를 응답한 응답자만

C17. [장보기, 세탁, 목욕, 이·미용, 약 구입 등 일상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느끼는 어려움을 가장 큰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
2) 거리가 멀거나 이동이 불편하다
3) 비용이 부담된다 (요금, 가격 등)
4)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맞지 않는다
5) 이용하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거나 불편하다
6) 이용 방법이나 정보를 찾기 어렵다
7)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여러 곳을 따로 가야 해서 불편하다
8) 기타 ( )
9) 해당 없음 ☞ 1순위 응답 시 다음 세트 문항으로

C18. 앞에서 선택하신 어려움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이용할 수 있는 가게나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서
2)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3) 물가나 이용 요금이 비싸서
4)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5) 필요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서
6) 한 곳에서 여러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기 어려워서
7) 운영하는 사람이 부족하거나 자주 바뀌어서
8) 기타 ( )

C19.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1) 가게나 시설이 더 많아져야 한다
2) 집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버스 등 이동이 더 편리해져야 한다
4) 이용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보조금, 바우처 등)이 필요하다
5) 무료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더 많아져야 한다
6)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7) 어디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8) 기타 ( )

C20.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 B02=1번으로 1, 2순위를 응답한 응답자만

C21. [소득]과 관련하여, 느끼는 어려움을 가장 큰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생활하는 데 필요한 소득이 부족하다
2)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이 불안정하다
3) 기타 ( )
4) 해당 없음 ☞ 1순위 응답 시 다음 세트 문항으로

C22. 앞에서 선택하신 어려움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부족해서
2) 물가나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3) 추가로 소득을 얻을 방법이 부족해서
4) 수입이 계절이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져서
5) 기타 ( )

C2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1) 기후나 시장 상황으로 수입이 줄어들 때 보충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2) 소득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3) 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필요한 만큼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4) 기타 ( )

C24.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 B02=2번으로 1, 2순위를 응답한 응답자만

C25. [일자리, 창업 등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느끼는 어려움을 가장 큰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지역 안에서 일하거나 새롭게 일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적다
2) 임금이나 근무시간 등 원하는 조건에 맞는 일을 찾기 어렵다
3) 나의 경험이나 능력을 살려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렵다
4) 일자리나 창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5) 일하는 환경이 안전하지 않거나 근무 여건이 좋지 많아 일하기 불안하다
6) 기타 ( )
7) 해당 없음 ☞ 1순위 응답시 다음 세트 문항으로

C26. 앞에서 선택하신 어려움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역에 할 수 있는 일거리가 많지 않아서
2) 지역에 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3) 일자리나 창업 정보를 잘 알기 어려워서
4)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거나 혼자서 하기 부담되어서
5) 일하는 환경이 안전하지 않거나 차별 등 대우가 좋지 않아서
6) 기타 ( )

C27.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1)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나 일을 시작할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
2) 농사나 지역에서 나는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3)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거나 장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4)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일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늘어나야 한다
   (예: 지역에서 만든 것을 지역에서 팔고 소비하는 활동(로컬푸드, 지역 장터 등))
5) 일자리나 창업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6) 함께 일할 사람이나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공동 창업 등)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7) 안전하고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8) 기타

C28.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 B02=3번으로 1, 2순위를 응답한 응답자만

C29. [타 지역 사람들의 방문] 관련하여, 느끼는 어려움을 가장 큰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적다
2) 찾아와도 오래 머무르지 않고 금방 떠나는 경우가 많다
3) 우리 지역에는 사람이 모이거나 활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4) 기타 ( )
5) 해당 없음 ☞ 1순위 응답시 다음 세트 문항으로

C30. 앞에서 선택하신 어려움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우리 지역을 찾은 사람들이 즐길 만한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부족해서
2) 우리 지역을 찾은 사람들이 머무를 만한 숙소나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3) 우리 지역에 대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4) 우리 지역을 방문하거나 머무는 데 드는 비용이 부담되어서
5)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데 교통이 불편해서
6)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우리 지역만의 특징이나 매력이 부족해서
7) 기타 ( )

C31.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1)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고 즐길 만한 장소와 공간이 더 많아져야 한다
2)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행사나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예: 체험 프로그램, 지역 행사, 워케이션(머무르며 일과 휴식을 함께하는 활동) 등)
3) 우리 지역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4)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나 편의시설이 더 좋아져야 한다
5)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이 더 많이 생겨야 한다
6) 방문 비용을 줄여주거나 할인 혜택을 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 여행 지원금, 숙박 할인 등)
7) 기타 ( )

C32.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 B02=4번으로 1, 2순위를 응답한 응답자만

C33. [타 지역 사람들의 정착]과 관련하여, 현재 살고 계신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귀농·귀어·귀촌 등), 외국인 이주민(예: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지역에 들어오거나 생활하는 데 있어 느끼는 어려움을 가장 큰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우리 지역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
2) 이주해 온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기 어렵다
3) 이주해 온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다
4) 기타 ( )
5) 해당 없음 ☞ 1순위 응답시 다음 세트 문항으로

C34. 앞에서 선택하신 어려움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우리 지역의 생활 방식이나 환경에 대해 미리 알기 어려워서
2) 이주해 온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지 않아서
3) 이주해 온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도움을 받을 곳이나 사람이 부족해서
4) 이주해 온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제도를 잘 몰라서
5)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말이나 문화 차이 때문에 적응이 어려워서
6) 주거, 편의시설(예: 병원, 마트, 대중교통) 등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건이 부족해서
7) 기타 ( )

C35.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1) 우리 지역으로 이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역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미리 지역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예: 한 달 살기 등)
3) 이주해 온 사람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
4) 이주해 온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내나 지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
5) 이주해 온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이나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주거, 편의시설 등 생활 여건이 더 좋아져야 한다
7) 기타 ( )

C36.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 B03=1번으로 1, 2순위를 응답한 응답자만

C37. [주거 환경]과 관련하여, 느끼는 어려움을 가장 큰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집이 낡거나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불편하다
2) 집 안이 춥거나 덥고 단열이 잘 되지 않는다
3) 상수도, 하수도 등 물 사용이나 배수가 불편하다
4) 도시가스 등 난방이나 연료를 이용하기 불편하다
5) 계단, 문턱 등으로 집안에서 이동하거나 생활하기 불편하다
6) 쓰레기, 악취, 오염 등으로 생활환경이 쾌적하지 않다
7) 기타 ( )
8) 해당 없음 ☞ 1순위 응답시 다음 세트 문항으로

C38. 앞에서 선택하신 어려움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집을 고치거나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2)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같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3) 집이 오래되어 고치기 어려워서
4) 집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거나 점검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5) 어떻게 고쳐야 할지 방법이나 정보를 잘 몰라서
6) 생활쓰레기나 영농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 부족하고,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7) 기타 ( )

C39.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1) 집을 수리하거나 고칠 수 있도록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2) 집을 고치거나 관리할 때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예: 수리 지원, 인력 지원 등)
3)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더 잘 갖춰져야 한다
4) 단열이나 난방을 개선해 집 안 환경이 더 쾌적해져야 한다
5) 고령자나 청년 등 거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
(예: 고령자복지주택, 청년보금자리주택 등)
6) 생활쓰레기나 영농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시설을 늘리고, 수거와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7) 기타 ( )

C40.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 B03=2번으로 1, 2순위를 응답한 응답자만

C41. [마을 환경]과 관련하여, 느끼는 어려움을 가장 큰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주거지와 공장, 축사 등이 뒤섞여 있어 생활하기 불편하다
2) 빈집이나 방치된 건물이 많아 마을 환경이 좋지 않다
3) 마을 현안과 관련된 일에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
4) 집 근처에서 장보기, 병원 등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
5) 기타 ( )
6) 해당 없음 ☞ 1순위 응답시 다음 세트 문항으로

C42. 앞에서 선택하신 어려움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마을 공간을 어떻게 나누고 이용할지 정해진 기준이나 계획이 없어서
2) 빈집이나 유휴공간 및 부지(빈 창고, 공장, 폐교 등)을 활용하거나 정비할 여건이 부족해서
3) 주민들이 마을 일이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서
4) 주민들이 함께 마을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위기나 협력이 부족해서
5) 집 근처에 마트, 병원 등 필요한 생활시설이 부족해서
6) 필요한 생활시설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흩어져 있어서
7) 기타 ( )

C4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1) 마을 공간을 어떻게 바꾸거나 활용할지 우리 지역에서 주도해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2) 마을 공간을 나누거나 바꾸는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빈집이나 유휴공간 및 부지를 정비하거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마을 일이나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잘 마련되어야 한다
5) 주민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6) 집 근처에 마트, 병원 등 생활시설이 더 많아져야 한다
7) 필요한 생활시설을 한 곳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기타 ( )

C44.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 B03=3번으로 1, 2순위를 응답한 응답자만

C45. [자연환경 및 재해와 생활안전]과 관련하여, 느끼는 어려움을 가장 큰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바다, 하천, 산림 등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지 않는다
2) 홍수나 가뭄, 산사태, 산불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날까 봐 걱정된다
3) 범죄나 도난 등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4) 사고(낙상, 화재, 교통사고 등)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5) 기타 ( )
6) 해당 없음 ☞ 1순위 응답시 다음 세트 문항으로

C46. 앞에서 선택하신 어려움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자연환경을 지키거나 관리하는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2) 홍수나 가뭄, 산사태,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준비나 대응이 부족해서
3)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순찰이나 방범 활동이 충분하지 않아서
4)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아서
5) 기타 ( )

C47.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1)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더 강화해야 한다
2) 홍수, 가뭄, 산사태, 산불 등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시설과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
3)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순찰, CCTV, 조명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4)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점검, 안전시설 설치,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
5) 기타 ( )

C48.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 B03=4번으로 1, 2순위를 응답한 응답자만

C49. [기후변화와 대응]과 관련하여, 느끼는 어려움을 가장 큰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더위와 추위로 지내기 불편하고, 전기요금이나 난방비가 부담된다.
2) 태양광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기 어렵다
3) 농사나 어업을 할 때 날씨 때문에 수확이나 일이 불안정하다
4) 농사나 어업을 친환경적으로(환경을 덜 해치도록) 바꾸는 것이 어렵거나 부담된다 (예: 탄소 줄이기, 자원 재활용하기 등)
5) 관련 정보나 도움을 얻기 어렵다
6) 기타 ( )
7) 해당 없음 ☞ 1순위 응답시 다음 세트 문항으로

C50. 앞에서 선택하신 어려움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더위를 피하거나 따뜻하게 지낼 시설이 부족해서 (쉼터 등)
2) 전기요금이나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지원이 부족해서
3) 태양광 같은 시설을 설치할 여건이 부족해서
4) 날씨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원이 부족해서
5) 농사나 어업 방식을 친환경적으로(환경을 덜 해치도록) 바꾸는 데 도움이나 지원이 부족해서
6) 관련 정보나 안내를 받기 어려워서
7)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나 지원이 부족해서
6) 기타 ( )

C51.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1) 더위를 피하거나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을 시설을 늘려야 한다
2)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3) 개인이 태양광 등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마을에서 함께 햇빛이나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고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5) 농사나 어업 방식을 친환경적으로(환경을 덜 해치도록) 바꾸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6) 친환경적인 농사나 어업 방식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이나 안내가 필요하다
7)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8) 기타 ( )

C52.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D.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으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가 됩니다.

DQ1. 최종 학력 (중퇴 포함)

1) 무학 2) 초등학교 졸업 이하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5)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6) 대학원 재학 이상

DQ2. 본인 직업 (복수일 경우 가장 소득이 높은 것)

1) 농림어축산업 2) 자영업 3) 사무·관리직(관공서, 회사 등)
4) 생산·기능·노무직 5) 판매·영업직 6) 서비스직
7) 전문·기술직 8) 주부 9) 학생
10) 무직 11) 퇴직 12) 기타( )

DQ3. 직장(일터) 소재지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시·군)인지 여부

1) 같은 지역 2) 다른 지역

DQ4. 배우자 유무

1) 있음 2) 없음

DQ5.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수

1) 1명 2) 2명 3) 3명 4) 4명 이상

DQ6. 귀농어·귀촌 여부 및 시기 (복수 응답)

1) 귀농어 (년) 2) 귀촌 (년) 3) 해당 없음

DQ7. 가구 내 차량 보유 여부

1) 있음 2) 없음

DQ8. 주요 이동 수단

1) 자가용 2) 대중교통 3) 도보 4) 기타( )

DQ9. 가구 연간 소득 (모든 가구원 소득 합친 전체 소득)

1) 1천만 원 미만 2) 1,000~1,999만 원 3) 2,000~2,999만 원
4) 3,000~3,999만 원 5) 4,000~4,999만 원 6) 5,000~5,999만 원
7) 6,000~6,999만 원 8) 7,000~7,999만 원 9) 8,000~8,999만 원
10) 9,000~9,999만 원 11) 1억 원 이상

DQ10. 현재 건강상태

1) 매우 좋음 2) 좋은 편 3) 보통 4) 나쁜 편 5) 매우 나쁨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2025),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김용렬·성주인·김광선·마상진·이순미·한이철·권인혜·민경찬·정민주(2024),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김광선·심재헌·이순미·이성윤(2025a), 농촌정책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심재헌·한이철·손경민·정민주·민경찬·박해원(2025b), "2024 지역발전지수", KREI 농정포커스, 제22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성주인·심재헌·한이철·서형주·민경찬(2020), 농촌공간계획 수립 기본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재헌·유찬희·임소영·김부영(2026),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평가 체계 마련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한주·은민수·김정훈·신영민(2025), 기본사회, 다반.

정균승(2025),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 프롬북스.

정준욱·한준희·소민경·최문실·이영선·이민기(2025), 2025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현우·손경민·나현수(2025), 2025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2), 2022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운영 연차보고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이철·이순미·정학성·박대식·안규미(2022), 인구감소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5. 3. 27.), "21개 부처·청이 머리를 맞대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올린다".

_____(2026. 6. 1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결과(2차 공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5. 26.), "선별적 보호 넘어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기본계획 정부 국정목표 반영".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보도자료(2025. 2. 4.), "서해해경청, 섬마을 응급환자 3명 긴급 이송".

세계일보(2026. 7. 18.), “정은경 장관 “청년소득 보장, 내년 시범사업 목표””.

〈통계 및 조사자료〉
교육부(각 연도),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_____(각 연도), 국내인구이동통계.
_____(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_____(2020), 농림어업총조사.
_____(2024), 도로포장률.
_____(각 월), 생활인구통계.
_____(각 연도), 인구총조사.
_____(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각 연도), 상수도 보급률.
국민건강보험공단(각 연도), 건강보험통계.
농림축산식품부(2026), 2025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 결과(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24),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_____(2025),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25),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각 연도),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하수도정보시스템(각 연도), 하수도 보급률.
한국교통안전공단(각 연도), 대중교통현황조사.
한국은행(각 연도), 국민계정.

〈온라인 자료〉
사회적기업 포털(https://www.seis.or.kr), 검색일: 2026. 7. 21.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https://www.korea.kr/govVision), 검색일: 2026. 7. 21.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운영현황(https://www.data.go.kr/data/15080745/fileData.do?recommendDataYn=Y), 2024년 12월 기준, 검색일: 2026. 7. 21.
Coop 협동조합(https://www.coop.go.kr), 검색일: 2026. 7. 21.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6. 10. 27. 법률 제22116호, 2026. 10. 27., 일부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7호, 2025. 4. 1., 일부개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40호, 2023. 8. 16., 제정).

KREI

www.krei.re.kr

농촌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고도화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로 601 T.1833-5500 F.061) 820-2211

95520

9 791161 498607

ISBN 979-11-6149-860-7